

# 교육개발

<http://www.kedi.re.kr>

Educational Development  
2004 1+2월호 Vol.31. No.1

- Project 특집기획 - 평생학습참여를 증진을 위한 문화운동
- Power Interview - "Input은 많은데 output이 적은 것, 이것이 우리교육의 핵심문제죠"  
- 장구현 상상경제연구소 소장
- 21세기 시대 교육의 과제와 전략 - 21세기 소독단상의 방법론, 교육이 그 답이다
- 현안문제 진단 - 새로운 인재상발달식 '고교대학연계전형'을 제안한다
- World Education - 미국, 독일, 영국, 중국

Jan ° Feb

# 和而不同으로 교육 신뢰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이중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본지 발행인, cjee@kedire.kr)

지난 2003년 교육계의 주요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불행히도 '갈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정보 시스템의 도입 여부를 놓고 빚어진 정부와 교직원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갈등, 某 교장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불거진 교직원 내의 갈등 등 2003년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갈등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비단 교육계 내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현대 경제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 노사간 갈등으로 한동안 마비되었고, 원전 핵폐기물 매립장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민과 정부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등 2003년 언론 보도는 갈등의 흔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람들을 평가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판단케 한다(T. 제퍼슨).” 이 말은 2004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곧 2003년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갈등으로 요약할 때 2004년 우리가 희망하고 노력해야 할 키워드는 和而不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급격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누적되어 왔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IMF 관리 체제라는 커다란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고, 구조 조정 등 그것을 경제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위화감과 계층간의 차이가 심화되는 문제점도 안게 되었습니다. 교육계 역시 이러한 데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예전에 비해 활발해진 다양한 이념과 지향점의 추구는 이해관계에 따른 복잡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서로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적당한' 갈등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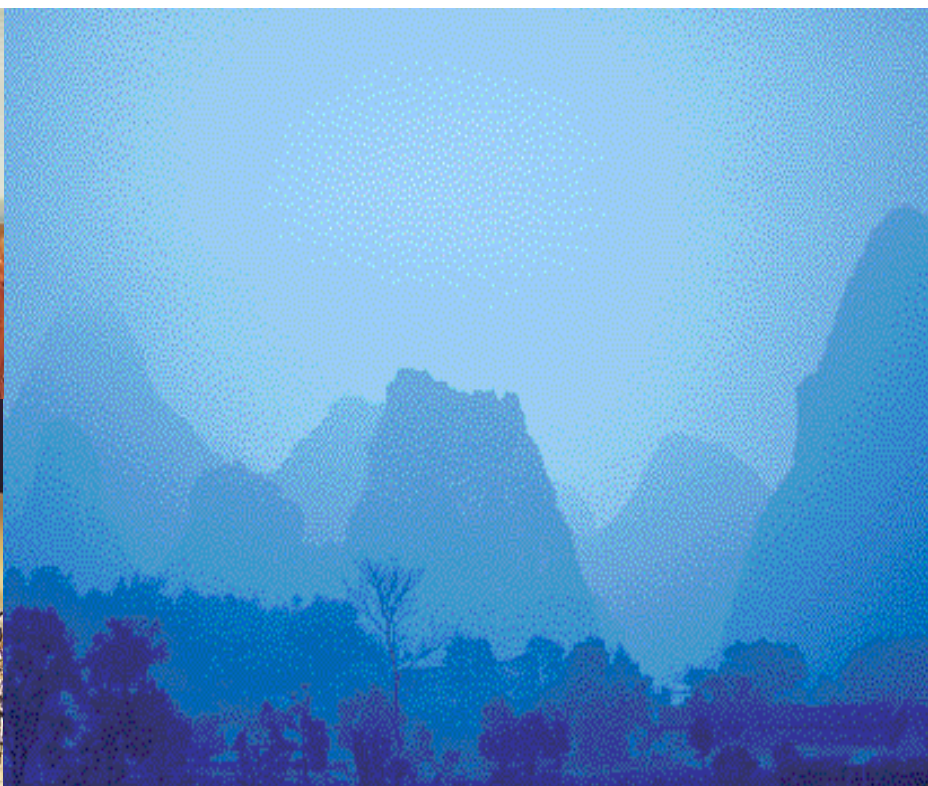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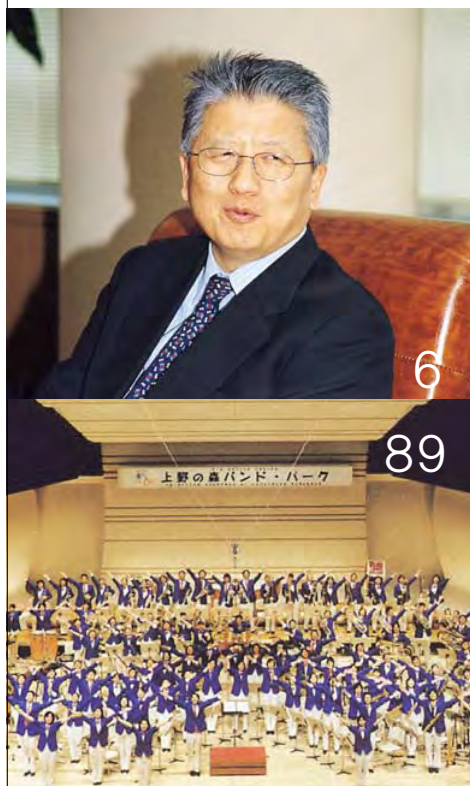
和而不同은 집단 구성원들의 관점, 생각, 그리고 논리가 그들이 속한 계층, 지역 그리고 집단에 따라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뜻을 모아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 아침을 맞은 2004년은 부디 갈등을 和而不同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우리 교육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CONTENTS

Educational Development

발행인 칼럼 - 和而不同으로 교육 신뢰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3
Power Interview	6
“input은 많은데 output은 적은 것, 이것이 우리교육의 핵심문제죠”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2만불 시대 교육의 과제와 전략	14
· 2만불 소득달성의 방법론, ‘교육’이 그 답이다	
World Education 세계의 교육	18
미국 - 미국 교사들은 부시의 NCLB를 실천할 생각이 없다	
독일 - 베를린 주의 극단적인 교육재정 삭감과 대학생들의 저항	
영국 - 영국의 학교장은 서글픈 CEO	
중국 - 요즘 중국 학생들의 화두, ‘법으로 하라’	
Project 특별기획 - 평생학습참여율 증진을 위한 문화운동	39
· OECD최하위는 한국의 평생학습	
·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한 동네를 필요로 한다”	



- 적어도 평생학습은 충분한 '축제' 가 될 수 있다
- 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사회의 믿을 만한 전야
- 영국 평생학습정책의 제3의 길을 찾아서

## 영재학교 살펴보기 ————— 70

- 이것이 한국정부가 세운 최초의 영재학교다

## 지금 세계 석학들은 ————— 76

독일 - “독일교육의 문제점이 한국에는 없어서 무척 놀랐습니다”

일본 - “2003년부터 일본고교는 자체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평준화 정책을 없앤 거죠”

## 세계의 학교 -명문이었던 일본 히비야 학교장은 고민이 많다 —————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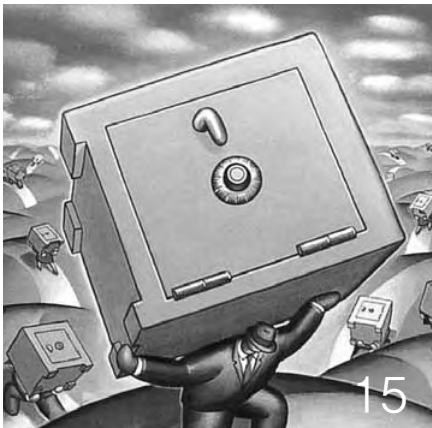
## 현안문제 진단 - 대입정책의 대안 탐색 ————— 90

- 새로운 인재선발방식, '고교대학연계전형' 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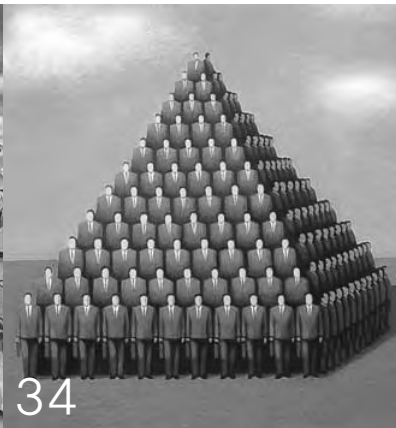
## Research Findings - 교육관련 세계의 연구 ————— 94

## 주간교육정책포럼 ————— 96

- 우리 교육은 격물치지(格物致知)로 되돌아가야 한다



15



34

40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이종재

홍보출판심의위원회 | 구자역 (위원장) 김양분 김창환 김홍원

박효정 심용기 현 주

홍보출판팀 | 채경은 김왕준 김태현 노근철 전지영 이정희

디자인 | 디자인리서치 02) 704-0492

home page | www.kedire.kr ISSN-291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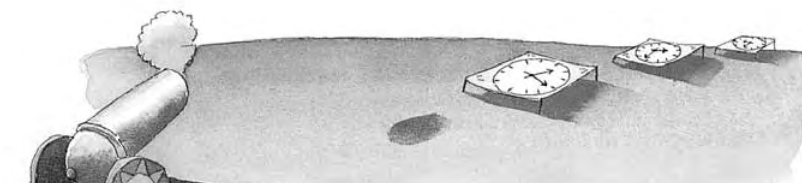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04년 1월 15일 발행 | 격월간 등록번호문화바 02718

등록변경 | 2001년 4월 11일 값 4,500원

구독문의 • 02) 3460-0235







“input은 많은데 output이 적은 것,  
이것이 우리교육의 핵심문제죠.”

- 대한민국 문제의 50%는 '교육'입니다. 경제문제조차도 열쇠는 '교육'이죠.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

대담 / 구자익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jogu@kedi.re.kr)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에 대한 투입물에 비해 산출률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입물은 세계적인 수준일 겁니다. 그러나 산출물의 질은 투입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Q.** 새해 벽두부터 교육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나오는 메일진을 받아보면서 경제계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삼성경제연구소하면, 민간부문에서 경제연구를 이끄는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A.** 극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점은 제가 교육에 대해선 비전문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하하. 저도 그렇고요.

**Q.**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려면 먼저 미래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Next Society』에서 미래사회의 모습을 새로운 인구구조, 지식중심사회, 새로운 보호주의 대두, 과학의 획기적 발전을 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서는 미래사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미래사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언제를 미래로 보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과거 1992년부터 5년간 21세기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2020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1세기 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미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20년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확실한 것은 인구 예측 정도이지 다른 요소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미래에 대한 견해는 크게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낙관론은 기술중심적인 사고일 것이고, 비관론은 자원고갈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에 미래학이라는 전공학과가 없는 이유도 바로 학문이라면 과학 또는 검증이 되어야 할 텐데, 미래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시각일 뿐이지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20년, 30년을 내다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면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A.**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5년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략 40년 가량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





단,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문이 제기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걱정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와 경영학, 특히 기업에서의 최대 관심사인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 북한의 문제, 특히 북한의 급격한 체제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와도 연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체제변화를 어떤 식으로 수용해 나갈 것인가'와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동북아 및 세계의 권력, 소위 힘의 균형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추세가 가장 큰 화두라고 보여집니다.

**Q.** 소장님께서서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의 둔화가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거군요.

**A.** 그렇습니다.

**Q.** 결국 성장잠재력의 문제는 그 중심이 되는 인적자

원과 연계되는 문제인 것 같군요. 그렇다면,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교육 문제는 사회 문제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는지요?

**A.** 저는 대한민국 문제의 50%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만 해결된다면 대한민국 문제는 반 이상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Q.** 왜 교육이 우리나라 문제의 50%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과거 1965년부터 1990년까지는 거의 7~8%의 경제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제성장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했고 자본투입이 많았다는 성장요인이 있었습니다.

성장요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인구, 자본,

인적자본(즉, 소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축적된 인간의 힘) 그리고 생산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와 '자본' 요인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앞으로 인구가 정체되어 갈 것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구는 단순노동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인적자본'과 '생산성' 두 가지 측면에서의 성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성 또한 인적자본의 성장이 밑받침되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5%대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인적자본의 기여 없이는 불가능하고, 인적자본과 생산성이 3~4%대의 성장에 기여를 해야만, 꾸준히 5%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5%대 성장을 해야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적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교육을 소리 높여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A.**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에 대한 투입률에 비해 산출률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교육시스템을 투입과 산출의 시스템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문제는 GDP 대비 13.4%를 공교육비를 비롯한 사교육비, 과외비 등에 투입하면서 그것을 통해 산출되는 산출물의 질은 투입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아마 교육에 대한 투입률은 세계적인 수준일 겁니다. 다른 부분의 지출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국방비에 3%를 쓰고, 복지비에는 10%도 미치지 못하는 투입을 하는 것에 비하면, 교육비에 13%대의 지출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길러낸 인재는 어느 수준인가? 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교육에 투입하면서도, 그러한 자원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셈입니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어떤 점에서 가장 실패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A.**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탁월한 인재를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좀더 기본적인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배출해내지 못하는 점에서 실패라고 보는 거지요. 그 중에서 저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내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Q. 교육의 평등과 수월성으로 압축될 수 있는 고교평준화 문제와 자립형 사립고, 그리고 영재교육에 대한 갈등과 의견이 분분한데요, 고등학교 교육을 경쟁력있는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고등학교 교육의 혁신은 한마디로 평준화를 차별화된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등 다양하고, 또 별다른 재주가 없는 사람도 있으나 이러한 사람은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한 채, 이 모든 사람을 하나의 틀에 넣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선택의 자유를 봉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준화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끌어내리지만, 동시에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게 교육받을 자유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은 인기영합적인 정부 정책의 결과이지 결코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평준화를 완전히 폐기하기 어렵다면 우선 사립학교부터 폐기하고 공립학교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이미 완전히 실패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평준화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어집이며,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Q.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A.** 적어도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 일부 학교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는 국민들에게 보편타당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국가의 책임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이 부분은 공립학교가 담당하고 사립학교는 영재교육 또는 외국어 교육 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립학교는 90% 이상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하기에 자유롭게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A.** 아마도 등록금 규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들이 현재는 자생력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Q. 글로벌화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교육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교육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A.** 제 답은 분명합니다. 개방입니다. 개방해도 지금 우리가 우려하듯이 한국교육이 외국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어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경우는 어떻게 외국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까? 몇몇 학교는 들어오겠지만, 그 학교들이 들어와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학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수준에서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일류대학인 하버드가 외국에 캠퍼스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개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좋은 점은 우리 교육이 못하고 있는 우수인재 양성의 일부를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조기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왜 겁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거든요.

교육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건 기우라고 봐요. 1988년에 유통시장 개방 당시 유통시장을 개방하면 다 망한다고 했지만, 세계 넘버원이라고 불리는 월마트가 들어와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세계 이마트가 더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Q.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대학교육의 문제는 자원 부족과 지배구조의 문제로 집약됩니다. 현재의 대학은 너무나 많은 학생과 부족한 교수와 시설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 비율은 이제 겨우 1980년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 교육의 질은 지난 20여 년간 정체되어 왔습니다. 대학은 지금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질의 획기적인 개선인데, 여기에는 정원의 축소와 교육비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소위 연구 중심대학들(전국에 10여 개 정도)은 정원을 줄이고 등록금을 올리던가, 아니면 정부 보조를 늘려서 질 위주의 교육과 대학원 중심 교육으로 선택적으로 가야 한다고



대한민국 문제의 50%는 교육입니다. 교육문제만 해결된다면 대한민국 문제는 반 이상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인적자본'과 '생산성' 두 가지 측면에서의 성장일 것입니다. 인적자본과 생산성이 3~4%대의 성장에 기여를 해야만, 꾸준히 5%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5%대 성장을 해야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대학들은 교육 또는 산학협동 등 특화해서 나아가고, 교수의 평가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원이 차지 않는 일부 대학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 모든 개혁을 하려면 대학의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수가 총장을 뽑는 제도가 바뀌어야 하며, 단과대학이 학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대학간의 경쟁이 더 가시화되어야 하며, 교수에 대한 업적평가가 더 강화되고 거기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의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인적자원부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 지금까지는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 대학으로 나아가려 했는데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학협동중심대학 3가지로 나눠 대학마다의 성격을 나누려 하는 것으로 압니다. 듣기로는 열대여섯 대학만 연구중심대학으로 하고 다른 대학들은 그들의 성격을 정해서 자기들이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는 방향이 기존의 무작위의 대학 투자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지방대학은 전쟁 중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올해만 보아도 입학 지원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대학들의 구조조정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통폐합이죠. 부분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면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균형발전이라는 인상은 좋지만, 과연 그것이 자원낭비가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대학에 대한 자원투입은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하고요, 또한 경쟁의 원칙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에도 일부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있고 연구업적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거점대학을 만들어 산업과 링크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사회 일각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 의대, 변호사, 공무원 시험 등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장래 직업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1997년의 경제 위기 이후에 사오정, 오륙도, 삼팔선 등의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인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공대가 기피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는 것이기에, 의대가 인기가 있고 우수 인재가 의대로 가면 의대를 새로운 산업의 동력으로 삼으면 됩니다. 의대 졸업생이 모두 의사가 될 필요는 없으며, 졸업생 중 일부는 연구직종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직업도 택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유망산업은 생명공학이라고 합니다. 의대 인력을 바이오 및 기타 관련 공학 연구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학부모 하나하나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낼까, 내 자식을 조기 유학을 보낼까 말까 하는 등의 결정은 모든 가정에서 가장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거나 역류하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되고 물꼬를 돌리는 그러한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세계에 공부를 더하겠다고 과외하는 것을 규제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Q. 기업과 교육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21세기 기업의 성공키워드로 거론되는 것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간형입니다. 기업에서 창조적인 인간형이라고 하면 어떤 인간형을 말하는 것인가요?**

**A.** 학교에서는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창의적인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의 요인을 간추리면 대략 두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 하나는 '왜 충분한 기술을 갖춘 인재를 배출 못하느냐'예요. 다

시 말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적절히 배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들을 1~2년 정도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하는 점이지요.

그런데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양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수준의 불합치(mismatch) 문제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고학력자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대졸 출신이 배출되기 때문에, 고졸 정도의 학력이 필요한 일자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중소기업자들은 지금도 '무슨 실업이냐, 우린 사람이 없어서 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자리는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게 마련이구요. 그러한 결과 전체적인 실업률은 3.5% 수준이지만, 청년 실업은 그것의 두 배에 이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대학졸업생이 많은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모든 가정이 자식을 대학에 보내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학설립을 남발하고 대학정원을 너무 많이 늘린 교육부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이 길러 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아직도 학부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학부 교육은 폭넓은 교양교육과 기초교육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당장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 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재는 전문대학원에서 길러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원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현재 전문대학원으로 있는 경영대학원, 법무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등 전문가를 키워내는 대학원들이 아직도 야간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이 부실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키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제도적으로 산업계의 수요와 불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은 최소한 1년간은 신입직원을 가르쳐야 하



고, 그것이 청년실업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에서는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을 데려다가 2년 내지 3년을 훈련시켜야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2~3년은 연봉대비 손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중소기업들이 요즘 청년을 고용하지 않고 유경험자를 고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상당 부분은 기업이기주의 같아요. 어느 일정 부분은 기업이 훈련을 시켜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대학에 요구하니까요. 대학교육이라는 것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교육이지, 당장에 쓸모 있는 실무직업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Q.** 미국의 과학기술평론가인 존 브룩만은 그의 저서 『디지털 시대의 파워엘리트』에서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아메리카온라인을 설립한 스티브제이스, 루터커 자바소프트 사장 등 33명을 디제라티 1세대로 소개했습니다. 아마 이런 1세대 디제라티도 다음 세대에게는 금방 따라잡힐 것입니다. 이런 디제라티는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겠지요?

**A.** 그렇습니다.

**Q.** 이러한 디제라티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A.** 제가 볼 때는 우선 학교에서 디지털에 대한 마인드와 지식을 전수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지식과 마인드를 기초로 해서 정보사회의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야 하겠지요.

**Q.** 마지막으로 삼성의 인재양성에 대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인재양성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핵심은 무엇인지요?

**A.** 삼성 인력양성시스템의 핵심은 평가시스템입니다. 우리 연구소도 그렇지만 특히 IMF 이후 공정한 업적평가와 그것에 따른 보상제도가 핵심이지요.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게, 지도층에서 방향과 전략을 잘 잡아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직원 구성원들이 알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평가제도 및 보상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강화입니다. 물론 인력개발원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지원됩니다.

최근에 강조되는 것이 소위 슈퍼급 인재인데요. 특히 우리 회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인데요, 삼성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아주 제한적으로 그 분야의 지식을 갖춘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분야에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초우수인재의 경우에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삼성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



2만불 시대, 교육의 과제와 전략

# 2만불 소득달성의 방법론, ‘교육’이 그 답이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교육과제

이중화(고려대학교 교수, jongwha@korea.ac.kr)



## 한국경제는

지난 40년간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1인당 실질소득의 성장률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연평균 8%에 달했다. 그 결과 2000년의 1인당 소득은 그 실질 가치로 계산하면, 1960년의 20배에 달하는 증가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보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들 부모세대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결과 1960년에는 미국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2000년에는 미국의 4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우리가 이룩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모든 성과들이 이러한 놀라운 경제성장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현 정부가 구호로 내세우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얼마나 빠른 시일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한국경제가 연평균 7%로 성장한다면 1인당 실질소득이 2배로 되는 데 10년이 걸린다. 하지만 만일 연간 3%대로 성장한다면 앞으로 1인당 소득이 지금의 2배 수준인 2만불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물론 물가도 상승하고 환율도 변화하기 때문에 명목상의 2만불 소득은 매우 빠른 시일에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모두의 실질 생활수준이 지금 시점에서 소득 2만불인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1995년 이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8%가 넘는 사상유례 없는 고도성장을 하던 일본 경제가 90년대에는 급격히 추락해 성장률이 1%에 머무르고 있듯이 한국도 언제든지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현재의 “따라잡기” 경제 성장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다양한 모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최근의 경제이론은 한국의 고도성장을 후진국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자본량과 기술 수준의 격차를 점점 줄여 가면서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수렴(convergence)” 성장 또는 “따라잡기(catch-up)” 성장의 이론으로 설명한다. 경제 성장은 한 국가의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1인당 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들이 증가해야 한다. 먼저 노동자 1인당 물적 자본량이 증가해야 한다.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은 기계, 건물, 토지 등을 포함한다. 또 개별 노동자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도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인적 자본은 근로자들이 교육과 훈련,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축적에 의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체로 사용되는 기술(technology) 수준의 증가도 1인당 생산량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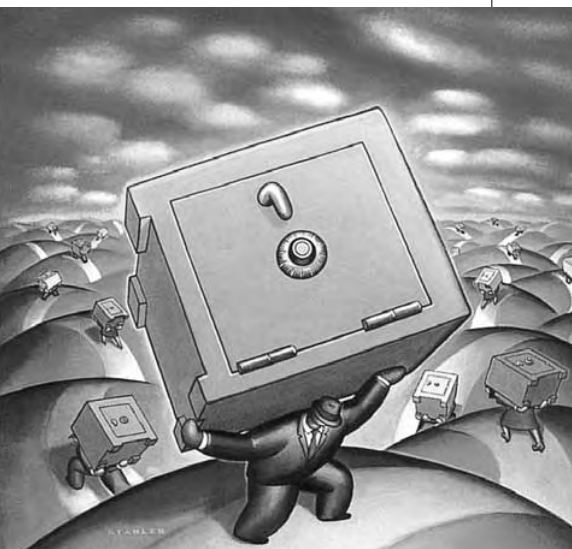
그런데 한 국가가 점차 성장하면서 결국 “따라잡기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선진국의 소득 수준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점점 그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기 힘들어지고 성장률은 낮아진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을 축적해 가면 갈수록 1인당 자본의 투입 증가로 늘어나는 생산량의 증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흔히 수확 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이라고 불리는 이 경험적인 법칙은 자본이 전혀 없을 때는 초기투자의 수익이 매우 높으나 자본이 많아지면서 점차 투자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를 보면 물적 자본의 투자 수익률은 90년대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의 수익률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둘째로, 기술 진보의 경우에서도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모방해 기술을 진보시켜 나가는 것이 점차 힘들어진다. 선진 기술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과거처럼 단순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고급 기술을 따라잡아야 하니까 힘이 더 든다. 스포츠에서 아마추어 수준에서 잘하는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는 있으나 세계적인 프로 선수의 수준을 따라잡는 것은 매우 힘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반세기의 초고속 성장의 결과로 이제 후발국의 이점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자본의 과도한 축적으로 투자생산성은 낮아졌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서 후발국으로서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 모방을 손쉽게 하던 이점이 사라졌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많은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결국에는 성장률이 2~3%대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점차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성장률의 하락이 가능한 한 천천히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 앞으로 5~6%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건실하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를 계속 줄여가면서 세계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을 더 한층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적 자본이다. 인적 자본은 그 자체가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생산요소일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도화되는 선진기술을 더욱 빨리 따라잡고 또 한편으로는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현재의 한국 경제의 발전 단계에서 우수한 인적 자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고도 성장의 기저엔 높은 교육열이 있었다

지난 40년간 한국의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육 부문은 크게 팽창했으며 이를 통해 인적 자본의 양 및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진보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인적 자본을 빠르게 증가시켰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도 경제 성





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중등학교와 대학교 진학률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육받은 인력의 공급이 크게 확대되었다. 1960년에는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의 44%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단지 20%만이 중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자가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80%가 넘고, 대학교육 이수자의 비율만도 25%가 넘는 놀라운 성취를 보였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과와 더불어 초등, 중등학교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성취도를 유지했다. 흔히 교육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된 시험에서의 성적으로 비교한다. 수학, 과학의 국제시험의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항상 최상위권에 속했다.

특히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공교육 지출에도 불구하고 교육 부분에서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교육에 대한 공공 재원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었다. 교육 수준이 곧 높은 사회적 지위로 인식되는 유교사회의 전통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기회의 확대와 미래의 높은 소득 전망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클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요인으로 학생-교사 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반면에 교사들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해 온 교육 투자의 배분정책을 들 수 있다. 학생-교사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적은 공교육 투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취학률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교사들의 급여는 우수한 인력들이 교직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즉 한국의 교육정책은 좀더 능력있는 교사가 좀더 많은 학생을 맡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학생 교사 비율을 줄이는 것보다는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전략은 주어진 재원의 제약 아래에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전략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창의적 인재 없이 혁신기술은 힘들다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한 교육부문의 기여를 통해 한국경제가 지난 40년간의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고속 성장의 결과 이제 후발국의 이점이 사라진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부문도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더 높은 질적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은 우수한 인적 자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과거처럼 주어진 기술을 단순히 습득하는 수준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세계 일류의 기술을 직접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 중등 학교부터 좀 더 학생들의 창의성을 북돋우는 교육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토론식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학생-교사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투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 우수한 인재들을 교직으로 유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필요하다. 한 예로 지방 국립대의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자기 후배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간의 경쟁을 높이고

교사들에게 수업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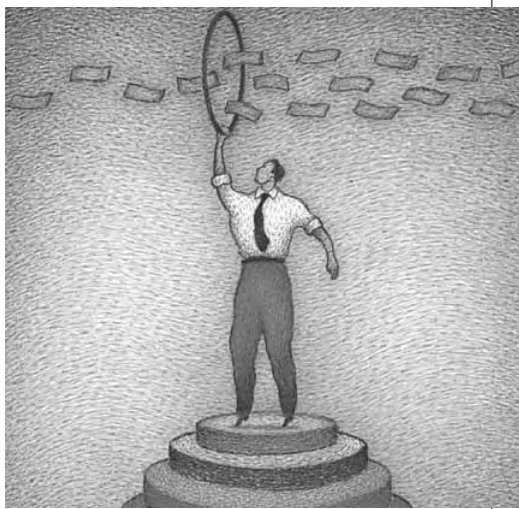
우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만 한다. 이제 대학 진학률이 75%가 넘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술, 제도, 환경의 빠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 대학이 제대로 키우고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류대학의 질적 수준은 세계 이류, 삼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최근 국립대의 독립 법인화를 통해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양대 명문인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을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키우기 위해 집중지원하고 대학 교수들의 연봉도 성과급으로 하는 개혁을 진행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학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한국 대학들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높이기 위한 과감한 사회적 투자와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나가고 과감한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부실한 기업이 도산하듯이 부실한 대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한국 교육의 또 다른 큰 과제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성 대졸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대졸자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졸업자들이 적절한 산업에 잘 배치되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업, 금융부문 등에서 발전되고 있는 최근의 기술들은 여성인력들이 남성 못지 않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 교육 정책의 결정과정에 문제가 많다. 교육에 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기성세대는 자신이 받은 교육의 경험에서 또 자기 자녀의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임기 중에 유권자들에게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들에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정한 분배 차원에서 물론 중요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인기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나친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들은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 경제의 개방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역할이 급격히 변화해 나갈 때 이러한 변화를 정부가 즉각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교사, 교육 시설을 확보하고 더 높은 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하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이 잡혀야만 한다.

한국경제가 지난 40년간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한 교육 부문의 기여가 컸다. 이제 우리 경제가 또다시 도약해 빠른 시일에 2만불 소득을 달성하고 선진국가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 교육의 성과에 달려 있다. 교육의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 도약을 위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20]





부시 대통령이 희망을 실천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호소하는  
NCLB 정책은 학생들에게 좀더 높은 학력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모든 학생이 배울 권리가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신념과 학습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가정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 차를  
좁히고 미국 학생 전반에 걸쳐 학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World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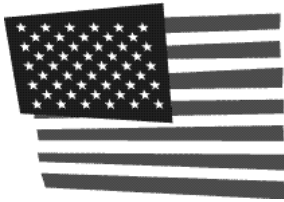




# 미국 교사들은 부시의 NCLB를 실천할 생각이 없다

-연방 교육법, “No Child Left Behind”(I)

김영주 | 시카고 통신원, ykim30@uic.edu



NCLB의 영향력은 무엇보다 집중적 개혁의 대상으로 꼽히는 학교는 타이틀 원(Title I) 학교다. 타이틀 원 자금이란 저소득층이나 이민 자녀, 전통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인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연방 재정을 말한다. 이들 학교의 저조한 성적은 미국 교육계의 오랜 난제가 되어왔다.



그 시작부터 교육계 전체를 들썩이게 했던 부시 행정부의 교육법안 “No Child Left Behind(NCLB)”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육협회인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이 연방 법안에 대해 정면 도전을 선포하고 NCLB에 대한 반대 운동 전개를 펼치고 있는 한편, 오리건 주지사 쿨롱고스키(Kulongoski)는 이 법안이 교육계를 앓먹이는 꼴탕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하고 나섰다.

또한 최근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는 교육 행정가들 상당수가 NCLB는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만 높게 잡은 실천 가능성이 희박한 법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 법안이 교육적으로 무엇이 이로운가에 역점을 두었다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계산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설립 취지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개발』 세계의 교육·미국편에서는 이번 호(1·2월호)와 다음 호(3·4월호)에 걸쳐 “No Child Left Behind”에서 제시된 교육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해 쏟아지는 교육계의 소리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NCLB, ‘낙오자 없는 교육법’의 첫대상은 소외계층

부시 행정부는 2001년에 들어서자마자 혁신적 교육을 선언하며 1965년 제정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단행하고 NCLB안을 설립했다. 그리고 다음해 NCLB는 공화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월 8일 오하이오의 해밀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이 법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을 다스리는 미국의 연방 교육법이 되었다. 단 한 학생의 낙오자도 없는 교육이라는 모토를 내건 NCLB는 그동안 미국 공교육,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몰려 있는 학교들이 보이는 저조한 성적을 개탄하며 연방정부가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2012~2013학년도까지 모든 학생이 각 주에서 세운 학력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못박고 있는 NCLB의 영향력은 미국 공립 초·중등 학교 전반에 미치지 만, 무엇보다 집중적 개혁의 대상으로 꼽히는 학교는 타이틀 원(Title I) 학교다. 타이틀 원 학교란 연방 정부로부터 타이틀 원 자금을 받는 학교를 말하는데, 타이틀 원 자금이란 저소득층이나 이민 자녀, 그 외에 여러 가지 교육기회나 결과에 있어 전통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인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 하는 연방 재정을 말한다.

미국에서 학생의 학업 성적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타이틀 원 지원 대상자가 몰린 도시의 가난한 학교들의 성취도는 부유층이 거주 하는 지역의 학교에 비해서 낮을 뿐 아니라 매년 적지 않은 학생이 각 학년에서 목표하는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 학교의 저조한 성적은 미국 교육계의 오랜 난제가 되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분량만 해도 1,100여 장에 이르는 부시 행정부 개정판 연방 초·중등 교육법인 NCLB는 낙오자 없는 교육을 표명하며 타이틀 원 학교의 성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

의 자유 부여, 교사의 자질 확보 등을 정책적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

#### 교육적 책무정책, 어카운터빌리티

성취도 향상과 수준 높은 학력이라는 NCLB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내세운 첫 번째 전략은 학생의 학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는 어카운터빌리티다. 연방 교육부는 교육 결과에 대한 책임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1965년 초·중등 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빈곤 지역의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습 성취도 차가 여전하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학생의 60퍼센트가 읽기에서 기준 미달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미국 학생들이 국제 학



력 고사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넷째, 과거 연방 교육 정책은 그 초점이 뚜렷하지 못했고, 그 동안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학생의 출신 배경에 따른 성취도 차이 문제,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는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이 어카운터빌리티이다.

부시 대통령이 희망을 실천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호소하는 이 정책은 학생들에게 좀더 높은 학력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모든 학생이 배울 권리가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신념과 학습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가정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차를 좁히고 미국 학생 전반에 걸쳐 학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NCLB가 추진하는 어카운터빌리티는 시험을 통해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며, 학교, 교사, 학생에게 시험 성적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NCLB, 연방 초·중등 교육법 아래 각 주(state)는 각급 학교가 교육활동의 지침이 되는 학력 표준을 마련하고, 공립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 자체적으로 학력고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클린턴 행정부가 마련한 Goal 200 : Educate America Act에 의거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사이에 한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사이에 한번,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 각각 한번씩 보





있던 읽기와 수학 표준 학력 시험을 2005~2006학년도부터는 NCLB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는 매년, 고등학교의 경우는 3년 재학 기간 중 적어도 한 번 이상 치르게 된다. 과학 교과와 경우에는 2007~2008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한번,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에 한번, 고등학교 1학년에 3학년 사이에 한번 의무적으로 주 학력 고사가 실시된다. 또, 2002~2003학년도부터는 이민 1세로 영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거나 이민 2세대라도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 영어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은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실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2002~2003학년도부터는 평가기관인 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에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읽기와 수학 과목에 대한 표본 검사를 실시

하게 된다. 이것은 연방 정부 차원의 표본 검사로 국가 수준에서 전국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확보할 뿐 아니라 주(state)들 사이의 학업 성적을 비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NAEP가 실시하는 표본검사와 영어 유창성 평가를 제외한 다른 모든 표준학력고사는 모든 학생이 그 대상이 되는데, 시험 결과는 인종, 성별, 가정 경제 수준, 영어 수준, 장애 여부 등 학생 집단의 특성에 따라 10개의 세부 그룹으로 나뉘어 분석된다. 시험 결과 만약 한 학교의 학생 세부 그룹 중 단 하나의 그룹이라도 주에서 정한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그 학교는 주에서 정한 표준 학력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매년 일정 수준 이상 향상도를 보이지 않는 학교 역시 실패 학교로 낙인찍히게 된다. 만약 학교가 2년 연속 주에서 실시하는 학력고사에서 일정 기준점을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 학교는 향상이 요망되는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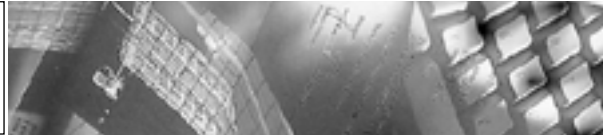
교로 분류되는데, 학업 향상 요망 학교로 분류된 학교는 그로부터 2년 내에 주에서 정해 놓은 연간 학업 향상 목표치 이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려야 하며, 성적 부진이 계속될 경우 학교의 교직원과 교육과정을 교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자체에 대한 전체적 구조조정을 맞게 된다.

#### 학부모의 학교 선택정책

성적 향상 요망 학교로 지목된 학교는 학업 성적 향상 계획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활동과 노력을 하도록 요구되며, 주와 학구는 이에 필요한 각종 기술적 자원적 지원을 하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학생들에게는 개인 지도나 기타 보충 교습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동시에 성적 향상 요망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재학생에게는 성적이 양호한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허용된다.

NCLB하에서 각 학교는 학부모에게 매년 학교의 교육활동 상황과 그 성과를 통지해야 한다. 학부모에게 발송되는 이 교육 성과 보고서에는 표준학력고사 결과와 교사의 자질, 그 외에 졸업률이나 기타 각 주나 학구에서 교육 성취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항목들이 포함된다.

표준학력고사 결과는 자녀 개인의 성적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구간 성적 비교를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학구가 주 전체 내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가 명



시된다. 교사 자질의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NCLB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교사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또 교원 실태를 다른 학구와 학교의 교원 자질 상황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표준학력고사 결과 성적 향상 요망 학교로 분류된 학교는 이 사실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학부모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에는 본 학교가 주에서 정한 학업 성취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원하는 경우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킬 수 있는 옵션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성적 향상 요망 학교 혹은 실패 학교로 규정되어 사립(종교학교 포함)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사립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는 수업료는 공교육 예산에서 지급된다.

### 교사의 자질

앞서말한 어카운터빌리티와 학부모의 학교 선택이 시험 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라면 교사의 자질은 수업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NCLB는 교사의 자질은 학생의 교육 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우수한 교원 확보 역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타이틀 원 학교는 2002~2003학년도까지 영어, 수학, 과학, 읽기와 언어 기술 등



소위 주요 교과라 일컬어지는 과목의 교사는 주에서 발급한 교원 자격증이 없거나 해당 과목을 전공하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NCLB가 제시하는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 2005~2006학년도까지는 타이틀 원 학교 교사 전원과 연방정부의 교사 교육 자금인 타이틀 투(Title II) 지원받는 주나 학구의 모든 교원이 자질에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NCLB의 주 학력 표준에 기초한 교육 개혁은 클린턴 행정부가 이끌어온 교육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력 향상이나 어카운터빌리티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이슈가 되어왔고, 많은 주가 10여 년 전부터 표준학력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전국의 공립학교 학생에게 표준학력교사를 치르도록 하고 학교가 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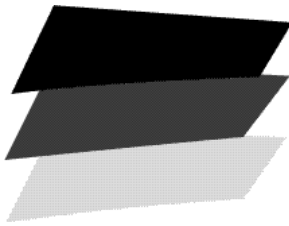
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어카운터빌리티의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연방 교육법 속에 규정하기는 이번 NCLB가 처음이다. 더 나아가 NCLB는 공교육에 있어 연방 정부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립하게 할 뿐 아니라 역대 연방 초·중 교육법상 연방 정부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NCLB를 두고 미국 학생의 성취도 향상과 학교 문화에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혁신적 법안이며 이를 통해 미국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교육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보이는 이런 자신감에 대해 귀기울여 들을 가치 없는 허풍이라며 매도하고, NCLB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비판의 소리와 NCLB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개발 세계의 교육 미국편 3·4월 호에서 뉴욕 소재 여론 연구기관인 퍼블릭 아젠다(Public Agenda)가 전국의 교장과 지역 장학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NCLB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와 NCLB에 대해 반기를 들고 법정 소송을 고려중인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그리고 교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10]



## 베를린 주의 극단적인 교육재정삭감과 대학생들의 저항

김종기 | 베를린 통신원, ki1325@hanmail.net



현재 독일의 대학교육대강법에는 첫째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 법의 해당조항 입법을 주도한 연방 교육부장관 불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사민당과 녹색당 내에서조차 공공연히 대학수업료 징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학수업료를 둘러싼 대립은 단지...

지난 11월 초, 베를린 주 정부가 교육재정의 극단적인 삭감으로 요약할 수 있는 대학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베를린의 대학생들이 거센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특히 11월 22일(토)에는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베를린 시청 앞에 운집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11월 26일 훔볼트 대학교 본관 뒤 교정에서 학생총회를 갖은 뒤 시위와 동맹휴업 및 건물 점거 및 홍보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의했고, 이어서 베를린 주 과학부장관 토마스 플리럴(Thomas Flierl, 민사당)과 재정부장관 사라친(Thilo Sarazin, 사민당)의 집무실을 점거했다. 또한 11월 27일(목)에는 포츠담 광장에서 집결해 브란덴부르크 문을 거쳐 베를린 시청 앞까지 행진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수는 경찰 추산으로 2만 명이 넘었는데, 대학교의 교직원들까지 가세했으며, 시위가 조직되는 동안 대학교의 총장들은 학생들의 행동에 강한 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 대학교육재정삭감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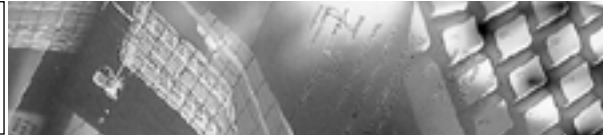
현재 베를린 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계획에서 핵심적인 것은 오는 2004년과 2005년 두 해에 걸쳐 5,400만 유

로, 나아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다시 7,500만 유로의 재정지출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교수 인원의 감축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계획에 따르면, 2009년까지 베를린 자유대학교는 전체 교수 364명 중 82명,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는 383명 중 90명, 베를린 공과대학교는 335명 중 80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교수와 학생들의 지적에 따르면, 이미 베를린의 대학교들에서는 통일이 되고 난 이후부터 극단적 교수 인원의 감축이 있었다. 예를 들어 베를린 공과대학교의 교수는 1992년에 629명이었는데, 현재 335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상황은 베를린 자유대학교나 훔볼트 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지난 10년 간 베를린의 대학교들에서 교수 인원이 감축된 비율은 40%를 넘어선다. 이러한 교수 인원의 축소는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낮추고, 전반적으로 연구와 학업 조건을 악화시켰다. 2003년 11월 23일자 일간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지에 따르면, 상하이 대학의 세계 대학 순위 발표에서 베를린 자유대학교는 95위이며,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는 무려 152위에서 200위에 이른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총장 디터 렌





첸(Dieter Lenzen)에 따르면, 베를린 자유 대학교가 그나마 나은 것은 가능한 한 많은 학과 및 학부를 존속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주 정부는 또 다른 절감조치로 1년에 조교 인원의 1/5, 세미나 보조원(Tutor)의 1/2을 줄이고자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조치가 직접적으로 대학생들의 학업 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 전통적으로 독일 대학에서 조교와 세미나 보조원은 강의나 세미나에서 신입생이나 희망 학생들이 해당 강좌를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강좌의 수강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가르쳐주고 기초 텍스트를 같이 읽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이를 통해 대개 상급학년이나 박사과정 학생인 세미나 보조원 자신도 일정한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학업을 하는 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에게 학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학업 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우려이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전체 학부의 신입생 등록 동결을 계획하고 있다. 전반적인 대학 재정의 절감 조치는 결국 이와 같이 베를린의 대학교에서 당분간 신입생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베를린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들과 교육관계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신입생의

입학허가 동결은 궁극적으로 베를린에 고급인력의 유입을 차단시켜 베를린의 미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은밀하면서도 또한 공공연하게 거론되어 온 수업료 도입이 교육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업료 도입 계획의 골자는 소위 장기 학생(Langzeitstudierende)에 대해 학기당 500 유로의 수업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 정부는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를 대학교의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고 직접 베를린 주의 재정으로 끌어들이

고자 계획하고 있다. 베를린의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해 가속되는 대학 재정의 악화로 인해 아직 무상교육의 골간을 유지하는 독일 대학교육체제에서 베를린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및 니더작센 주와 함께 한 학기당 50유로 가량의 행정 수수료를 이미 받고 있다.<sup>1)</sup> 그리고 더 나아가 베를린 대학교의 총장들은 수업료의 도입을 통해 대학재정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운영의 차원에서 수업료 도입 자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학생들에게서 징수하는 수업료를 베를린 주 정부가 주 재정의 일환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교육구조조정 계획에는 향후의 신입생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수업료의 징수는 일종의 수업 계좌제로 표현할 수 있는 크레딧 포인트 체계와 연계되어 도입된다. 그 체계에 따르면, 신입생들은 전체 학점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20% 많은 보너스 크레딧 포인트를 받는다. 학생들은 매 학기 기본 강좌보다 더 적은 강좌를 들었다 하더라도 매 학기 일정량의 포인트가 자신들의 계좌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이 20%라는 여분의 포인트를 다른 강좌, 후속 강좌 또는 연기된 강좌를 듣는 데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첫 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자신들의 학기



수업시간을 각 경우에 따라 칩 카드를 통해 상세히 계산해야 한다. 자신들의 계좌에 들어 있는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면 자비로 포인트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 때에 한 학기의 기본 강좌를 이수하는 데 필요한 포인트는 약 500유로에 해당한다. 이러한 체계가 도입되면 그것은 장차 현재의 재학생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어떤 형태의 수업료라도 한번 도입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우려이다.

### 베를린의 경제적 어려움과 악화되는 공공 복지

베를린은 분단 시기와 그 이전부터 국왕의 거주지 또는 수도로서 풍요로운 문화 자산을 지녀 왔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자산과 분단 시기에 체험한 동·서 유럽의 동시적 경험으로 인해 베를린은 유럽의 중심에서 동서 유럽의 문화적·경제적 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베를린은 문화적 자산의 풍요로움과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부러움을 살 만한 지위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난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연방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현재 베를린 주의 재정적자는 2001년에 52억 3,700만 유로, 2002년에 49억 4,300만 유로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채는 2002년 후반기 기준으

로 130억 유로를 넘어 브레멘 주 다음으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악화된 베를린 주의 재정 상태 때문에 베를린 주 정부는 재정 긴축 정책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려 하지만, 독일 경제 연구소(DIW)의 보고에 따르면 베를린 주의 재정이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2005년까지 최소한 170억 유로의 연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베를린 주의 재정 상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급속히 나빠졌는데, 그 첫째 원인은 베를린의 경제 전망에 대한 잘못된 평가 때문에 통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사라지게 된 데 있었다. 여기에도 통일 이후 베를린이 동베를린까지 포괄하게 됨으로써 늘어난 행정 관리 비용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1995년에 베를린 주의 재정 결손은 약 55억 유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 사이에 주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이는 정책을 통해 재정 결손을 줄이려 노력했고, 그 결과 1999년까지 재정 적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2000년부터 다시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해 2001년 다시 52억 유로를 넘어서게 되었다.<sup>2)</sup>

이렇게 하여 베를린은 2001년 현재 580억 유로의 누적된 빚이 있는데, 이것은 독일이 그 해 12월 국가 전체에서 수출로 벌어들인 480억 유로를 훨씬 넘는 액수이다.<sup>3)</sup>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베를린 주 정부는

예를 들어 2003년 여름 학기부터 무상으로 지급되던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대금조차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렸고, 문화 방면에서도 많은 음악가, 배우들은 실직, 수입 감소의 위협에 몰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오페라의 위기, 박물관의 위기, 극장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베를린 주 정부는 유치원 납입금을 인상했고, 유치원 교사 정원을 축소했으며, 시립 수영장, 청소년 회관 등 공공복지시설 운영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공공 영역에서 경찰관, 교사, 사회복지사 등 잘 양성된 노동인력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사회복지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독일의 대학교육대강법(Hochschulrahmengesetz)에는 첫째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 법의 해당조항 입법을 주도한 연방 교육부장관 불만(Edelgard Bulmahn, 시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시민당과 녹색당 내에서조차 공공연히 대학수업료 징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학수업료를 둘러싼 대립은 단지 베를린 대학교들만의 문제가 독일 대학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베를린은 대학생들에게 이미 한 학기에 50유로의 행정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베를린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학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삭감



하고 대학 재정과 주 재정의 일부분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다.

**계속되는 학생들의 저항과 완강한 주 정부**

현재 베를린의 대학생들은 주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위와 다양한 방식의 저항을 벌여나가고 있다. 현재 학생들이 수업거부의 일환으로 중요건물을 계속 봉쇄하고 있어 많은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학생들은 곳곳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베를린 Zoo역 구내에서 공개 강좌를 열거나, 대형할인매장인 이케아(IKEA) 매장에서 “0유로 대신 500유로”라는 가격표와 “2004년부터 새로 7,500만 유로 할인”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거나 나아가 플래카드를 들고 슈프레(Spree) 강으로 뛰어들고, 나아가 Zoo역 주변의 중심지 황제 빌헬름기념교회 주위를 알몸에 구호를 적은 채 달리거나, 쿠담 거리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저항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베를린의 대학교 총장들은 2003년 11월 21일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학문의 산지 베를린의 해체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과 관련된 대학총장 공동성명서**

—2003년 11월 21일

이번 주 수만 명의 학생들은 학문의 산지 베를린이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것에 대하여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베를린 공과대학교의 총장들은 베를린의 대학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총장들은 그러한 결정이 학생 정원의 축소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학업 조건, 즉 베를린에 우수한 학자가 모이고 연구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도록 보장해 주는 가능성을 더 악화시키는 데로 나아갈 것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대학교 총장들은 베를린 주 정부가 학생들의 저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학교육정책을 사회와 연방수도 베를린의 미래에 대한 배려의 일부분으로 파악할 것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우리들은 베를린 주와 함께 후속 세대와 사회 전체의 미래 능력 보장이라는 의미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총장들은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대학구성원들이 학문의 산지의 강화를 위해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항 형식을 선택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베를린 자유 대학교 총장

디터 렌첸(Dieter Lenzen)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총장

위르겐 므리넥(J rgen Mlynek)

베를린 공과대학교 총장

쿠르트 쿠츨러(Kurt Kutzler)

한편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지 2003년 7월 14일자에는 베를린 주 재정부 장관 사라친이 다른 연방 주들이 베를린 대학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실린 바 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사라친은 자신의 요구의 정당성이 베를린에서는 주민 구성당 대학생의 비율이 독일 전체 평균보다 80% 높고, 따라서 독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베를린이 다른 주보다 더 많은 비율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를린이 다른 주보다 더 많은 학생비율로 인해 안고 있는 결손액을 메우기 위해 지원액은 연간 5억 7,000만 유로에 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베를린에서 대학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결손액은 다른 주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주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대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이 다른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전체에 필요한 노동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이 갖는 공공재(公共財)적 성격을 인정한다면, 다른 주들이 베를린의 대학들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라친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은 경기 침체로 인해 독일 전체에서 복지 정책에 지출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개인의 부담들이 늘어나면서 복지국가로서의 독일의 위상이 현저히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보험, 연금, 실업수당 및 생계보조금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의 납입금 부담은 늘고 수혜액과 수혜기간은 줄어들며, 나아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또한 현재 슈뢰더(Gerhard Schroder)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젠다(Agenda) 2010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른 주들이 베를린 대학들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라친의 주장은 그 주장의 기본적인 정당성에 불구하고 그렇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베를린 주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징수하고 또 대학과 관련된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수 인원의 감축, 학과 및 학부들의 통폐합, 일정기간 동안 신입생을 받지 않는 등,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노조(GEW) 의장단의 한 명인

게르트 쾰러(Gerd Koler)는 독일금속노조 연맹(IGM)의 기관지 월간 [메탈(Metall)] 12월호에 게재한 짧은 기사에서 대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거에 무료로 대학교육을 받은 기성세대가 향후 자신들의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토대를 떠맡게 될 후속 세대인 대학생들에게 자신들은



이미 누린 바 있는 사회적 혜택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암묵적인 세대간의 계약과 사회정의의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은 공공의 복지사업으로서 마땅

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베를린 시장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 시민당)는 대학생들의 계속되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대학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학생들도 저항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맺으면서

베를린은 분단시절인 1968년에 베를린 자유대학교를 중심으로 남부의 뮌헨대학교와 함께 68학생운동의 선봉에서 독일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 현연립정권 내의 수상 게르하르트 슈뢰더(시민당)와 외무부장관 요슈카 피셔(Joschka Fischer, 녹색당), 환경부장관 위르겐 트리틴(Jurgen Trittin, 녹색당) 및 독일 각계의 지도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이 68운동(과 70년대 독일학생운동) 세대이다. 1960년에서 1967년까지 베를린 자유대학을 다녔으며, 기민련 학생동우회 소속으로 68학생운동에 참여했고, 1984부터 1989년까지 그리고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두 번이나 베를린 시장을 역임한 디프겐(Eberhard Diepgen, 기민련)은 68운동 당시 대학생들이 모든 것을 잃어가는 성장이데올로기에 반발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학생들의 저항을 단순한 경제적 이유만으로 억압하면 68혁명과 같은 상황이 다시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베를린 인포라디오의 방송에 따르면, 12월 5일 베를린 그루네발트에서는 1,000명 가량의 시위대가 제등(提燈)과 햇불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부유한 개인들이 늘어남에도 사회가 더 가난해지는 모순에 저항하여 소위 구걸 데모(Bettel-Demo)를 벌였다. 시위대는 베를린의 부유층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고, 재정삭감으로 위협받는 사회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한 상징적인 모금운동을 벌였다. 이 행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단체인 아탁(attac) 베를린 지부<sup>4)</sup>, 장애인 연맹, 베를린 사회 포럼, 베를린 주 생활보호대상자 노동공동체(Landesarbeitsgemeinschaft der Hilfsbeduerftigen) 등이 주도했고, 무엇보다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베를린 주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가하면서 사회적 약자 운동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다.

이렇게 하여 베를린 주 정부의 대학구조 조정에 반발하는 베를린 대학생들의 저항은 사회전반에서 불어닥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제 베를린 대학생들의 저항은 현재 독일 전체에서 좌파인 사민당과 녹색당에서도 공공연히 제기되며 우파인 기민련과 기사련, 자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대학수업료 도입, 그리고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부담시

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보인다. [40]

주 -----

1)대학수업료 도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권미연의 [독일대학의 무상교육제도는 사라질 것인가](교육개발) 2002년 11월/12월호)를 보라.

2)http://www.diw.de/deutsch/publikationen/wochenberichte/docs/03-23-1#TAB1

3)Jochaim Sartorius, "Glanz und Elend. Kultur in Berlin", Hilmar Hoffmann, Wolfgang Schneider (Hg.), *Kultur Politik in der Berliner Republik*, Dumont, Köln, 2002, S. 72.

4)아탁(attac)은 불어 ASSOCIATION POUR UNE TAXATION DES TRANSAKTION FINANCIERES POUR L'AIDE AUX CITOYENS 의 약어로서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시민복지를 위한 금융거래 과세추진 협회'라고 번역할 수 있겠다. 아탁은 1998년 6월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간지 르몽드의 자매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끄'의 주간 베르나르 카상의 주도 아래 창립된 반세계화단체이다. 아탁은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토빈세를 통해 국제투기자본의 투기적인 외환거래에 과세를 하여 그것을 국제 투기성 자본의 이동으로 피해를 보는 빈곤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보호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01년에는 당시 프랑스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와 독일의 슈피터 수상이 아탁의 토빈세 제정 운동에 동조하여 유럽이 토빈세 제정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토빈세의 도입이 단지 상징적인 시민운동이나 비정부기구 운동을 넘어서서 투기 자본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려면 각국 정부의 참여를 통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나 미국과 IMF는 토빈세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향후 수업료를 지불하는 데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질문번호	찬/반	설문항목	응답자수	응답자비율
1	찬성	결국 대학생들은 대체로 미래에 많은 일금을 받고, 자신들의 교육에 의해 스스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3,104	8.52%
2	찬성	국가 재정이 비었고 그래서 대학생들도 희생해야 한다.	804	2.21%
3	-	징수된 수업료가 대학으로 들어가서 학업조건이 개선되는 한에서	13,970	38.36%
4	반대	왜냐하면 수업료는 가난한 가정 출신의 지원자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12,897	35.41%
5	반대	그러면 학업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다.	5,484	15.06%
6	모름	-	163	0.45%
총참가자			36,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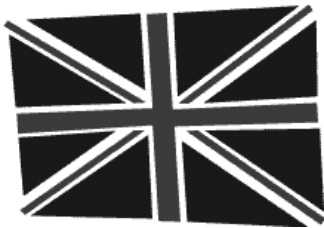
참고도표: 슈피엘 온라인 설문조사(2003년 12월5일 20:00현재)



## 영국의 학교장은 서클픈 CEO

- 영국의 학교장, 그들은 누구인가?

강영혜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kyh@kedi.re.kr



현재 영국에는 연봉 3만 5,000파운드에서 약 9만 파운드(7,000만원~1억 8,000만원)까지 큰 폭의 임금 격차가 교장들 사이에 적용되고 있다. 학교의 수준향상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조기에 해고할 수 있다... 많은 영국의 교장들은 교수활동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신 학교경영에 몰두하게 하는 최근의 역할 변화를 불편해하며...

1980년대 이후 영국 정부는 교육의 수준 제고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90년대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질 높은 교육의 관건이 교원의 수준향상이라고 판단해 “교직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1998년에 발표된 교육녹서에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및 승진제도 개혁과 더불어 학교장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일련의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가 기대하는 학교장의 지도력은 학교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학교운영결과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청은 물론 학생, 학부모와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영자로서의 학교장 역할이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국가수준의 교장자격 기준을 마련해 예비교장의 양성 및 연수는 물론 현직교장의 평가와 연수에도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업무의 양과 성과에 기초한 임금책정방식을 도입해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책무성 구현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 결과 영국에서는 현재 연봉 3만 5,000파운드(7,000만원) 수준의 봉급을 받는 교장에서부터 8만 파운드가 넘는(1억 6,000만원) 봉급을 받는 교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룹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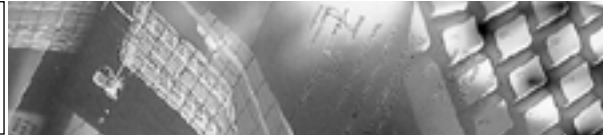
영국 정부가 새로운 교장의 역할규정 및 지도력강화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은 교육의 질 개선의 최종적 단위는 개별학교이며, 개별학교 운영의 성패는 학교장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 자율경영의 시작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도해 적합한 교장을 자율적으로 뽑는 일에서 비롯되며, 그렇게 뽑힌 교장을 중심으로 교육력을 결집해 학교에 부여된 교육적 사명을 다하는 데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누가, 어떻게 교장으로 임용되며, 교장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나아가 교장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개혁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교장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영국의 초·중등학교는 교장들의 조기퇴직과 능력 있는 교장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1~2002년 사이 중앙 일간지에 채용공고가 난 2,200여건의 학교장( 및 교감) 임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당 지원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며, 특히 런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처음에 낸 채용 광고에서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채용공고를 한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일부 학교는 한동안 학교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2002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교장 임용자는 40대에 새로 교장으로 임용되는데 그 중에는 소수이지만 파격적으로 30대 중반에 교장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 교장으로 임용되는 교장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어지는 경향은 교장 모집 공고를 낸 상당수의 학교들이 60세가 되기도 전에 퇴직하는 전임교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젊은 교장의 출현을 지원하는 또 다른 개혁정책으로 조기승진제도(Fast Track Programme)가 있다. 이 제도는 토니 블레어 정부가 교직의 현대화(Modernization of Teaching Profession)의 일환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재들이 교육계에 들어와 조기에 학교지도자로 승진, 활약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양성 과정에서부터 따로 대상자를 선정해, 추가적인 연수를 시킬 뿐 아니라 교직 입문 후 5~6년 동안 집중적인 연수와 다양한 역할 부여, 세미나 참가, 현장 지도, 리더십 훈련 등을 통해 6~7년 무렵이면 교감이나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 영국의 교장은 이렇게 임용된다

영국의 공영학교에서 학교장과 교사를



임용하고 해고하는 일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다.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에 배정된 예산을 기초로 얼마나 많은 수의 교사와 교감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임용의 책임은 물론 학교장의 평가, 연봉결정까지 책임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채용공고를 신문에 내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임용에 이르기까지 지역교육당국(LEA)의 지침과 자문, 협력을 받아 선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위학교 교장임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결원 사실의 신고 및 채용공고

일단 교장이 퇴직이나 해고 등에 의해 결원이 생기면 운영위원회는 결원된 사실을

교육청에 알리고 전국적 규모의 일간지에 교장 채용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다. 중앙일간지 공고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동시에 소속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홈페이지에도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다(이런 공개채용의 원칙은 심지어 몇 개월짜리 시간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 2. 채용전형위원회 구성

채용공고를 내는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채용전형위원회(selection panel)를 구성하여 위원들에게 채용과정 전반에 관한 임무와 법적 책임까지 위임하게 된다. 전형위원회는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시 물어볼 질문과 최종 후보자 리스트 작성 등 채용관련 실무 전반을 책임진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진행 과정에서 이들 전형위원회는 매 단계별로 지역교육청의 자문과 협조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교육청의 참석요구와 자문을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채용의 세부 내용 확정

전형위원회는 개별학교 연봉적용범위(Individual School Range : ISR), 직무명세서(Job Description), 개인신상 확인내용, 최종후보자 명단작성 기준(criteria for shortlisting), 면접대상자 선정기준, 면접의 형식 전반(질문, 프레젠테이션 방식, 면접 시간 등) 등을 확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청 인사담당부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의 면접단계에서 지역교육감이나 그 대리인은 적절한 지문을 위해 전형관련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후보자 선정에 관한 투표권은 학교운영위원(전형위원)만이 갖는다.

#### 4. 면접 대상자 선정 및 최종 명단 결정

전형위원회는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후보자의 신상명세 및 최종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에 제공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교육청이 판단하기에 어떤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유와 의견을 학교에 편지로 알려서 전형위원회가 제외하도록 한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전체 운영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전형위원회의 선정 내용을 추인한다.

#### 5. 지역교육청의 승인과정

최종적으로 적임자가 선정, 추인되면 전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에 추천하게 된다. 지역교육청은 선발 및 전형과정에서 함께 지문을 한 만큼 추천된 후보자가 교원임용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전형위원회가 추천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적격자 부재 등)나 전체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못 받는 경우, 혹은 지역교육청



의 사후 검증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난 경우에는 새로운 후보자를 찾기 위해 신문에 재공고를 내어야 한다.

#### 전에 없이 강력해진 교장의 임무

영국의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교운영개념의 도입으로 과거와는 다른 역할과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학교예산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단위학교로 이관되고 교직원 임용을 비롯한 학교운영전반의 책임과 권한이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로 이양되면서 교수·학습에 관한 교육전문가 역할보다 최고경영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1996년 교육법에 의해 학교장에 맡겨진 역할과 권한은 전에 없이 강력해졌는데, 현재 영국의 학교장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의 목표와 정책운영의 목적을 명료화
- 교사 및 직원들의 임용에 관여함(일차적 권한은 학운위)
- 모든 직원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적절하게 업무를 배정시킴
- 결근한 교사들을 대신할 임무 배정
- 교감의 임무 위임
- 교육관련 정보를 교사들에게 전달
- 다양한 조합 및 교원조직 대표들과의 연락 업무
-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 매일의 전체조회 출석
- 학교수준에 대한 평가
-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참여함
- 교사 훈련 및 신규교사(수습교사) 지원 방안 마련
-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기록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함
-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수행함
- 학생들의 자기규율과 좋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규율과 기강 유지
- 학교운영과 학생들의 발달상황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
- 학교운영위원회에 조언하고 지문, 보고하는 일
- 물적 자원의 배정· 배분과 통제, 관리, 파악
- 학교의 건물과 운동장의 안전과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조치



- 결근 교사학급을 대신 맡아주는 등 교수활동에 참여할 의무
- 이 같은 임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 또한 교장이 져야 하므로 영국의 학교장들은 제반 업무를 몸소 챙기고 감독하게 된다.

**영국교장은 국가교장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학교장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자격과 관련해, 1998년 이전까지 영국에는 특별한 교장자격제도가 없이 교사로서의 경력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학교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교육청 수준의 지도자 연수 등을 거쳐 승진하는 형태로 충원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교장의 자격과 역할은 선임교사로서 교수-학습활동 중심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역할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1998년에 공포된 “고등교육 및 교원 관련법”에 의해 향후 신규로 교장에 임용되는 사람들은 국립교장연수원 (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s)이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교장자격증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을 획득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4년 4월 이후 신규 교장을 임용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구하는데, 교장자격과정의 많은 부분은 학교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지도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능력있는 교장은 교역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교장임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장의 직무명세(job description)와 더불어 연봉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공고에는 반드시 직위, 고용조건 및 기간(풀타임 vs 파트타임, 한시적 vs 영구적 등)과 임금수준(pay scale)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현재 영국의 교직원의 pay scale(임금산정표)은 세 갈래(L, Advanced, M+Upper)로 나뉘는데, L라인은 교장, 교감 등의 지도자 그룹에 해당되고, A라인은 행정가로써의 진급을 원치 않는 우수교사그룹에 해당되며, 일반교사들은 M라인에 속한다. M라인은 6개 포인트로 구분되며, 이 라인이 적용되는 동안에 일정 성취단계(performance threshold)를 통과한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

는 상급단계임금표(Upper scale)의 적용을 받는다. 교장과 교감, 보조교장으로 구성되는 리더그룹의 임금책정표는 1~43까지로 구분된 일종의 호봉과 더불어 개별학교 임금범위(Individual Salary Range : ISR)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별학교가 교장(및 교감)에게 적용할 임금수준(ISR)은 근무할 학교의 학생수, 학교가 처한 특수 조건(교사-학생 비율로 상정되는 기피학교 등)을 감안해 8개의 그룹으로 구분, 미리 정해진다. 교장후보자는 신문공채에 제시된 특정학교의 해당 연봉그룹을 보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봉급수준과 더불어 그 학교 나름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영국에는 연봉 3만 5,000파운드에서 약 9만 파운드(7,000만원 ~1억 8,000만원)까지 큰 폭의 임금격차가 교장들 사이에 적용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교장경력이 아주 오래되어도 학생수가 적고 별 어려움이 적은 학교에 근무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월급을 받고, 30대 중반이라도 열악한 지역의 규모가 큰 학교를 맡아서 학생들의 성적수준을 계약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교역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교장의 월급 수준은 고용당시에 책정되지만 해마다 업적 평가를 통해 조정되는데, 업적평가의 기준은 임용당시 제시한 학교 개선목표, 해마다 평가 제출된 개선 목표 등



을 중심으로 정해진다. 학교의 수준향상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조기에 해고할 수 있다. 영국 도심에 위치한 골칫거리로 알려진 중등학교의 경우 최근 4~5년 사이 교장이 다섯 번씩 교체된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교장들은 연봉 책정은 물론 고용계약의 연장에서도 철저히 능력과 업무 부담 정도에 좌우되고 있다.

교장이나 교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평교사로 돌아가기를 원할 경우에는 평교사의 월급산정표 중에서 상급단계(Performance threshold)를 통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금라인을 적용하게 된다.

### 교장 수급위기 겪었던 영국, 3가지 대책을 세웠다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국에서는 교장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며 대체로 교사로서의 경험과 교감을 거쳐 교장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개혁으로 교장의 책임이 가중되면서 많은 교장들이 조기 은퇴해 교장수급의 위기를 겪으면서 영국 정부는 우수한 교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교장자격증제도(NPQH :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를 도입하였고, 이어서 국립교장연수원(NCSL : 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을 설치 운영하게 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운영중인 교장 지도력 강

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장자격(NPQH :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teachers) 취득과정이고, 나머지 두 과정은 교장에 입문한 사람들을 위한 연수과정이다. 여기에는 초임교장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수습교장 프로그램(HIP: Headteacher Induction Programme)과 현직교장의 지도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장지도력향상프로그램(LPSH : Leadership Programme for Serving Headteachers)이 있다.

국가교장자격증 제도나 교장수습제는 모두 교장 개개인을 국가교장기준(National Standards for Headteachers)에 비추어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가를 평가(Needs Assessment)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현장에 밀착된 연수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장연수관련 업무전반이 국립교장연수원으로 통합되면서 교장자격증(NPQH) 취득과정과 수습교장연수과정(HIP) 및 현직 교장들 대상의 지도력 향상과정(LPSH)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되었다.

영국의 교장지도력 연수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연수를 받고자 하는 교장(혹은 예비교장)의 개인적인 특성과 소속 학교의 특성 등에 대해 분석, 평가해 해당 교장이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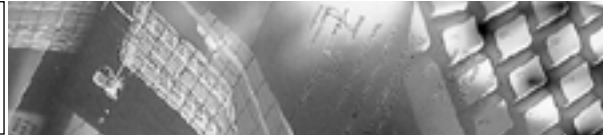
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지도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운영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과정에는 기업체의 우수한 지도자나 지도력 능력 개발 분야의 권위자, 우수 교장 등을 초빙해 훈련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변화를 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워크숍 후에도 계속적으로 접촉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벤치마킹에 있어 영국교장들의 실제 만족도는 어떠한지 고려해야

앞서 보았듯이 영국의 교장 임용과정은 물론 학교장의 실제 역할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다. 오랫동안 국가적 교장자격제도가 없이 선임교사들 중의 일부가 교감, 교장으로 임용되어 온 관행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교사들은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교장이라는 직위에서 찾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가르쳐야 할 학생들과 교과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직에 종사하는 것이지 교장이라는 목표를 두고 경력관리를 하는 교직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용절차에서도 영국과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모든 교직원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의 주체는 단위 학교의 운영위원회이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교육법과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의 조례, 규정 및 단위학교운영위원회의 자체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학교개선의 측면에서 개별학교의 형편과 필요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뽑는다는 불문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다. 이처럼 영국의 교직원 임용이 후보자의 드러난 경력보다 학교의 필요와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영국의 선발 및 평가철학이 다른 데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나 선발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평가의 신뢰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점수화하고 1~2점 차이로 각축전을 벌이는 대신 정작 평가의 타당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영국의 선발 및 임용은 어떤 사람을 뽑고자 하는 학교나 기관의 필요가 우선시된다. 달리 말해서 평균적으로 점수가 높고 무난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학교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책임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교장 임용방식은 교장자격소지자 중심의 임용제도가 아니라 학교와 수요자 중심의 임용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교장 임용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장의 연봉이 교장 개인의 경력기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재직하는 학교의 규모와 성격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영국 학교장의 월급수준이 학교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학교장



의 역할이 교장실에 앉아 서류 결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전천후 서비스 활동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학교장이 몸소 감당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지고 교장의 업무부담과 책임분량은 커지게 마련이다. 이는 영국의 대졸 전문직 중에서 교직은 가장 장시간 근무를 하는 직종이며, 그 중에서도 교장은 가장 장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장임용방식의 개선이 현안과제로 부각되면서 외국의 사례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우리는 외국의 교장 임용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 외에도 그 나라에서 교장으로서의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들에게 지어진 역할과 책임이 어떠한지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많은 영국의 교장들은 교수

활동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신 학교경영에 몰두하게 하는 최근의 역할 변화를 불편해하며, 대다수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 자체를 대신할 만한 교육전문직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감, 교장 승진을 둘러싼 갈등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서 멀어지는 걸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교육계의 승진열망에 대한 문제제기는 교장임용제 개선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 자체가 보람과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상황에서라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교단에서 멀어지는 관리자의 자리를 위해 전력투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직개혁의 대전제는 교직본연의 일을 중심으로 교사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교장을 비롯한 교원 모두의 전문성과 책무성의 확립이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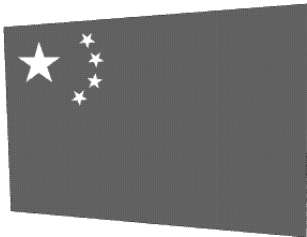




## 요즘 중국 학생들의 화두, '법으로 하라'

- 높아지는 중국 학생들의 인권의식

유경희 | 북경 통신원, liujingji@hotmail.com



과거에는 학교의 차별에 대해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중국 학생들이 중국이 법제화사회로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쟁취하고 있다. 학위증서나 졸업증서를 취득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취직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중국에서는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육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학칙에 근거해 내린 학생에 대한 처벌이 교육부의 '규정(7호령)' 보다 과중하게 부과되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과 학부생은 재학기간 결혼할 수 없다는 학칙규정이 혼인법의 규정과 상충되어 학생의 인권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가 공산당에 의한 통치에서 법치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의 인권과 학칙, 법률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 교육부 규정보다 더 엄격한 중국대학 학칙

중국 광주에 소재한 기남대학의 武모 학생은 1996년 본교의 의용물리학(醫用物理學) 시험을 보는 과정에 커닝을 하여 학교로부터 학사학위 취득자격을 상실했다. 이듬해에 그 학생은 동과목을 재수강하고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2001년 그 학생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증만 발급받고 학위증서는 발급받지 못했다. 학위증서를 받

급받기 위해 기남대학을 상대로 천하구(天河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대학이 학칙에 근거해 일처리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원고는 패소했다. 1심판결에 불복한 그 학생은 광주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했고, 광주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심사한 결과 "일정한 학술수준 또는 전문기술 수준에 도달한 인원에 대해 학위증서를 발급한다"는 국가의 학위제도 규정을 참고해, "상소인 武某는 의용물리학 시험을 보는 과정에 커닝을 하여 0점 처리가 되었지만 본 과목을 재수강한 후 시험에 합격해 학교로부터 졸업증서를 발급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기남대학은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집행실시방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武모군의 졸업성적, 졸업증서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학위수여여부를 재결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북경 모 대학의 박사과정 劉모씨는 1996년 박사학위 논문발표를 하여 심사위원회와 학과 학위평정분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학교 학위평정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되지 못해 박사학위



를 취득하지 못했다. 본교 '대학원 학적관리 규정'에 의하면 박사생이 학위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학교에서는 졸업증서를 발급하지 못하기로 되어 있어 학교에서는 劉 모씨에게 졸업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劉 모씨는 1999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학생의 대리인은 학교의 규정이 국가 교육부의 '대학원생 학적관리 규정'의 졸업증서 발급요구에 위배되어 합법성이 결여됨으로써 졸업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결했다.

區모씨는 무단결석과 싸움을 했다는 사유로 졸업증 발급 하루 전에 퇴학조치를 당했다. 區모씨는 부당한 퇴학조치에 대해 대학을 상대로 학비의 2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중국의 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이상의 사례는 졸업증과 학위증서 취득과 관련해 대학생들이 자신의 권익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례인데 소송청구 이유는 학칙이 국가의 법률과 저촉되거나 법률에서 규정보다 과중한 처벌이어서 법률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송으로 '학부생의 결혼허가'를 이끌어 낸 중국학생들**

2002년 10월 중경여대생이 재학기간 임

신을 하여 강제퇴학조치를 당했는데 이는 1990년 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일반대학교 학생관리 규정(7호령)'에 "학교에서 재학기간 사사로이 결혼하고 자퇴수속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퇴학처리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2장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남자 만 22세, 여자 만 20세인 자가,



자원해 결혼할 경우 기타 3자가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경여대의 한 학생은 '일반대학교 학생관리 규정'이 혼인법 규정에 위배되며 학교에서 자신에 대한 강제퇴학조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경시 제1중급법원에서는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지 않음을 판결했다.

2001년부터 기혼인 성인자도 대입시험

에 응시해 대학에 입학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어 대학에서 결혼을 허락해야 하는지가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다. 교육부는 대학재학생에 대한 결혼 허가여부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각 대학에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관망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2003년 6월 17일 '남방도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무한화중사범(武漢華中師範)대학에 재학중인 23세의 남학생이 회사원과 결혼수속을 한 후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50여 명의 친구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주었다. 이는 대학 재학생이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치른 첫 번째 사례였다.

재학중에 임신을 하여 퇴학을 당한 여대생과 그의 남자친구는 재수해 같은 대학을 들어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2003년부터 대학생 결혼을 허가한다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라 이들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한 첫 번째 수익자로 되고 싶다고 하며 새로운 규정이 실시된 후 중경시 교육국과 교육부에 그들의 사건에 대한 재판결을 신청함과 아울러 중경시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대생이 다니던 대학에서는 여대생이 처분취소 요구를 신청할지라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퇴학당할 당시에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무한대학에서는 대학생이 결혼적령에도



달하면 결혼을 허가한다고 결정했고, 북경 대학과 칭화대학에서는 대학학부생 결혼문제에 대해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대학생 개인의 일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소주(蘇州)대학에서는 대학학부생이 결혼을 하는 것을 당분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청도대학, 청도화공대학, 청도건축공정대학 등에서도 대학생 결혼문제에 대해 반대의 태도를 표명했다.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학칙이 현실에 부합되고 학생들의 심리적인 반발을 줄일 수 있다.

#### 공립학교는 법률우위와 법률유보의 원칙중 반드시 후자를 적용해야 한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행정행위보다 상위의 원칙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법률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법률과 저촉되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학교행정활동의 각 방면에 적용되어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리의 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이 법률규정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행정기관에서 대신 규정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이 행위를 행사할 경우 반드시 법률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립학교에서 학칙을 제정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의 문제는 분쟁이 있는 문제이다. 독일, 프랑스를 대표로 하는 대륙법계의 이론에 따르면 학교는 공무법인으로서 동 공무영역에서 내부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런 내부 규칙은 외부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는 법률이 부여한 기초 위에서 내부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정한 규칙에 따라 일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복지행정, 급여행정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면서 법률유보의 원칙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학자들은 공립학교에서 학칙을 제정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치국가에 금이 갈 수 있다'고 인정해 공립학교들이 법률의 감독 아래에서, 특별권력관계를 이용해 법률을 회피하는 공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립학교는 반드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공립학교는 법치의 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독자성과 자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립학교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행정기관과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 공립학교는 상당한 영역에서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칙을 제정할 때 합리성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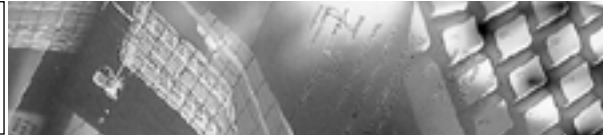
#### 법률과 학칙, 그 미묘한 관계

대학의 학칙은 학교에서 규정한 내부규칙으로서 법령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학칙은 내부규칙으로서 내부성원과 이용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데 그 구속력에 대한 법률근거는 학교주체와 학생의 법률관계에 있다.

공립학교는 사회조직일뿐만 아니라 교육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고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교육공무를 순리롭게 진행하기 위해 법률은 일정한 행정관리권을 부여한다. 공립학교가 이런 권한을 행사할 때 학생과의 관계는 평등한 주체지간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행정관계이다.

학생은 학칙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권한이 없지만 학교의 민주적인 입장에서 고려할 경우 학생이 관련 학칙에 토론, 참여





제가 대두된다. 학교는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목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학교에 상당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할 것이 요구된다. 학교에서는 많은 사무를 처리할 때,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학교에서 관련 학칙을 제정할 때,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따라 규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법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990년에 발표한 '일반대학 학생관리규정' 제63조에서는 강제퇴학 또는 퇴학처벌을 주는 6가지 상황을 규정했다. 그중 제 4항에서의 '품행이 극히 나쁘고, 도덕이 손상된 자'와 제5항에서의 '학교기율을 위반하고情節이 심각한 자'는 모두 학교의 자유재량권 범위로 귀속시킨 것이다. 학생의 품행이 극히 나쁘고, 도덕이 손상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학에서 학생의 행위가 도덕이 손상되어 강제퇴학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여길 때, 외부사람들 또는 학생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학교와 학생간 분쟁이 있을 때, 심지어 대부분 사람들이 학교의 결정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칙 또는 강제퇴학 조치가 위법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학교의 자유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의 자유재량권은 행정상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

켜야 되지만 만약 임의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학생의 기본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중국대학, 하루속히 과거의 권위의식 버려야

과거에는 학교의 처벌에 대해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중국 학생들이 중국이 법제사회로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쟁취하고 있다. 학위증서나 졸업증서를 취득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취직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강제퇴학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고 취직권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처벌이다. 만약 처벌정도가 조금 경미했다면 소송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대학에서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본다. 학생신분의 취득, 상실과 강급 등 규정에 대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학칙은 법률의 규정하에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렇지만 기타 학생의 복장과 관련된 규정, 일과시간표, 학사일정, 포상제도, 기숙사규정 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학칙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에 대한 결혼 허가 여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해남대학, 해남사범대학과

해남직업기술대학의 60명 학생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다수 학생들은 재학기간에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지 실제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로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만약 학칙과 상충되면 여자측과 결혼하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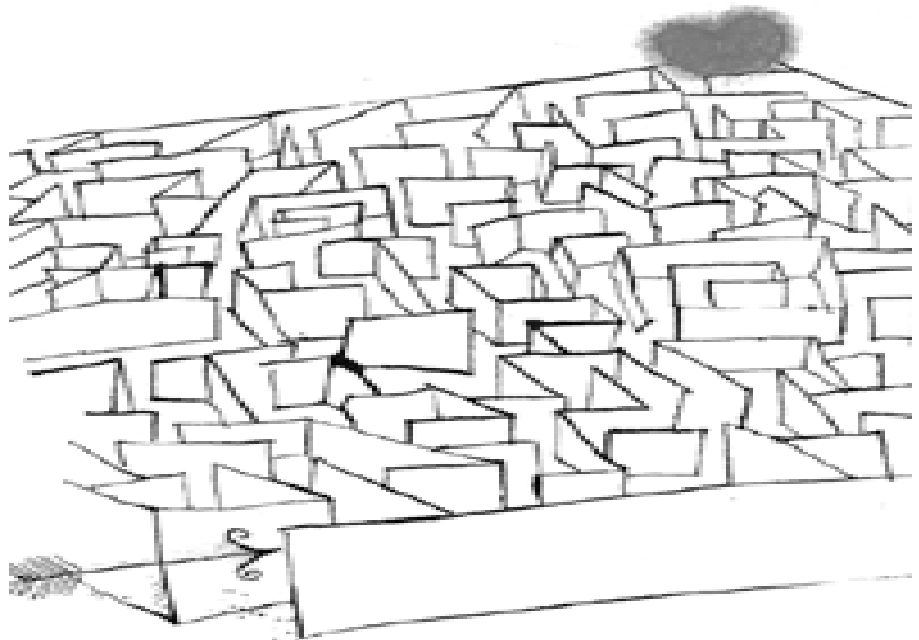
중국이 법치사회로 변화하면서 중국대학생의 인권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에서 결혼을 허가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하여 학생들이 신속한 결정을 하도록 독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중국 대학생이다. 이제 중국학생들은 권리의 대상으로서 학교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칙의 합리성 여부, 상위법과의 상충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대학들도 과거의 권위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학칙의 타당한지에 대해 상위법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10]

# Project



## ■ 특별기획 - 평생학습참여율 증진을 위한 문화운동

- » OECD 최하위는 한국의 평생학습
- »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한 동네를 필요로 한다”
- » 적어도 평생학습은 충분히 ‘축제’가 될 수 있다
- » 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사회의 믿을 만한 전야
- » 왜 그토록 영국정부는 ‘교육’에 매달리는가



# OECD 최하위는 한국의 평생학습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전망과 과제

최돈민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운영실장, donmin@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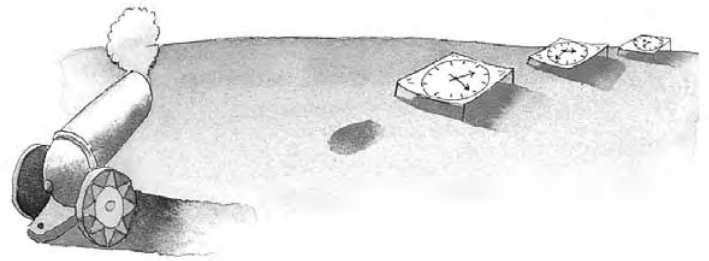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직업 능력의 개발·향상을 통해 성인의 취업능력 배양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12~16년간의 학교교육으로는 40여 년에 걸친 근로 생애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근로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은 고용의 안정·유지와 실업 없는 노동이동을 도모하는 사회 학습망으로 기능한다.

이미 평생직장 개념이 약화되고 노동력의 유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이 인적자원을 자체 개발(making)하기보다 외부조달(buy)하는 경향이 증대해 기업의 인적자원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저숙련 근로자의 실업 및 빈곤 노출 위험이 증대되면서 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의 균등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 한국의 평생학습은 OECD회원 중 최하위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상당히 낮다. 2000년 1년 동안 성인(재학생 및 재수생 제외)이 평생학습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비율은 17.2%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계속교육 참여율은 30~50%에 달하고, 특히 직업직무와 연관된 계속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학령층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35세 이상 성인 중·고등교육단계의 교육기관에 등록한 비율은 2.87%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그룹에 위치하고



있다. 고등교육 등록 비율은 뉴질랜드가 23.9%로 가장 높고, 영국 22.2%, 호주 21.0%, 스웨덴 19.0%, 미국 16.4%로 선진국에 비해 성인들의 고등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은 극히 제한적이다. 대학의 취학률은 2001년 현재 83.7%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대학 재학생 중에서 35세 이상 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또 다른 현상으로는 기업의 교육훈련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경쟁의 격화,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고객의 다양하고 높은 기대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확보·유지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의 추이를 보면, 총 노동비용 중 교육 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2.1%, 1997년 1.9%였으나,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 1.2%로 크게 감소했고, 1999년에 들어서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1.4%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과거와 같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교육훈련비용이 감소하는 실정에서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유·무급 휴가제는 실시 가능하도록 선언적인 의미만 담고 있고, 행·재정 지원 방안은 없다. 교육계좌제는 단순히 평생 학습 결과를 누가 기록하는 기능밖에 없고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 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자의 자기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은 아니다.

평생학습은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자기 개발에 초점이 있다. 근로자의 생애 설계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밖의 학습 결과도 학점은행제에 의해 제한적으로 학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 평생학습실현, 5가지 방법이 있다

#### 1.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각급학교 개방

성인학습자에게 모든 각급학교를 개방한다. 이를 위해 공립 초·중등학교를 이용해 주로 성인들의 기초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교육을 실시한다. 문해교육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실 또는 문화교육 강좌 등을 개설해 기초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화해 실시한다.

대학의 성인 평생학습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교육체제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간제 학생으로 운영되는 대학을 설치해 직장인의 재교육 기회를 확충한다. 시간제 학생 등록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교·강사 결정하고 대학 본부만 설치하고 교육시설 등 인프라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도 갖출 필요가 있다.

대학의 정규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을 원격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일반인에게 대학의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개방해 학습의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2001년 개교한 사이버 대학은 정규 학

생위주로 되어 있고 별도의 대학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학 설립인가를 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과 성인의 자기주도적 학습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시간제 학생이 일정한 대학의 교수와 학습계약을 맺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학습계약제(learning contract)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인교육기관을 통한 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 산업체 훈련원이나 공무원 연수원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우수 기관을 인력투자기관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또한 이들 기관간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과정 개발·운영하고, 각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민회관, 구민회관, 사회복지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종 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언론 방송기관들과 종합 네트워크를 구성해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한다.

문화시설을 통한 학습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평생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근로청소년, 주부, 장애인, 노인 등 보다 교육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확대하고, 비슷한 학습적 동기나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학습하는 학습동아리를 조성한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도한다. 박물관의 평생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문화·예술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문화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의 박물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다양한 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박물관에 교육담당 큐레이터 및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

#### 2. 학습의 누적관리를 위한 학습계좌제 실시

모든 학습결과와 표준화 체제를 구축해 누적 관리하는 학습계좌제의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습계좌제를 통해 학교 밖의 학습경험이나 비형식적 교육활동, 나아가서는 일상 생활의 교육적 경험과 자기학습의 결과까지도 평가·심의를 통해 학점이나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력) 취득 수준을 상(대학원 이상), 하(고등학교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프로그램 평가에 의해 수준을 결정하고, 학점(또는 이수 단위)으로 포괄 인정한다. 평가인정은 정규 학교 이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분야 등을 포괄하는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학습계좌제를 운영하기 위해 모든 학습 결과를 국가자격체제(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와 학제 등을 고려해 개인 학습자가 표준화된 척도에 의해 자신의 경험이나 학습을 누적 관리한다. 표준화된 학습체제는 기본적으로 연령, 발달단계, 가족생활주기, 생활양식 등을 감안해 다양한 차원으로 설정한다. 표준화 척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에서 주관해 계획 수립중인 NSS(National Skills Standard)를 고려해 개발한다. 표준화 척도는 현재의 학습 수준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추수 학습 프로그램 선택 지침으로 활용한다.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평가받은 모든 종류의 평생직업교육기관 및 프로그램과 모든 종류의 사회활동 및 직업경력, 자율적인 자기개발 교육 활동과 경험까지 확대한다.

학습계좌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습 프로그램 정보와 학습 결과 DB를 개발해 이를 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학습경력이 누적 관리하는 학습계좌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습경력의 누적관리와 이수결과에 따른 학습결과의 인증은 '학습계좌제평가인정심의회' (가칭)를 설치해 인정한다.

### 3. 학습 연계를 위한 경험학습 인증체제 구축

경험학습의 인증을 통한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장·사회에서 체득한 지식·기술 등의 경험학습 결과를 평가해 대학 신·편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일터에서 학교로의 이행' (Work to School)을 통해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경험학습의 평가·인정을 통한 신·편입학 기회와 학점

인정은 대학에 위임한다. 경험학습은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취미와 재능, 자기주도 학습,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정규교육기관의 학습, 현장훈련(OJT, Off-JT), 각종 자격 시험 결과, 사이버학습, 해외에서의 교육·훈련·경험 등을 포함하며 평가·인정은 포트폴리오 시험, 프로그램 등의 평가 방법에 의한다.

경험학습 인증체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험학습 인증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다. 경험학습을 인증해 실시하는 대학은 일정기간 시범기간을 거쳐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경험학습을 평가·인증하는 대학은 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경험학습을 인증하는 대학은 대학 평가의 별도 평가 영역으로 평가해 예산을 지원한다.

#### 〈선진국의 경험학습 인증체제〉

- OECD : 1996년 교육장관회의,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 학습' (lifelong learning for all) 천명, 2001년 교육장관회의, 경험학습 인증 천명

- ILO : 국가자격체제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채택하여 경험학습 인증을 권고

- 미국·캐나다 : 대학 자율적으로 열린학위과정 (University Without Walls), 교외학위과정 (External Degree)을 개설해 선행학습 인증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 영국·호주·뉴질랜드 : 국가자격체제에 기초하여 경험학습을 평가·인증함으로써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과 학력 간 호환성 부여

경험학습 인증 수혜자가 근로자임을 감안해 시간제 등록·사이버 교육의 활성화, 주말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등교육 접근기회를 확대한다. 기본적으로 경



협학습 인증은 직업중심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에서 실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학습 결과의 평가·인증을 통한 자격을 부여한다. 직업현장에서 습득한 능력을 평가해 자격취득시 우대함으로써 '일터에서 일터로의 원활한 이행' (Work to Work) 촉진한다. 능력 평가에 따라 필기시험, 실기시험 일부 과목 면제한다. 중장기적으로 사내자격을 포함한 자격 체제를 정비한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으로 직장경험을 인정하고 있다.

#### 4. 근로자의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 지원 확대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를 확대해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당해 연도 인적자원개발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에게도 확대하고, 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당해 연도의 지출액이 과거 4년간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의 50%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인력개발비의 15%를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습휴가제를 도입해 근로생애에 걸친 계속학습 촉진 및 계속학습기회의 균등한 접근을 지원한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일·휴가제도 개편시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휴가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현행 연월차휴가(22~32일)의 통합조정시 학습휴가제 도입 명문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습휴가제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보험료 공동부담 방안을 강구한다.

비정규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를 통한 지식격차를

해소하도록 한다. 수강장려금의 적용대상을 비정규근로자에게 확대해 자율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수강장려금 지원 대상에 현행 비자발적인 이직예정자 및 50세 이상, 정보화 기초훈련을 받는 근로자 이외에 비정규근로자 포함하도록 한다. 기업이 비정규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 우대 규정을 신설한다.

#### 5. 학습 안내를 위한 상담 체제 구비

학습자의 학습수준에 따른 학습 안내를 위해 학점은행제 상담실을 개편해 '학습상담실'을 설치하고 유·무선 상담 체제를 구비한다. 학습상담실은 시·군·구 수준으로 확대 설치하고 24시간 상담 체제 구비한다. 이미 영국에서는 모든 학습관련 정보나 서비스를 일괄(one-stop) 제공하는 Learning Direct를 운영해 1,000개 이상의 학습상담센터에서 연간 10만 명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센터의 종합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CareerNe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Kedunet 등과 연계한 종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의 NAEPC, NCCET, NRCCTE 등의 컨소시엄, 영국의 NGfL과 Lifelong Learning, 캐나다의 CLN, 호주의 ALON과 EDNA, 뉴질랜드의 NZQA, 일본의 마나비넷 등의 평생학습 전용 정보시스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지금은 평생직장 사라지고 평생직업이 부각되는 시대

지식과 정보의 급속한 팽창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성인들이 계속 학습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새롭게 창출되기 때문에 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제가 중요하게 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



기가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와 자세, 학습기회 확보가 중요하다. 이미 평생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권은 기본 권리로 생존권을 확보하는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제3영역 (tertiary domain)으로서의 성인 고등교육 체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으로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평생직업이 부각되고 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중년 퇴직자 증가하고 실직, 퇴직자의 재취업 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해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취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습 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의 장(場)을 확대해 다양한 학습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성인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가 보장되어, 평생학습의 접근기회가 지역, 계층, 성에 따라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인교육에 참여하는 집단조차도 주로 중류층이 대부분이며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일수록 성인교육에 더 많이 참가한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좋은 직업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학교 교육체제는 교육시기, 수업연한, 교육과정, 입학자격 그 밖의 모든 제반 학사운영이 일정한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성인들은 학습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기간 교육받기보다는 자신이 가능한 시간을 이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기 바란다. 성인들의 요구와 상황에 적절한 보다 융통성 있고 다양한 학습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어 감에 따라 사람들의 교육적 요구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가 과거와는 달리 정보통신기술뿐만 아니라 문화나 예술, 여가 분야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성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영역도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학교 이외의 다양한 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평생학습은 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미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범국가 차원으로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 경제, 정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사회를 하루 속히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교육체제에서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평생학습체제는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학교교육 결과와 동등하게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다.

학교교육은 학습 결과를 평가하기보다는 학습시간에 따른 위계를 중시한다. 몇 년간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상급학년에 진급하고, 이것이 누적되면 졸업장을 수여해 상급학교 진학 기회를 부여한다. 반면 평생학습체제에서의 학습 결과 평가는 학습을 통해 어떠한 능력이 학습되었는지를 평가·인증한다. 학교교육이 물리적 시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평생학습은 학습 결과에 따른 체득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에 의한 학습 결과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학습체제는 학교교육으로 만들어진 학력 위주 사회를 거부한다. 어떠한 학습 형태에 의하던 학습 결과가 가시화되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집착해 평생학습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지양해야 한다. 학습결과의 인증이 자생적으로 탄생한 각종 사회 단체나 조직의 교육활동을 지원·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

#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한 동네를 필요로 한다”

- 도시가 시민을 가르친다: 한국 평생학습도시의 가능성

양병찬 | 공주대학교 교수, bcyang@kongju.ac.kr

## 학습도시, ‘지역사회는 나름대로의 교육력을 갖고 있다’ 에서 출발

“교육은 학교에만 있다”는 강한 신념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는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100여 년 전 근대 교육이 성립되면서 성립된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공간인 지역과 교육을 분리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학교붕괴, 교사부재, 학생자살 등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는 그 책임을 공교육이 져야 한다고 학교만을 몰아세우고 있다. 물론 학교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뿌리깊은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학교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와 학교, 가정 등 모든 교육적 주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력(Educability)을 회복해야 하며, 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협동해야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다.

가정과 학교를 모두 담고 있는 지역사회는 나름대로의 교육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주거 공간, 경제, 정치활동 무대일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도시의 역사·문화·자연·건물·오락시설·도로·일터·가옥 등의 생활환경은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언어·행동·사고방식·감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래 지역의 모든 주체와 자원은 나름대로의 교육적 환경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가 시민을 교육한다는 옛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제 교육이 학교라는 공간적 제한과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제한, 교사라는 제공자의 제한 등에서 벗어나



서 도시 어디에서나, 시민 누구나 배울 수 있고, 교육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 개념이 요구된다.

교육의 통합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5년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회의에서 P. Lengrand의 평생교육 이념에서 주창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은 전 세계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평생교육의 통합성을 하나의 도시를 단위로 정책화하고자 하는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평생교육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을 요구하는데, 교육은 물론이고 복지, 노동, 주택, 환경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 행정의 광범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에드먼트의 도시공원관리부서가 시민강좌를 개설한다든가, 피츠버그시의 복지부문이 공공주택부문과 소득원조사업과 협력해 노동훈련을 행하는 등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아





마카사키(尼崎)시나 야시오(八潮)시 등에서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시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영에 평생학습 개념을 핵심원리로 사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다른 영역의 활동과 교육활동과의 연계가 강조된다. 예테보리의 린드호름지식센터는 생산과 실천적 학습과 이론적 학습을 하나의 장소에서 결합할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기계가와시에서는 학습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 교육운동을 하고자 할 때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교육의 문제를 하나의 단위 학교에 국한시켜 생각하지 말자. 현재 여러 가닥으로 영겨있는 학교의 문제의 실태를 풀기 위해서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통합적 협력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학교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생각으로는 계속 깊은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역의 교육적 과제를 지역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적 논의 방식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하나의 도시 전체를 통합적으로 연계·협력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도

시 전체의 협동(collaboration)을 강조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1983년 Knowles가 UNESCO에 제출한 워킹 페이퍼 [평생학습커뮤니티 창조](Creating Lifelong Learning Communities)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이, 도시 안의 모든 교육적 주체들이 모든 교육적 자원과 정보를 네트워크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도시의 교육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학습자원 시스템”(lifelong learning resources system)을 구동시키는 것이다.

한 도시가 평생학습의 장으로 선언하고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이유

(1) 생활환경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는 도시가 매우 긴밀한 장으로서 적절한 규모임. 거기에서는 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참가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도시를 학습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도시는 교육계획에 참가하는 사람의 응집성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만큼 큰 단위가 아니며 기업과 같이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지 않으며, 집단·서클과 같이 너무 작지도 않은 통합적 집단으로서 강한 정체성(identity)이 형성될 수 있다.

(3) 학습을 지역활동에 결부시키는 방법으로서 평생학습이 이용되고, 그것이 목적인대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 특유의 [평생학습문화]가 형성된다. 즉, 생활에의 창조성과 집단으로서의 응집성, 실제적인 지역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나 기업과는 다른 문화가 형성된다.

Begtsson, J., Donald Hirsh(1992). “City Strategies for Lifelong Learning-A Study by the OECD/CERI.” Prepared for the Second Congress on Educating Cities Gothenburg. OECD, CERI.



**전 세계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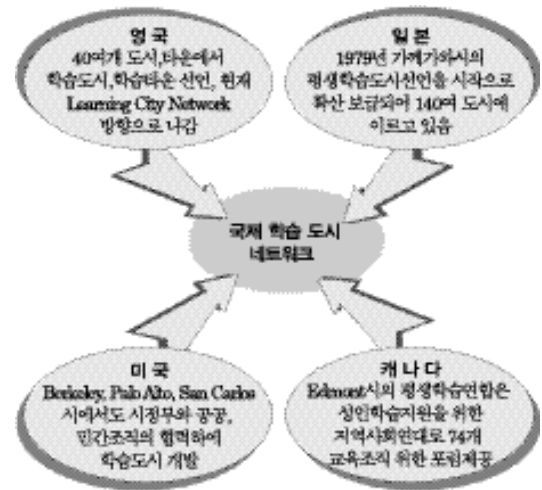
1970년대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자신들의 도시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Lifelong Learning City or Town)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살펴보면 바르셀로나(스페인), 피츠버그(미국), 파리(프랑스), 베를린(독일), 교토(일본), 레닌그라드(러시아), 몬트리올·토론토·에드먼트(캐나다), 볼로냐(이태리), 예테보리(스웨덴), 빈(오스트리아), 애들레이드(호주) 등이며, 1991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차 교육도시회의에서는 47개 도시가, 1992년 스웨덴 예테보리(Gothenburg)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90개 도시가 참여해 서로의 교육경험을 나누고 주민의 교육에 있어서 도시의 역할과 책무를 논의했다.

이 회의의 주제는 “평생학습 교육에 대한 감동적 관점”으로 평생학습이 교육의 새로운 정의라는 공통인식과 함께 교육도시(educational city : EDUCITY)가 어떻게 평생학습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가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이끌고 활성화하는가를 논의했다. 여기에서 “교육도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이다. 교육도시는 그 주민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면적 책임을 질 능력을 가진 도시이다. 교육도시는 그 주민을 위한 형식적인 교육과 무형식적인 교육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교육도시는 교육을 위한 영원한 가능성을 창조하는 문화적 풍토를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1992년 Gothenburg시에서 개최된 OECD회의에서 새로운 도화선이 되어, 영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의 경우 평생학습도시 140개, 영국의 평생학습도시 46개 등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OECD에서는 ① OECD 국가의 60% 국민은 도시에 살며 그들의 생활환경에 학습이 직접적인 관련성을 띠고 있으며 ②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된 교육과 훈련활동에 결합의 긴밀성을 주는 틀을 시 당국은 쉽게

제공할 수 있으며 ③ 학습과 지역사회의 행동을 지원하고 지도할 초점을 도시는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습도시 건설을 적극 지원·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OECD보고서에 따르면 남유럽, 북유럽, 아시아, 남미, 북미,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 26개국 175개 도시가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습도시 운영이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맞이해 도시 및 지역에서의 학습, 생산성, 혁신, 경제 등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앞으로도 행정 및 정치가들이 추진해야 할 주요 아젠다라고 제시한다.

[그림] 평생학습도시 연합



영국의 경우 Nottingham, Liverpool, Thetford, Batley 등이 학습도시와 학습타운을 선언해 발전시켜 현재는 다양한 학습마을, 학습도시를 연대하는(Learning City Network)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학습마을/학습도시 사업에 대해 EC는 공동 재정 지원하는 국제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www.lifelonglearning.ca.uk/learningcities). 그리고 일본은 1979년 가계가와시가 세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으며, 이에 중앙 정부가 평생학습도시 시범시를 지정해 조성

사업을 벌인지 30여 년 만에 140개의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해 이 사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OECD 관점의 학습도시는 지자체를 광역으로 묶어 학습지역(learning region)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지역인적 자원개발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교육구조와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살리기 전략에 평생학습 개념을 접목시키는 가운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평생학습도시는 지역만들기와 인간만들기를 통한 지역재생을 목표로 하며, 지역만들기는 인간형성과 생활향상에 필요한 통합적인 시스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평생학습도시 전략은 OECD에 비해 문화적 요소 및 지역공동체적 요소가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경제 회생, 문화창조, 교육 회생을 위한 통합적인 도시 경영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학습도시의 유형 및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특징	
경제 발전 중심	산업혁신형	지역을 위해 주로 기업체가 주도하는 학습지역 운동으로 산업단지 및 산업 복합단지에서 혁신을 증진시키려는 것을 주된 접근으로 함.
	학습파트너형	교육훈련 제공 및 이용자를 위한 학습 파트너십형은 교육훈련 제공자와 학습자를 위해 자원, 지역사회 학습 파트너십 체계를 형성해 협력을 증진하고 학습여의 권여를 심화시킨.
시민 사회 중심	지역사회 재생형	현대 사회와 같은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역할 또는 정체성 탐색을 목표로 시·군·구 범위에서 종합적이고도 광범위한 재생(regeneration) 전략을 기본 특징으로 함.
	이웃공동체	이웃을 위해 형식적 학습, 비형식적 학습, 성찰적 학습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이웃 공동체 관리를 통해 시민정신의 쇄신을 막고 적극적인 시민정신을 주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웃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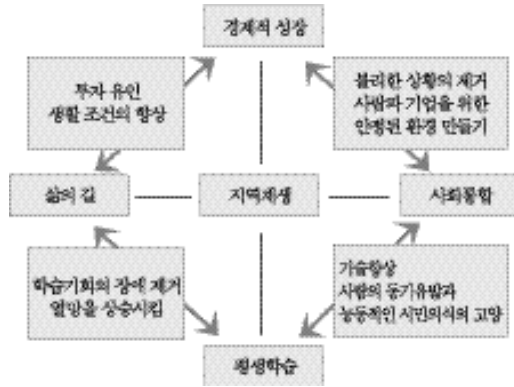
### 학습도시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한다

최근 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지역만들기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주제는 환경, 문화, 정보화, 안전, 건강, 스포츠, 복지, 교육 등 다양하지만 테마가 있는 마을과 도시를 만들어 지역을 재생, 부흥시키겠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테마를 가진 지역만들기 사업 가운데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정보화마을(행자부), 녹색체험마을(농림부), 문화마을(문화관광부)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지역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과밀·과소화는 도·농을 막론하고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환경오염, 교통 문제, 지역 연대감의 약화,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 저하 등이 그것이다. 평생학습도시는 이러한 지역 과제들을 학습 과제로 삼으면서 지역만들기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역만들기는 학습을 통해서 전면적 지역 재생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과 지역발전의 관계는 지역의 경쟁력과 성장의 구동력이 지식과 혁신에 있으며, 지식과 혁신은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는 데 있다. 오랫동안 학습과 지역 재생과의 관계는 서로 연계되지 못했으나 이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정에 기초해 학습과 지역 재생이 강하게 연계될 수 있게 되었다. 즉, 학습은

- ① 도시에서의 경제적 번영과 고용을 강화시킨다.
- ② 도시에서의 평등성, 사회적 통합성, 재생을 증진시킨다.
- ③ 지역과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시킨다.
- ④ 도시 행정의 개선과 지역에의 권한 이양(empowerment)에 기여한다.

여기서 학습도시는 지역 주민들이 직면하게 되는 지역적 과제와 도전에 대해 주민의 자주적 학습을 통해 지역만의 해



(그림) 학습이 지역재생을 촉진하는 과정(Bamsley 모델)

법을 찾아 함께 해결한다는 지역 학습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이에 관련된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의 결성 등으로 이어져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개인적 차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응집력 강화, 경제적 발전 등의 전면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생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도시는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사회적 결속, 재생,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평생학습도시란 교육의 단위를 하나 단위 도시로 놓고 본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게 되며 지역의 모든 교육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최근 시민들의 평생학습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 전략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전략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 근로자교육, 문화교육, 청소년수련활동, 스포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평생학습 개념으로 정책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들이는 재원과 행정 작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로서, 지방화는 집중·통제로부터 분산·자율의 확대로, 획일화에서 다양화로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포함한 교육 제반 사항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교육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부처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영역(교육, 노동, 복지, 여성, 산업, 행정자치) 분할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되어 종합행정, 지방행정, 복지행정으로 나타난다. 주민교육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들이는 재원과 행정서비스의 중복 및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작용이 된다.

결국에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만의 고유한 요구/도전에 대한 지역적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Mt. Evelyn의 The Learning Town Map

있다. 호주의 학습도시 Mt. Evelyn 프로젝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학습도시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적 요구와 도전(local needs and challenges)에 대한 지역적 해법(local solution)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행된 연구와 지역 연계로부터의 피드백은 학습도시·마을의 방향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학습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는 1999년 광명시에서 시작**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도시라는 명칭이 생소하던 90년대 중반에 이미 창원시에서 독특한 실험이 있었다. 창원시는 마을마다 하나의 사회교육센터를 설치했는데 이 사회교육센터는 “동사무소통합에 따른 잉여공간으로 형성된 민원센터 2층을 주민참여의 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복지공간으로 지정, 마을도서관, 사회교육, 문화활동, 청소년공부방 등 각종 모임의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및 전 시민들의 배움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이다. 1995년 시범 운영 당시에는 마을도서관 설립 운동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문화운동을 전개해 오다가 1998년 주민자치운동을 위한 사회교육센터운동을 추진해 주민참여단, 주민모니터 평가,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마을 축제 등을 실시한다. 2002년 현재 27개의 사회교육센터가 마을마다 설립되어 아동, 청소년, 주부, 노인이 함께 모이는 지역 공동체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창원의 뒤를 이어 군포, 김해 등 몇몇 기초자치단체가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본격적으로 평생학습도시사업이 공식적으로 전개된 것은 광명시가 1999년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하면서 부터이다. 이어 광명시는 학습도시 종합센터로서 광명시평생학습원을 설치하고 학습도시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

다.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례 제정, 평생학습원의 설치, 추진위원회의 조직, 학습도시 선언, 평생학습축제 개최, 시민대학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자체가 하나의 행정 권역인 도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체계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난 3년 동안 11개 도시를 지원하고 있다.

<표>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내용

평생학습도시란 시민의 생활권인 도시에서 시민들의 교육

도시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추진 내용
광명시	·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선언(1999. 3. 9)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제1차 지원도시(2001. 10) · 독립기관으로서 평생학습원 운영(2002. 3) ·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개최(2002. 10)
권안군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제1차 지원도시(2001. 10) · 평생학습교을 선포(2001. 11. 15) · 군민 문해조사 및 교육 실시, 정보화교육, 평생생태교육 실시 · 진안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평생학습축제 실시(2002.10)
유성구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제1차 지원도시(2001. 10) ·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주민교육 활성화 · 학습동아리 중심의 조직화
부천시	· 관민 협력 평생학습지원 계획 수립(2002. 3)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제2차 지원도시(2002. 9)
제주시	· 평생학습도시추진조례 제정(2002. 9.)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제2차 지원도시(2002. 9) · 평생교육센터 설치(2002. 10)
해운대구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제2차 지원도시(2002. 9) · 생태환경교육 중심의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 추진
창원시	· 평생교육원설치운영조례(1996. 1. 13) 제정 · 23개 사회교육센터를 지역 대학과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
군포시	· 전국 최초 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 제정(1997. 10.) · 평생학습도시 건설 계획 수립(2001. 2)
기타	· 광명시, 김해시, 인천시, 서울시 등의 시민대학 운영 · 2003년도 신규 지정 도시 : 순천시, 안동시, 안수구, 거창군, 서귀포시





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교육이 다시 어떻게 지역으로 환원되는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개인이 평생학습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 성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변화의 중심적 참여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재정 지원의 단위인 지자체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과 그 지역에서의 평생교육 자원의 활용, 지역의 평생교육기관·단체 간의 협력,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으로서 지역의 과제 등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평생학습도시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의 학습을 소비적으로 인식하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은 지역의 교육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의 과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이에 행정은 다양한 형태로 평생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을 위한 주민과 행정의 협력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읍면동사무소를 기능 전환하면서 개소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의 모임 공간이 확보되고 그 곳에서 많은 시민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도 평생학습도시의 가능성은 숨겨져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앞서 언급한 주민참여의 거점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개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면서 지역 참여에 소극적이다. 해법이 필요한 때이다. 요즘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와 관심, 학습요구, 문화향수 요구 등에만 동력을 발동시킨다는 데 착안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를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참여의 장으로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이 그들의 교양이나 취미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학습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평생학



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 의견교환, 공동 결정, 공동 책임 등의 민주적 훈련을 통한 지역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지역 학습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한다.

이제 지역 전체의 협력의 중요성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주민의 참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를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복지관, 문화의 집,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기관들이 학습 공간 혹은 문화·복지 향수의 공간, 능력개발의 공간이라는 개념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기관들을 통해 주민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내적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자치는 함께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해결함으로써 결국 지역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평생학습도시는 우리의 전통적인 학교교육 중심 사고방식으로부터 지역의 모든 교육적 주체와 자원, 정보 등이 통합적으로 협동하는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가 지역의 교육적 문제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의 지원을 통해 지역 스스로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습도시가 되기를 소망한다. [70]

## 적어도 평생학습은 충분히 '축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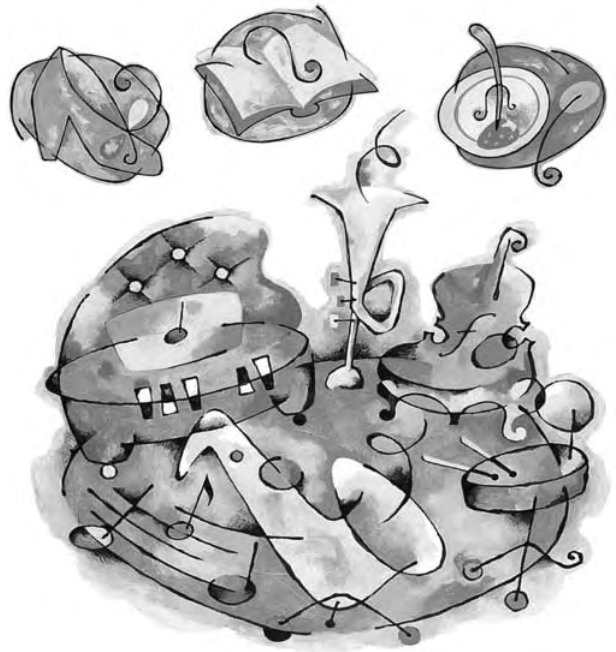
- 평생학습축제를 통한 평생학습문화 확산

변종임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bjongim@kedi.re.kr

사회적 자본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생학습 문화가 촉진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아무리 국민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학습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각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한다면 평생학습 지원 정책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학습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의 정착 여부는 곧 평생학습사회 구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습 문화는 그동안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해 온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학습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편견을 만들어왔다. 학교 교육과 관련 없는 '학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학습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습문화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실시한 일련의 평생교육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데는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평생학습을 하나의 문화로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문화란 단시간 내에 국가가 주도하는 캠페인에 의해서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습을 할 수 있는 물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삶으로 수용하고 학습을 일상의 즐거운 활동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발적 참여와 이에 대한 생활 속에서의 동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인식한 정부는 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제도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도 함께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인 붐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생학습축제'이다. 2001년 제1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천안에서 개최된 이래 2003년 제2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대전에서 개최되었고, 2004년에는 제주에서 제3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전국 단위의 평생학습축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 학습과 축제, 어울리는 관계인가?

축제를 의미하는 영어 'Festival'은 라틴어 'festum'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반적인 기쁨, 환락, 흥청망청 떠들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현상을 주제로 한 공공의 기념 행사라는 뜻을 가



지고 있다. 축제는 원래 종교적인 제의(祭儀)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 축제의 고정(固形)인 제천의례(祭天儀禮)는 농한기에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음주가무하며 즐기는 것이었다.

전통 축제는 그 시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체취와 문화적 색깔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농경·목축 시대에는 특정한 날을 정해 신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마음껏 먹고 춤과 노래를 즐겼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의 피로와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을 뒤로 하고, 신분 계급의 고하를 떠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인간으로 돌아가 일탈 행위를 만끽하였다. 여기에는 경제적 활동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작위적인 연출이 요구되었던 것도 아니며, 관객과 주최의 구분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자발적 의미가 강하게 함축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제의 종교적 제의 부분은 줄어들고 유희성과 예술적 요소가 강화되면서 축제의 신성성은 거의 퇴색되어 갔다. 오늘날 축제에서 제(祭)는 사라지고 축(祝)만이 남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축제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축제'와 '학습'이란 개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축제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즐기면서 재미있게 논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평생학습은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배움의 활동이다. 의자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배움의 시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가와 즐거움이라는 환경을 전제로 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의 배우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내재해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맛본다. 이렇게 학습은 놀이와 여가, 즐거움 등으로 연결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일본 야마가타(山形)현의 평생교육센터는 '유학관(遊學館)'이라 불리는데, 이는 놀이와 학

습의 근본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센터에는 3층 높이의 시계탑이 중앙에 놓여 있는데, 바람개비와 줄넘기, 가위바위보 등의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형상이 어우러져 있다. 우리도 이제는 학습이 어렵고 지겨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배워서 개인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이클이 생활 속에서 전개된다면, 축제는 학습과 너무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개념이 될 것이다.

### 평생학습축제, 한해 동안의 결과를 알리는 장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의 확산을 목적으로 평생학습의 의의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스스로 학습하는 의욕을 환기시키기 위한 문화 운동이다. 평생학습축제는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 학습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각자의 평생학습 참가를 촉진시키며 평생학습을 가일층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해 동안 여러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평생 학습자들이 쌓아온 결과를 한자리에서 전시·발표·시연함으로써, 평생학습자에게는 평생 학습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평생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시켜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평생학습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평생학습을 진흥시키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평생학습축제는 이와 같은 평생학습사회의 이상을 근본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학습과 관련된 가능한 모든 상황들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어 학습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초교육, 직업교육, 일반적인 성인교육 간의 전통적인 경계 위에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평생학습이 개개인의 발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여여기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초가 되어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지역사회를 창

조하고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 평생학습의 활성화, 사람들에게 학습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새로운 학습 집단 참여 장려, 평생교육기관 간의 유기적 연대와 협력 증진, 학습자 및 학습 동아리 발표, 평생학습에 영향을 주는 쟁점 사항 부각, 평생교육정책의 위상 고양, 학습의 즐거움을 알리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축제는 개인의 일상 생활과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학습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시에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 체계 구축을 활성화시키며,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시키고, 평생학습 사례와 학습결과를 공유함을 통해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데 실천력을 지닌 문화운동이 될 것이다.

**평생학습축제의 핵심, 시민의 자발적 참여**

평생학습축제는 학습자들과 평생교육기관에 평생학습의 장과 성과 발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학습자와 평생교육시설이 하나로 어우러져 학습자들의 평생학습의욕 고취, 평생학습 참여 촉진,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평생학습의 성과 축하 및 공유 등을 가능케 해, 궁극적으로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도모하는 학습, 문화, 스포츠, 복지 등이 복합된 종합 축제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평생학습축제의 핵심적 특징은 바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있다. 축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겁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축제라야 시민들이 마음을 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즐거움이라는 요소는 시민 참가의 범위를 넓혀 주며, 유익함이라는 요소는 축제의 깊이를 더해 준다. 또한, 아름다운 것은 축제가 가지는 이미지를 높여 준다.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증가는 축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질과 양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단순히 관람하는 축

제는 더 이상 매력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최근의 많은 축제들에서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을 고려하기 시작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생학습축제는 기존의 축제나 이벤트와 다른 특징적인 요소를 갖는다. 또한 평생학습축제는 이미 출발부터 학습자인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축제인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 평생학습이 축제가 되려면**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 지역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축제에 대한 자치 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지방 자치 시대의 지역 문화 축제는 대단히 소중한 문화 자산이요, 지역 시민의 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축제가 의미를 가지려면 전통축제가 갖는 제의성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그것에 부합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대체 요소로서 지역의 특산품을 상품화하여 상권을 강화하기도하고 역사적 인물의 재현도 실시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축제와 연결지어 제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습'이다.

인간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에 대한 자아실현의 욕구와 연결되는 평생학습은 전통적 축제의 제의성을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축제에서 '축제를 왜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인간의 생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학자는 축제가 없는 민족은 살아서도 산목숨이 아니고 죽어서도 고이 잠들 수 없다고 했다. 그만큼 축제는 그 민족을 대변하면서 인간의 문제에 근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지식 기반의 학습 사회 시점에서는 그 해답을 평생학습축제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제의를 대신할 축제의 또 다른 축으로서 평생학습은 지역 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위해 전통적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두었던 삶의 장을 연결할 대동적 판놀이의 모델을 개발해 할 것이다.



이럴 때 제의의 성격과 함께 놀이의 일면을 지닌 축제의 원 뜻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용과 질이 알찬 학습의 불 거리와 참여거리가 풍성한 평생학습축제는 축제 주체의 새 로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평생학습축제는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인에게 어떤 의 미를 던져 줄 수 있을까? 특히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의 삶이 상실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습축제는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 가?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둔 다. 지역 사회와 축제의 현대적 의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질 높은 정신적 삶'에 대한 추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 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사회 구성원간의 동질성 공유를 그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가 '우리'라는 개념보다 는 '나'라는 해체적 개념이 강한 현실에 비춰볼 때 평생학습 축제는 '우리'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것이다.

**지역시민들은 교육, 문화에서 가장 큰 소외감을 느낀다**

평생학습축제와 지역 축제가 연계된다면 시민들의 주인의

식 고양은 물론, 시민들에게 배움에 대한 열망과 즐거움을 공 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평생학습축제는 학 습 동아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 축제가 갖고 있는 시민 의 비자발적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축제 모형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학습축제는 학습을 통해 개인의 삶과 지역 사회가 어 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학습자에게 학습의 기회를 더욱 넓혀 주어, 학 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학 습의 영역에 걸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의 평생학습 문 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평생학습축제는 성인의 학습 이 사회 발전을 위한 권리이자 수단이며, 민주적이고 생산적 인 지역 사회를 창조하고 강화하는 주요 요소로 기능하도록 하는 생산적 지역 축제의 모형으로 자리잡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 시민의 참여를 통한 학습 문화 조성은 평생학습사회 의 토양을 기꾸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 지역의 정책 수행 활동들은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자리 잡 고 있는 시민사회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역 사회 조직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각종 제 도들이나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시민 주 도적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조직 과의 연계를 통한 풀뿌리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 참여 평생교육 협의회 주도의 지 역 평생학습축제를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평생학습 주관을 설정하여 지역 내 기관별, 소지역별 평생교 육 관련 행사 발굴 및 연합 행사를 지원하고, 주민의 자치 능 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를 경 쟁적으로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시민들은 여전 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인식 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시민들은 특히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





서 가장 심한 소외감을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것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의 빈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학습문화의 발전이 참여 지향 민주시민 의식 제고에 영향을 미쳐 자치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평생학습이 필요한 이유**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축제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평생학습축제는 학습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한다. 평생학습은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서가 아니라 내재된 학습 본능을 되살림으로써, 학습은 즐거운 것, 삶의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 자연적인 것,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것, 그리고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학습의 본질을 회복시킬 것이다.

둘째, 학습 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한다. 평생학습축제는 일반 학습자와 평생교육시설이 하나로 어우러져 학습자들과 평생교육기관에 평생학습의 장과 성과 발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평생학습의욕 고취,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 촉진,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평생학습의 성과 축하 및 공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켜줄 것이다.

셋째, 자발적 학습 동아리의 생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평생학습축제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자발적 학습 동아리의 학습 성과를 발표하고 홍보하는 데 있다. 자발적 학습 동아리의 형성이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을 조성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행사는 학습 동아리의 생성과 유지에 큰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향하여 힘을 모으고 있는 이 때, 우리는 평생학습축제라는 이정표를 굳건히 세워

서 우리가 가야 할 창조적 지식 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민주시민이 자라날 토양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거, 국가 주도적인 권위주의적인 발전 모델로는 기업, 개인과 같은 경제 주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평생학습문화 확산은 시민사회 발전을 통해 곧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가능케 할 것이다.

평생학습은 개인과 집단의 '성장'을 담보해준다. 오늘날처럼 지식과 기술이 급속히 팽창하고 갱신되어가는 시대에서는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배움' 없이 그 누구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평생학습을 토대로 개인과 집단이 성장해갈 때만이 지역 사회와 국가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의 기본 정신은 '참여'이다. 지역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공동의 관심을 놓고 함께 공부하며 토론할 때, 우리 사회 어디서든 진정한 시민의 참여가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평생학습은 '혁신'을 지향한다. 현재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변화하고 싶은 사람만이 하나 더 배우고자 하며, 더 배운 사람만이 변화의 물결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생학습은 사회 혁신의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평생학습의 궁극 지향은,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모습과 같다. 누구나 원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바로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K20]

# 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사회의 믿을 만한 전야

- 학습동아리: 평생학습사회의 프랙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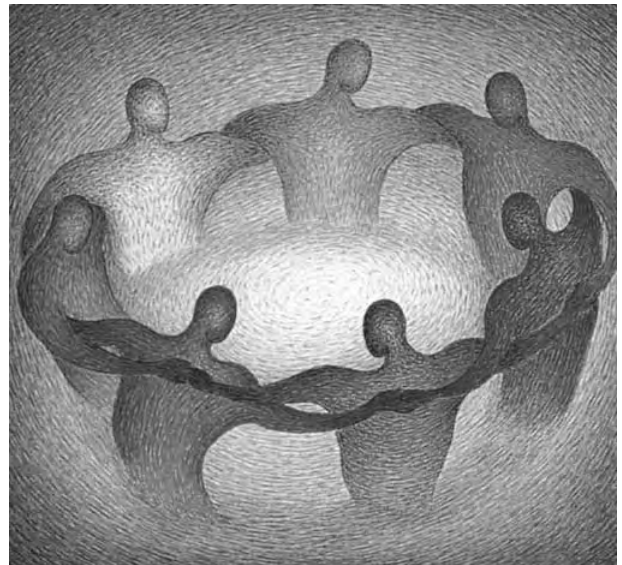
이지혜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jihye@kedi.re.kr

평생교육 관련 과목의 한 학기 강의를 마칠 때쯤, 학생 중 누군가가 실컷 강좌를 다 듣고서는 “그런데, 평생학습이 뭐예요?”라고 물을 때만큼 곤혹스러운 순간은 없다. 그만큼 내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강사인 나에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종종 ‘평생교육’, 혹은 ‘평생학습사회’라고 말은 익숙하지만 정작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물론 이 예상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준비해 두고는 있지만, 질문자를 완전히 만족시킨 채 대화를 끝내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평생학습이란 것이 ‘학교’처럼 가시적인 무엇을 지칭하기보다는, 여간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 사회 내 학습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원리이자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소모임 학습활동인 ‘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사회의 한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기에 적합하다. 하나의 작은 학습동아리에서는 거시 평생학습사회의 숨은 그림을 엿볼 수 있다. 얼핏 보기에 무질서한 혼돈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질서를 담고 있는 평생학습의 카오스 안에서, 학습동아리는 학습사회의 특성이 압축해서 들어 있는 일종의 프랙탈 구조와 같기 때문이다.

## 학습동아리는 사교나 친목 모임이 아니다

그렇다면, 학습동아리는 무엇인가. 학습동아리란 스웨덴이나 미국에서의 스타디서클(study circle) 또는 호주의 학습서클(learning circle) 또는 일본의 자주(自主)그룹과 유사어로 같은 주제에 관심 있는 성인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소모



임을 뜻한다. 보통 5~15명 내외의 성인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관심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다. 나라마다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본래는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부딪치는 문제에 대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찾거나 생각해 보는 이슈 중심 토의가 중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학습동아리활동은 구미의 스타디서클보다는 폭넓은 개념으로 쓰여, 주제 특성의 제한 없이 성인들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함께 배우는 소모임 일반을 가리킨다. 그러나 학습동아리는 단순히 친목 위주로 모이는 소모임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학습동아리’를 규정하는 준거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학습동아리’는 “일정한 인원의 성인들”을 운영주체로 한다. 즉, 청소년들의 모임은 배제되며, 성원이 4~5명이

내로 지나치게 적거나, 3~40명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다면 소모임의 성격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제외하는 것이 좋다.

둘째, '학습동아리'는 결성과정에서의 "자발성"을 기초로 한다. 일정 조직이나 기관의 직간접적 강제 혹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학습동아리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민주적·자발적 결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

셋째, '학습동아리'는 사교나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아니며,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지닌다. 즉, 성원들 사이에 합의된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며 개인과 집단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학습동아리'는 "정기적인" 만남을 원칙으로 한다. 학습동아리는 일정한 규칙에 따른 지속성을 원칙으로 하는 소모임이다. 모임 주기는 한 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등으로 다양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이루어지는 점이 중요하다.

요컨대, 일반 소모임은 목적이나 활동내용의 제한 없이 주로 친목과 상호교류를 위한 성인들의 자발적인 모임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학습동아리는 소모임 중에서도 '학습'과 '토론'을 주목적으로 모이는 집단으로 한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예컨대, 동문회, 향우회, 조기축구회 등이 소모임이라면, 각종 독서모임, 연구모임 등은 학습동아리에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모임이 학습동아리로 전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학교의 학부모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자모회가 함께 개별 학교 혹은 지역 내 교육문제를 걱정하고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정기적인 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소모임이 학습동아리로 발전한 것이라 하겠다.

#### 왜 지금 학습동아리인가

몇몇이 모여 같은 관심사를 놓고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



는 것은 사실 그다지 놀랍거나 새롭지 않다. 예전에 겨울날의 사랑방에 둘러앉아 보고 들은 도시 사정을 주고받거나 마을 일을 함께 의논하던 모습도 그러하고, 1960년대에 마을문고 보급을 주도했던 독서회운동이나 1970년대와 80년대의 민중교육 역시 소모임 학습을 주된 학습방법으로 활용했다.

학습동아리는 '오래된 아이디어의 새로운 발견'이다. 근래 들어, 학습동아리란 용어의 사용이 부쩍 빈번해지고 국가와 지역 차원의 정책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 가운데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곳이 전체의 27퍼센트로, 약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에서도 학습동아리 활동을 향후 평생교육 정책과제 중 한 가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만큼 학습동아리는 차츰 일반적인 현상이자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왜 하필 지금 학습동아리인가. 학습동아리가 무언가 이 시대의 변화와 상통하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에서 우리는 학습동아리가 평생학습사회와 어딘가 닮은꼴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1. **닭은꿀 하나 : 새로운 학습커뮤니케이션의 등장**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추구하는 학습동아리는 새로운 학습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도래를 상징한다. 학습동아리는 전체적인 진행을 조율할 수 있는 리더는 있지만, 그 누구도 지식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독점하지 않는다. 학습동아리에서는 성원 누구든지 자신이 알고 생각하는 바를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성원이 전해 주는 지식의 경청을 원칙으로 한다. 지식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부딪쳐 흐르는 가운데 새로운 지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학습동아리의 학습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이거나 불균형하지 않다. 그동안의 학습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지식과 정보 전달의 양과 질에 있어서 대체로 일방적이었다. 교과와 교사로 대표되는 '발신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학습자들은 '수신자'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학습자는 발신자의 신호를 전량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으며, 나름대로의 해석과 주석을 달 수는 있지만 스스로 '발신'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학습동아리에서는 다르다. 모든 학습자들은 지식의 '수신자'인 동시에 '발신자'가 된다.

평생학습사회 역시 그러하다. 인터넷 매체를 계기로 지식소통의 양상은 급격한 대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학습자들은 유례 없이 다양한 지식의 발신 모드와 수신 모드 속에서, 새로운 학습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어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카페'라고 불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블로그(blog)' 그리고 '지식거래소' 또는 '지식센터' 등의 이름이 붙어 있는 지식검색 메뉴 등은 학습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요즘은 무엇이든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임 필요가 없다. 그저 인터넷 어떤 포털사이트든지 들어가 지식 검색창을 열고 질문을 올리고 나면, 거의 실시간으로 수많은 친절함 리

플(답변)이 달린다. 정말로 자질구레한 지식을 주고받던 지식검색 메뉴는 조금씩 체제를 이루어 하나의 유기체로 성장해가고 있다. 질문과 답변을 촉진하는 도우미 역할을 정해서 소통의 양을 확대하는 한편, "노하우" 공유 코너, 주제별 "지식클럽" 개설 등으로 질적 수준 역시 높여가고 있다. 모 포털사이트에서 내세우는 슬로건 그대로 "묻고 답하는 지식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경제 일간지에서는 이 분야에 상업화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자료를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지식 거래시장'을 인터넷사이트에 개설하고 있기도 한다.

웹로그(Web log)의 줄임말인 '블로그' 역시 새로운 발신 모드의 전형이다. 블로그란 인터넷에서 일기처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짧은 글들로 이뤄진 웹 페이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식과 주제를 갖고 있다. 일기장 형식으로 그날 그날의 자기의 일상사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포토로그(photo log)라 사진 자료를 모아 웹에 올리는 곳도 있다. 또한 문학, 자동차, IT 기술 등 다양한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까지 블로그를 통해서 다루어진다. 그래서 블로그는 '1인 미디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눈부신 속도로 주제가 다양해지고 참여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주로 '발신'한다는 점에서 블로그는 예전의 일방적 독점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르다. 참여 여부가 자유롭고, 누구든 의견을 남기고 블로거가 다시 대답을 남기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교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이 특정 대상에게, 정해진 내용의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폐쇄적 발신이었다면, 최근의 지식 소통방식은 쌍방 소통과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는 일종의 '개방형 발신' 모드를 취하고 있다.

학습동아리는 학습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폐쇄형 발신'으로부터 '개방형 발신'으로 전이되어 가는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 지식네트워크 안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자유로이 맺어져 서로의 성장을 돕는 사회는 바로 평생학습사회의 이상이며, 학습동아리 안에서 현재 그 이상은 소규모 시뮬레이션을 거듭하고 있다.

### 2. 님은꼴 둘: '個'와 '共'의 조화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에서는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마음의 위기'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의 결여, 그리고 '個'와 '共', 즉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굳이 일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가 붕괴하는 정도만큼, 공동체에 대한 회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근래의 사회변화는 공동체 문제 해결의 접근방향이 달라져야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은 공동체에 '속하는' 존재였다. 공동체라는 대의(大義) 아래, 개인들은 하나로 결집했으며,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가장 올바르고도 숭고한 삶의 양식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더 이상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려 들지 않는다. 개인과 공동체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개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애써서 자신을 입증할 필요 없이, 자신이 속한 계급, 가문, 부족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전 세대와 달리 지금 세대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부유(浮游)하는 현대인을 일컬어 '유목민'이라 칭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속을 추구한다. 움아매지는 않되, 자신을 표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유니폼을 입고 싶지는 않지만, 서로의 취향과 관심은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비슷한 분위기는 갖고 싶은 것이다. 이제 개인은 자신이 속하고 싶은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그 공동체를 더욱 자신에 맞도록 변화시킨다. 개인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공동체가 개인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합집산이 비교적 자유로운 학습동아리만큼 적합한 예를 찾기도 어렵다. 형태상 개인과 집단의 접이 지대에 있는 학습동아리는 개인적 이되 개인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며, 공동체이되 획일적이지는 않다. 학습동아리는 '개인화'된 '공동체'이다. 개인의 관심 안으로 공동체가 영입되고, 공동체는 다시 그 개인들 안에서 사적인 담론을 넘어선 공공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스스로를 확장해 간다. 학습동아리에서 현대인은 자신의 디아스포라를 멈추고 잠시 거하며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적인 영역을 넘어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얻는다.

### 3. 님은꼴 셋: 학습의 의미 변화

학습동아리는 자발적 참여 위에 성립한다. 언제든 구성할 수 있지만, 동시에 언제든 깨질 수도 있는 것이 학습동아리이다. 학습동아리는 참여여부에 대한 특별한 강제도 없으며, 그곳에서 학습한 결과로 근사한 졸업장이나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거의 없다. 기껏해야 함께 공부한 결과를 갖고 자원봉사 활동이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발표회 형식으로 그동안 배운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정도이다. 따라서 학습동아리는 모여서 함께 배우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 않는 한,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습동아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학습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언제나 다른 무엇인가로 환산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았던 학습자들이 이제는 서서히 학습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학습동아리는 함께 배우고 나누는 집단학습의 장이





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평생학습모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배우고, 교사는 단지 지식의 소스만을 안내해 줄 뿐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며, 학습자는 개별화된 학습계획을 세워 자신의 학습활동을 추진해간다. 또 학습자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데, 특히 집단 속에서 서로서로에게 배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사회란 학습의 과정이 곧 학습의 성과가 되는 사회이다. 다른 무엇을 위하여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그 자체를 즐기고 그 과정 자체를 가치있게 인정하는 사회가 바로 학습사회이다. 이 가운데, 학습동아리는 학습의 즐거움이 있는 학습사회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학습동아리의 확산은 평생학습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

평생학습사회와 학습동아리와의 상응성은 많은 부분, 아

직까지는 '가능태' 일 뿐 '현실태' 는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학습동아리' 는 외국의 그것에 비해, 주제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 중심이어서 다소 폐쇄적이고, 학습성원 개인이 수용하는 사회의 차원이 더 큰 범위로 확장되어 가는 연결고리가 취약한 편이다.

평생교육정책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준거를 제공하는 것이 주 임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개별 학습동아리가 폐쇄성, 개별성을 벗어나 개방성과 공공성을 진지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협의회를 매개로 학습동아리에 대한 재정과 지도자 연수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으며, 미국에서는 민간재단의 지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학습동아리지원센터(SCRC)에서 지속적인 자료개발과 연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일부 평생학습기관에서 학습동아리활동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아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평생학습축제의 장을 이용하거나, 민간단체 자체적으로 우수한 학습동아리를 선정하는 행사를 가짐으로써, 학습동아리를 견인하려는 시도들은 바람직하다.

학습동아리의 확산은 평생학습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이다. 이제 그 징조를 확실하게 펴뜨려야 하는 과제만이 남아 있다. [20]

# 영국 평생학습정책의 제3의 길을 찾아서

- Learning Age로부터 Learning to Succeed까지

이희수 | 중앙대학교 교수, heesu@cau.ac.kr

## 멋진 영국건설의 성패는 '학습시대'에 달려 있다

원래 필자가 의뢰 받은 제목은 「학습시대」(Learning Age)에 대한 소개였다. 1998년도의 「학습시대」를 세기가 지난 2004년에 내놓기엔 다소 신선도가 떨어진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이 영국 교육개혁을 모델로 하여 영국 교육부 사람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한때는 영국을 배우자는 방문 열풍이 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블레어 정부 초기의 교육정책을 보면 국민의 정부 초기의 교육정책이 보인다. 1997년 5월 총선을 통해 18년 만에 압도적인 차이로 보수당을 물리치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집권 2개월만인 7월에 학교교육 백서인 「학교교육 수월성」(Excellence in Schools)을 내놓은데 이어 1998년도에는 「학습시대 : 신영국 건설을 위한 르네상스」(The Learning Age: a renaissance for a new Britain)를 발표하였다. 신영국, 멋진 영국 건설의 성패가 학습시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이 알팍한 두 문건은 블레어 정부 초기의 교육개혁의 청사진이란 점에서 「학습시대」를 다시 학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학습시대」에 대한 재조명뿐만 아니라 「학습시대」가 탄생한 다음과 같은 맥락을 짚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먼저 18년 간의 보수당 정권으로부터 노동당 정권으로의 정권교체와 제3의 길에 대한 이해는 학습시대의 서막을 알린다. 블레어의 브레인인 기든스의 제3의 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학습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기에 「학습시대」를 읽기 전에 기든스의 「제3의 길」(1998)과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1999)을 펴든다. 물론 제3의 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제3의 길은 앵글로색슨족의 사회적 산물이자 무



정형적이고 방향감 없는 정치적 프로젝트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기본 틀을 받아들이면서 좌파 고유의 시각을 견지하는데 실패해 결과적으로 보수주의로 빠지고 있다. 또한 시장이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만한 차별화되는 경제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해 '핸드백만 들지 않은 미세스 대처'로서 본질적으로 우파의 철학이라는 비판으로 요약된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보수당의 교육 논조를 크게 탈피하지 않아 영국의 평생교육하면 여전히 우리의 뇌리에는 그저 경쟁력 제고만을 위한 개인 책임의 시장주도 모델로만 남아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학습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에 비판을 더 없으려는 데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3의 길의 환경(그



가 말하는 딜레마), 기본 가치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만을 공유하고자 한다. 기든스는 제3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세계화', '신개민주의', '좌파와 우파', '정치적 행위', '생태환경적 쟁점'으로 제시한다. 기든스는 '제3의 길'이란 이와 같이 새로워진 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적응시키고자 하는 사고와 정책의 틀인 동시에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로 정의한다. 기든스에 따르면 제3의 길 정치의 목표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혁명들, 즉 '세계화', '개인 생활의 변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길을 개척하도록 돕는 데 있다. 기든스는 제3의 길의 가치를 '평등', '약자보호', '차용성으로서의 자유', '책임 없이 권리 없다', '민주주의 없이 권위 없다', '세계주의적 다원주의', '철학적 보수주의'로 열거한다. 이어서 제3의 길 프로그램으로 '급진적 중도', '새로운 민주국가(적이 없는 국가)', '활발한 시민사회', '민주적 가족', '신혼합경제', '통합으로서의 평등', '적극적 복지', '사회 투자 국가', '세계주의적 민족', '세계적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제3의 길 프로그램에서 평생학습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하위 프로그램은 '적극적 복지'와 '사회 투자 국가'이다. 그의 중요한 말만 간추려서 거의 그대로 옮겨보면 평생학습이 적극적 복지이고 최상의 사회적 투자 전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영국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일하기 위한 복지'(welfare to work)가 한국에 건너와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로 제3의 길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으로 리브 랜딩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글로벌 지식경제 시대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본을 통해 '복지국가'에서 '사회 투자 국가'로 전환하는 데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을 시사받는다.

이제 교육과 훈련은 사회민주주의 정치가들의 새로운 주문(呪文)이 되었다. 토니 블레어는 정부의 세 가지 주요 역점 사업을 '교육, 교육,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교육에 대한 투

지는 오늘날 정부의 필수 사업이고, '가능성의 재분배'를 위한 핵심기반이다. 정부는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개인들이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일생동안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한다. 교육은 평생학습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무조건적 국민보험 급여에 의존하는 대신에 저축, 교육자원과 다른 개인적인 투자기회를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지 대신에 생의 지속적인 부분으로서의 교육이 적극적 복지의 핵심 요소이다. 명심할 지침은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되도록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국가 대신에 적극적인 복지사회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사회 투자 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건설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당 정부가 신노동당(New Labor) 가치를 내걸고 왜 제3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정치적 변화에 상응하는 경제적 변화에 관심을 돌리게 한다. 영국 정부는 1998년 12월에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경쟁력 있는 미래 : 지식주도경제 구축」을 발표했다. 제3의 길을 걷고자 하는 영국은 발 빠르게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을 지식기반경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다. 지식주도경제의 핵심 경쟁력을 지식(knowledge), 숙련(skill), 창조력(creativity)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생애사적으로 창출/관리되는 과업으로 보았다.

이쯤에서 기든스의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1999)에 실린 지식경제론 편을 보면 산업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노동당의 지지기반이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인 블루칼러에서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식 근로자(wired workers)인 화이트칼러 신중간 계급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전통적인 노동당에서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 기든스의 말을 빌리면 지식경제가 아직은 천하를 제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도상에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가속도적으로 맞물려 경제활동의 성격 자체가 지식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지식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직접적으로 물화를 생산하지 않는 지식 근로자들이다. 지식 근로자들의 노하우가 회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재산형태이다. 상품의 생명주기도 심지어는 시간단위로까지 더욱더 짧아지게 되었다. 지식의 양과 가치는 증폭하는 데 지식의 생명주기는 짧아지고 인간의 수명은 길어만 간다. 여기에 정부 당국자와 인류의 고민이 쌓인다. 헤비급이 라이트급을 이기는 세상에서 라이트급이 헤비급을 이기는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이무리 지식 데이터베이스가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지식은 결국 교육을 통해 사람의 몸에 체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지식 사회의 최고의 자원은 인적자원이다. 지식기반경제는 인적자원기반경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보았듯이 지식기반경제론이 인적자원개발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적자본개발에 있어서 핵심적 힘은 교육이어야 한다. 제3의 길의 경제적 정책은 교육, 인센티브, 기업문화, 유연성, 분권화 및 위양, 사회적 자본의 배양에 두어야 한다. 이제는 독점과 경쟁력 못지 않게 파트너십과 협동이 중요하다. 교육은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로, 평생학습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학습과 망각(낡은 습관을 버릴 수 있는)은 지식경제 시대의 일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평생학습이 할 일감도 다름 아닌 지식경제가 필요로 하는 양대자본인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 투자 및 재투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주문(呪文), '교육 교육 교육'**

**1. 둘러보기**

비슷한 시기에 우리는 '지식, 지식, 지식'이라는 주문을 '옴매흠 반매흠' 처럼 외우고 다녔다. 기억에 떠오르는 것만도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신지식인', '지식경영', '지식기

반경제', '지식기반사회' 등 지식타령 일색이었다.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을 노래했다. 교육은 블레어 정부의 주문이었다. 영국 교육고용부 입구에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영국에 다녀온 사람의 말이 인상적으로 들렸다. 이른바 신영국 건설을 위한 영국판 교육입국 선언문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당 정부의 평생학습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시대」와 「성공을 위한 학습」을 조명하기 전에 교육부의 조직 변천, 학교개혁 방향, 그리고 최근 평생학습정책을 잠시 둘러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교육과 고용/기술 연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교육부 개편이다. 80년대 영국 교육부의 기능은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개발뿐만 아니라 과학정책기능, 연금관리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연금관리 기능을 민영화하고 과학정책기능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해 교육 정책 기능에 자원을 집중했다. 또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 개발을 교육부의 핵심기능으로 정해 95년 노동부의 직업훈련과 교육기능을 흡수, 교육고용부로 출범했다. 과거 노동부의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기능은 교육고용부가 가져가고 건강·안전표준관리는 환경부, 산업관계·임금이슈·중재서비스는 무역산업부, 고용통계는 통계청으로 각각 이관됐다. 이어서 2001년 6월 노동당 재집권 후 정부조직을 부분 개편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고용부에서 고용서비스청을 신설된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에 넘겨줌으로써 그 명칭이 교육기능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교육기능부는 직접적인 고용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고용부에서 개발된 직업교육, 재취업훈련 등 학교와 기업을 연계하는 기능은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교육기능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기회창출', '잠재성 발현', '수월성 성취'이다.

둘째, 1997년 5월 총선을 통해 18년 만에 압도적인 차이



로 보수당을 물리치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집권 2개월 만인 7월에 교육백서인 「학교교육 수월성」(Excellence in Schools)을 내놓았다. 제목이 말하듯이 노동당 정부하면 '평등'을 강조했을 것 같은데 예상과는 달리 '수월성'이었다. 수월성을 중심으로 노동당 정부가 추구할 6대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은 정부의 중핵 사업이 될 것이며, ②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될 것이며, ③ 개혁의 주안점은 구조 개혁이 아닌 수준 향상에 있을 것이며, ④ 성공에 따라 간섭을 차별화할 것이며, ⑤ 교육성도가 미달할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⑥ 정부는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지역사회, 학부모, 교사, 학교 당국, 기업체 등)과 파트너십 관계 속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평생교육정책에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

셋째, 영국은 오랜 성인교육의 나라이다. 평생학습에 관한 학술적 담론이 가장 활발한 나라이다. 다양한 평생학습정책의 실험실이기도 하다. 평생학습이란 용어의 기원은 재건부 성인교육위원회가 성인교육은 국가가 영원히 필요로 하는 것이며, 성인교육과 시민정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성인교육은 누구나 평생 누려야 하는 보편성(universal)과 계속성(lifelong)을 특질로 한다고 주장한 19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지만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지배적으로 사용된 핵심 용어는 '성인교육'이었으며, 내용 면에서는 인문 자유주의적 성격을 견지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성인교육은 다른 용어로 대체되었는데 그것도 보다 더 팽창적인 용어인 Faure 식의 '평생교육'보다는 '계속교육'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평생학습이라고 해도 학습 집단에 따라 각각 달리 분절된 경험으로서의 평생학습이었다. 1980년대는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기회 확보를 위한 투쟁의 기간이었으며 보다 더 직업교육 중심으로 경도되는 평생교육이었다. 이어서 1990년대는 시장주도의 평생교육 팽창과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린 시기라고 구별할 수 있다. 물론 1990년대에 평생학습이 교육정책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데에는 1996년에 OECD는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을」, UNESCO는 「학습 : 우리 속에 있는 보물」을, EU는 1996년을 「유럽 평생학습의 해」로 선포했으며, 지식 기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국제적 맥락을 갖는다. 가히 국제적으로는 수사적 수준에서 평생학습 주술의 시대라고 부름직하다.

## 2. Learning Age

최근 영국의 평생학습정책의 시대구분론을 시도한 Ann Hodgson의 지적대로 「학습시대」는 블레어 노동당 정부 평생학습정책의 첫 번째 문서로서 과거 보수당 정부의 잘못된 유산과 시장주도의 경쟁적 교육훈련 시스템의 해로운 영향을 걷어 내려는 신평탄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그런데 블레어 취임 후 지식기반경제를 주도할 양대 교육정책으로서 내놓은 첫 번째 평생학습정책 청사진이라고 할 정도로 주목을 받은 문건임에 틀림없으나,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백서'가 아니라 '녹서'(green paper)이다. 녹서는 아직 논의 단



계에 있는 사안에 대한 제안서를 말한다. 모든 형태의 협의문서, 심의문서가 독서에 해당한다. 백서(white paper)란 정부에서 펴내는 공식적인 정책 보고서와 정식 법안으로 공포되기 이전에 법안변화 내용에 관한 제안서를 백서라 칭한다. 「학습시대」자체가 협의용 페이퍼(consultation paper)로 나왔으며, 최종 백서는 협의와 여론을 거쳐 그 다음해인 1999년에 나온 「성공을 위한 학습」(Learning to Succeed)이다. 그러므로 노동당 정부의 평생학습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시대」와 「성공을 위한 학습」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습시대」의 취지, 비전 및 원리, 주요 내용을 제시하는 순으로 살펴보자.

첫째, 「학습시대」취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당시 교육고용부 장관인 David Blunkett의 발간 서문부터 읽어야 한다. 자주 인용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학습은 국가 전체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번영을 여는 열쇠이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21세기 세계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성공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학습을 정부 비전의 심장으로서 삼는 이유이다. 우리의 첫 번째 정책 문서인 「학교교육수월성」에서는 학교의 기준을 언급했다. 이번 독서는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고취하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강조함으로써 평생학습이 어떻게 하면 인적 자본을 형성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 탐구정신과 학습애호의 조성이야말로 우리 미래에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면서 6차 원칙으로 「학습시대」를 대국민에게 설파해 나간다. 「학습시대」가 필요한 이유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전과 기회에 평생학습을 통해 양질의 인적자본을 개발함으로써 개인, 기업, 국가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있다. 여기서 평생학습은 고용가능성과 자아실현에 필수적인 지식, 기능, 이해를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대상은 모든 사람이며, 학습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파트너십 정신 아래 다양한 평생학습 증진 사업을 같이 전개

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학습시대」의 비전과 원칙에 관한 논의이다. 비전은 공부를 사랑하는 학습문화를 꽃피우는 일이다. 학습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가능하다. 학습문화를 꽃피우는 일은 경제적 도전일 뿐 아니라 사회적 도전이다. 정부의 역할은 사람들이 학습할 기회열개를 창출하도록 돕고, 학습기회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데 있다. 우리는 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학습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 우리는 함께 자기향상과 학습애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한 6대 원리는 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 ② 학습에 대한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③ 사람을 첫 자리에 모시는 정책을 수립한다. ④ 고용주, 피고용자, 지역공동체와 책임을 분담한다. ⑤ 세계 수준의 성취 수준을 유지하고 효과성을 제고한다. ⑥ 성공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서, 교육 기회 증진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협의를 유도하고,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한 계획의 일관성 및 조연을 강화하며, 유럽의 다른 국가 및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셋째, 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학습시대」의 구체적 목표는 블레어 총리의 「교육은 최선의 경제 정책이다」는 이념을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계획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고취시키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강조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되는 인적자본을 형성한다는 전략이란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주요 목표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고등교육을 확장해 2002년까지 50만 명의 청소년 및 성인들이 추가로 고등교육에 참여하게 한다.

② 무료 직접 학습정보 상담 서비스인 Learning Direct 등 직접적인 학습정보 제공과 총체적인 직업 관련 평생학습체제를 의미하는 산업대학(University for Industry)을 설치해 개인으로 하여금 학습이 용이하게 하고 기업체로 하여금 그



들의 요구를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체제는 첨단 기술공학을 활용해 누구나 직장, 학습센터, 지역 및 가정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이다.

③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저축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개인학습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④ 더 많은 젊은이(16세 이상)들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16~17세 청소년에게는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수준 2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부여한다.

⑤ 학습 기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무료 안내전화'를 운용한다.

⑥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연간 50만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 문해력 및 산술능력 교육, 실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⑦ 계속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 산업대학체제 등을 통해 학습의 기회를 확대한다.

⑧ 교육·고용부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국가 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⑨ 지역 단위의 통합적인 인력개발 계획을 수립·실시한다.

⑩ 국가 수준에서 달성해야 할 기술과 자격 기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포한다.

⑪ 산업현장에서의 기술 계발을 위해 기업, 피고용자, 노동조합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⑫ 계속교육 및 성인교육기관에 대한 장학지도 등을 통해 16세 이후 교수 학습의 질과 수준을 고양한다.

⑬ 이해가 용이하고, 학문적 교육과 직업훈련의 가치를 함께 존중하며, 고용주와 개인의 요구를 반영하고, 최고의 수준을 도모할 수 있는 자격기준 체제를 구축한다.

3. Learning to Succeed

협의를 거쳐 1999년 6월 16세 이후 학습을 위한 새로운 틀을 강조하는 「성공을 위한 학습」(Learning to succeed: a new framework for post-16 learning)이 의회에 제출된다. 장관 서문에 보면 녹서에서 백서로 변화된 배경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론 수렴 결과 이번 백서에서는 지적된 다음과 같은 점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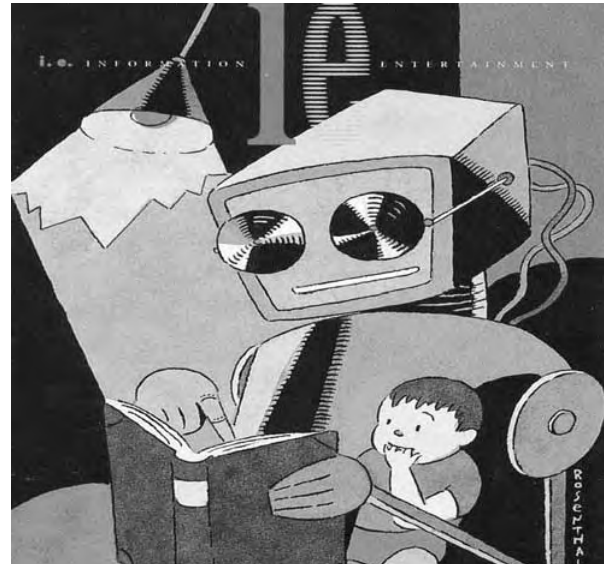
첫째, 국가, 지역, 지방 수준에서 조직 정비 등을 통한 과감한 변화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제도는 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으며, 너무 공급자 중심이다. 셋째, 현재의 재정지원과 전달 메커니즘 면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모순되는 면이 있다. 넷째, 따라서 16세 이후의 학습을 위한 국가 전략을 감독할 단일 기구의 설립, 필요한 초점을 제공할 재정지원, 수준을 끌어올릴 질에 대한 강조이다. 「학습시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 수준의 Learning and Skills Council의 설립 제안이다. 이와 함께 「학습시대」에서 강조하는 인적 자본 형성을 통한 경제적 경쟁력 제고 못지않게 기든스가 강조하는 '사회적 포용' (social inclusion)에 대한 강조이다. 과거 보수당 정부에 비해 노동당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적 경쟁력 제고와 함께 사회적 포용을 강조한다는 점이며, 경제적 경쟁력과 사회적 포용은 영국 평생학습정책의 양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간추려 본다.

먼저, 추구하는 사회상, 비전, 원리는 「학습시대」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지식경제와 함께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이란 사람들이 전체 사회와의 완전한 관계에서 차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대간 불이익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 시민사회와 결속력 있는 사회유지에 기여하는 평생학습을 좀 더 강조했다. 평생학습은 과거의 산업과 서비스로부터 미래의 지식정보경제로의 성공적 이행과 시민 사회 및 결속력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수단이 된다. 기든

스가 말하는 포용적인 사회(inclusive society)는 '포용으로서의 평등', '제한적인 능력 지배', '공적 공간(시민 자유주의의 쇠신)', '노동사회를 넘어서', '적극적인 복지', '사회투자 국가'이다. 「성공을 위한 학습」백서에 기든스의 사회적 포용이 진하게 배어 있다.

둘째, 원리는 「학습시대」의 것과 같이 '민인을 위한 학습 투자', '학습 참여 장애물 제거', '사람 우선', '고용주·고용원·지역사회와 책임 분담', '세계적 수준의 성취와 투자 가치 달성', '성공의 열쇠로서 협력'을 들고 있다. 변화를 위한 주요 추진 원칙은 ① 변화는 수월성과 참여를 증진해야 하며 ② 고용주들은 16세 이후 교육훈련 형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③ 평생학습체제는 학습자 주도적이어야 하며, 개인, 기업,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부응해야 하며, ④ 교육훈련기술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사람들은 양질의 자문과 상담을, 필요하면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며, ⑤ 각급 수준에서 책무성, 효율성, 성실성이 좀 더 증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주된 내용은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전담기구로서 The Learning and Skills Council 설립, 지역개발원(RDAs: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및 지역학습원의 설립과 같은 지역 평생학습 추진 조직 확충, 16세 이후 학습기회 조직 확충 정비, 질 개선, 성인학습자 지원, 기업의 학습참여 촉진 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The Learning and Skills Council 설립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셋째, 계속교육재정원(HEFC)과 훈련기업원(TEC)을 대체해 설립된 학습기술원은 2001년 4월부터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학습기술원은 16세 이후 교육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1999년의 백서 '성공을 위한 학습(Learning to Succeed)'의 제안에 따라 '학습기술법(Learning and Skills 2000)'을 제정함으로써 설립되었다. 학습기술원은 고등교육을 제외한 16세 이후의 모든 교육과 훈련에 관한 책임



을 지게 되므로, 계속교육, 직장기초훈련, 성인 및 지역사회 학습을 포함하며 2002년 이후부터는 6학년 학급(sixth form)도 관할하게 된다. 학습기술원은 중앙학습기술원과 47개의 지역학습기술원을 두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학습기술원의 위원이나 위원장의 40%가 기업이 출신으로 이루어진 기업 위주의 조직이다. 교육기술부장관은 학습기술원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의 지침을 매년 시달하며 예산을 배정한다. 학습기술원은 16세 후 교육조직, 기획 및 재정지원의 단순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초언어능력 및 수리 능력으로부터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국가 학습 및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수월성과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광범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평생학습정책의 제3의 길을 지향하며

「학습시대」와 「성공하기 위한 학습」을 살펴볼 때 노동당 정부는 어느 정도 제3의 길을 가려는 모습이 보인다.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 교육학 교수인



Andy Green의 유럽 평생학습정책 모델 분류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가 중심 평생교육정책 모델과 독일의 사회적 파트너십 정책 모델과 달리 영국은 시장 주도 평생교육정책 모델로 분류된다. 시장 주도 모델은 시장 주도, 정보기술에 의한 촉진, 수요자 주도 학습, 학습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특징이 있으나 저투자와 불평등을 촉발한다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 우리도 흔히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결정주의와 시장 주도 모델이 영국평생학습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로부터 노동당 정부의 변화와 제3의 길의 정책은 지금까지의 해석에 약간의 유보를 필요로 한다.

첫째, 국가, 시장, 시민사회간의 균형과 긴장 및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 어느 하나의 일방적 주도를 경계하는 면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이념적 측면에서 경제적 경쟁력 제고와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못지않게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새로운 정책적 가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학습의 지역화의 강조이다. 세계화는 지방화와 같이 굴러간다. 보수당 정부와는 달리 노동당은 국가주도 모델, 사회적 파트너십 모델, 시장주도 모델의 연속선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보다는 국가 수준, 지역 수준, 지방 수준 등 층위의 문제를 강조한다. 특히 평생학습의 시작과 끝인 지역을 강조하는데 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학습」에서 지역개발원(RDAs)과 지역학습기술원(Local Learning and Skills Councils)의 설치에서도 나타난다.

셋째, 노동당은 평생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과 토론에 고용주뿐만 아니라 노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용주와의 협상에 있어서 노조원 훈련기회 향상을 위한 'Bargaining for Skills' 를 제시했으며, 노조의 고용원 기술개발훈련 프로그램에의 참여 고취를 위해 '노조기금'이란 인센티브를 설치했으며, Learning and Skills Councils에 노조 참

여를 보장했다.

넷째, 평생학습정책에 대한 보수주의적 접근과 가장 극명하게 차별화가 되는 부분은 노동당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를 다룰 메커니즘으로서 평생학습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실업자, 여성, 소수민족, 파트타임 근로자 등 전통적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증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평생학습에 보다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 도구를 사용했다.

다섯째, 교육제공기관보다는 학습자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학습자와 지방교육기관 수준으로 분권화, 이양했다. 그러면서도 철저한 계획, 파트너십, 협력의 바탕 위에서 전개되도록 했다. 산업대학 설치, 전화 학습상담서비스 실시, 교육정보망 구축, 자격제도의 정비 및 정부의 자격취득자 증진 시책 등의 다양한 정책은 학습자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교육의 단위를 개인으로 여겨 개인에게 적합한 정보와 제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아직도 기관 단위에 머물러 있어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수합하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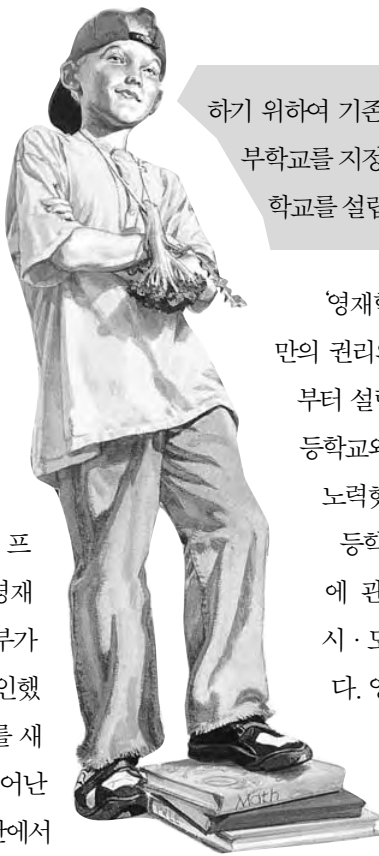
끝으로 노동당 정부의 평생학습에 대한 제3의 길이란 개념은 보수주의적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구 노동당의 국가 소유와 규제 사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생학습에 대한 제3의 길의 접근은 대체로 자원주의자로 남아 있으며, 시장에 상당한 힘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지방과 국가의 계획과 조직의 키에 의해 얼마든지 수정 보완될 수 있는 시장이다. 국가는 노를 직접 짓기보다는 키잡이 역할만을 할 뿐이다(the state should not row, but steer).<sup>(K2)</sup>

# 이것이 한국정부가 세운 최초의 영재학교다

조석희(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실장, seokhee@kedi.re.kr)

## 특수목적고만은 부족하다

2000년 1월 28일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중앙정부는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잠재력을 보이거나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기존의 국·공·사립 학교 중에서 영재학교로 지정 전환하거나, 새로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영재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영재교육의 영역은 다양하다. 2003년 개교한 영재학교는 부산과학고등학교로서 과학 분야에서 특별히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부산과학고등학교를 과학기술부가 부산교육청과 협약 아래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승인했다. 과학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를 새롭게 설립하는 이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만으로 뛰어난 잠재력을 계발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이다.



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영재학교’의 설립, 설치, 지정, 전환은 중앙정부만의 권리와 임무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1983년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과학고등학교 및 외국어 고등학교와는 구별되는 학교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속하는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 등은 그 설립, 설치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어, 시·도교육감이 설립 설치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영재학교의 설립, 설치는 국가가 권한을 갖는다.

부산과학고등학교는 국내 최초로 지정된 영재학교이다. 이 학교는 전국적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가장 자유로운 교육과정으로 공부한다. 관련 부처도 영재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분야와 관계된 전문가의 지도나 관련 고등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이 필요하며, 졸업 후에도 대학진학을 위한 진로지도, 나아가 고등교육을 마친 이후의 인력관리도 필요하다. 따라서, 영재학교는 전문

## 제2조 (정의)

4. “영재학교”라 함은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제6조 (영재학교의 설립·운영)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

분야 관계부처가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하면서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적절한 학교를 선정, 시·도교육감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의해 극소수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고등교육기관 또는 전문 연구기관 등과 학생 지도 및 진로관리를 위한 협약체결도 협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고등교육과 연결고리를 확보해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 없이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영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영재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자격 및 배치, 재정 확보, 그리고 대학과의 연계방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입학생 선발, 어느 과학고와 달리 전문가의 추천 있어야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재교육기관 내에 설치하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교과전문가, 영재교육전문가, 교육평가전문가, 교육심리전문가,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영재교육에 조예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다.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영재학교 입학생 선발에 필요한 원칙, 절차, 도구, 기준 등을 결정한다. 영재학교에서의 신입생 선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재학교의 신입생 선발전형에 응시하려면 첫째, 교장이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과학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께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관련 기관이나 영재교육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유는 교장의 추천이 대체로 성취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학교성적은 뛰어나지 않으나 영재학교에서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는 영재교육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선발 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재학교에 대한 지원자격은 중학교 재학생 및 졸업 예정자이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로 인하여 가능하다. 즉, 영재학교 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하면 중학교 재학생의 조기졸업을 인정해 주어 고등학교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부여한다. 초등학교 영재들의 경우,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원 등이 초등학생을 지도할 만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직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전형 방법은 다단계에 걸쳐 수학, 과학 분야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점이 특징이다. 다단계 평가는 추천—지필 검사—캠프를 활용한 평가로 진행된다. 매 단계별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달라지지만, 세 단계에 걸친 평가는 많이 유지되고 있다.

① 단계별 평가의 목적, 효율성, 타당성이 다르다.

각 단계별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목적

- 제1단계에서는 비용, 노력, 시간이 적게 드는 방법(추천 및 집단 지필 검사 등)을 활용하여 영재 선발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이미 선발 대상자들에게 과학 영재교육을 실시해 왔던 교사와 전문가의 추천을 중시한다.(예 : 과학영재교육센터 또는 교육청 영재반 담당 교사 또는 소장의 추천을 중시한다. 추천시에는 포트폴리오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 제2단계에서는 수학, 과학 분야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지필검사로 평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3단계에서는 비용, 노력, 시간이 많이 드는 방법(캠프에서의 전문가에 의한 개인 실험 실습 평가 등)을 활용하여 과학 영재 선발의 타당도를 높인다.

각 단계별로 주로 평가하는 인지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평가 : 기존의 기록, 자료 등을 토대로 학습 태





도, 능력, 학습 성과 평가

- 제2단계 평가 : 알고 있는 정보나 기능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 제3단계 평가 : 학생들이 전혀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되, 새로운 개념을 지도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터득하는 속도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측정한다.

② 뛰어난 사고력과 아이디어 산출능력을 중시한다.

영재성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 창의성을 평가한다.

창의성은 기존의 사교육이나 과외지도의 방법 등과 같이 짜여진 틀 속에서 학습해서는 개발될 수 없다. 오히려 오랜 기간에 걸친 학생 나름대로의 개별화된 독특한 사고와 경험이 많을수록 더 창의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창의성에 관한 평가는 문제의 발견이나 문제의 정의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정해진 답이 없고 객관화된 절대 기준이 없어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③ 지도자적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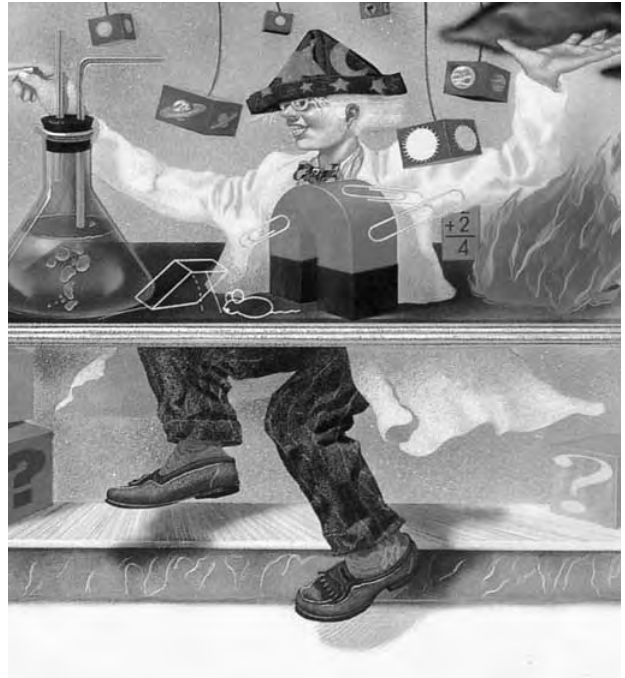
과학 영재는 과학 분야의 지식, 개념, 기술에서 앞설 뿐 아니라 과학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큰 학생을 선발하는 데 역점을 둔다.

과학 분야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학생 : 환경 운동, 과학 발명반 또는 과학 탐구반을 조직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학생 등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선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선발 대상자들의 수업 과정을 관찰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다른 학생들과의 업무를 조직하고, 협동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점검(Monitoring)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 과정을 수정, 보완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 교육과정, 대학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영재학교 교육과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융통성 있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구자역, 조석희, 김홍원, 강숙희, 장영숙, 임희준(2000)의 연구와 김명환, 조석희, 정현철, 구자역, 이상천, 최호성, 강호감, 박인호, 이화국(2001)의 연구에 기초를 두어 개발되었다. 여기에서 커다란 특징은 대학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는 점이다. 과학 영재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1. 교육과정의 편제

영재들이 미래의 창의적 과학자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학, 과학 영역의 비중이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보다 강조되었다. 본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고등학교와 달리 일반분야와 전공분야(수학, 과학분야)의 비율이 60대 115로 약 1대 2의 비율로 현행 과학고의 50% 이하에서 65%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선택과목의 수가 각 전공분야당 10과목으로 증가하여 모든 학생들이 개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교과를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교과 115학점은 필수교과 38학점, 선택교과 47학점, 자율연구 20학점, 위탁교육 총 10학점으로 구성되었다.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자율연구를 실시하긴

하나 졸업 학점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최소졸업학점제로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융통성과 학습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교과는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하고 선택과목의 폭을 넓힘으로써 영재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 자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이러한 필수/선택과목 및 최소졸업학점제를 통하여 학생들은 간학문적접근이 가능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 2. 미래 헌신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적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사회적 영역의 고른 발달을 강조했다. 영재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이 능력에만 집중한다면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영재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사회의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적 영역의 발달과 함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재들이 자신의 능력 계발에만 치중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 봉사활동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인문사회과학과 예술 분야의 학습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클럽 활동과 봉사활동을 각각 연간 40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 시간은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3.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창의적, 생산적 과학자로 키우는 전문적인 교육과정

미래의 창의적인 과학자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수학 및 과학 교과 학습 비중을 약 60~70%로 많이 하되, 총 졸업이수단위는 175학점으로 과학고등학교의 현행 216단위보다 적다. 실험·실습·실기, 탐구 학습에 많은 비중을 두는 점은 비슷하다.

영재교육과정은 전인교육을 위한 일반교과와 수학·과학 분야의 관심과 능력계발을 위한 다양한 전공교과로 운영하되, 이들은 다시 각각 필수 교과와 선택교과로 구성된다. 필수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개인적인 지적 관심과 흥미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기본선택은 수학, 과학, 정보과학에서 도구과목이나 과학소양을 기르는 내용과 활동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더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다. 심화선택 과목은 모든 전공교과를 통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필수과목들은 각 학문분야의 최소 이수 학점을 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했다. 창의성과 사고 계발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내용의 폭이 넓은 선택과목을 개설했다. 대학 교수 또는 연구소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사사교육이나 자율연구 등의 심화탐구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AP제도와 같은 속진 학습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첨단 과학 분야 (BT, NT, ST, IT)의 교과 과정을 통한 과학의 응용과 탐구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 • 자율연구와 사사 연구 강조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고급 사고기능을 사용하여 수준 높은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개별화 학습을 위한 자율연구와 관심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사사연구를 실시한다. 자율연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주제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심도 깊은 연구로 결과물은 논문형태로 제출하도록 하며 모든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의무사항으로 한다. 자율연구는 매주 1시간의 세미나를 포함한다. 세미나는 분야별로 이루어지며 각자의 연구를 매주 발표, 토의한다.

사사 연구는 R&E (Research and Education)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대학 교수들 중에서 영재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도 희망자들 중에서 지원을 받고, 학생들은 이 교수들 중에서 자신이 지도를 받기를 희망하는 교수를 선택함으로써 R&E팀이 구성된다. 한 팀에는 대학교수 1인, 영재학교 교사 1인, 학생 3~5명으로 구성하되, 학생의 선택을 우선으로 한다. 2003년도에는 36개 R&E팀이 운영되었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이루어진다.

#### • 국내외 전문기관에서의 위탁 교육

과학 영재들이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육하는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KAIST, 서울대, 포항공대, 정부출연연구소, 삼성종합 기술원, 국립 연구소, 창의연구 센터 등에서, 해외 기관으로는 미국의 일리노이 수·과학 고등학교, 러시아의 모스크바대학 부설 꼴모고르프 수·물리고등학교 등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외국의 영재학교와 교환학생 제도 등을 통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외국어 소통능력과 컴퓨터 소양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 성취도 평가

학생들의 성취도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평가하되, 성적 평가 방식은 되도록 필수 과목과 대학과 연계되는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평점제(A~D, F, W 등), 기타 선택 과목은 Pass/Fail제로 운영한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점수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들이 점수 위주로 학습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는 창의성의 최대 계발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수 학습의 결과를 교사와 학생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등의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4. 개별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영재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과학 중 한 영역에서만 뛰어난 학생도 입학한다는 점이다. 한 영역에서는 대단히 뛰어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매우 뛰어나거나, 보통이거나, 매우 처지는 학생들로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과학 영재학교에서의 학습 내용은 과학 분야의 경우 대학 2학년 정도 이상의 내용까지 다루게 되는데,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내용도 상당히 즐겁게 배우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학생들 간의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의 필수교과는 배치고사(Placement Test)를 실시하여 과목 수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로써 학생들의 현재 학습 상태를 진단하여 이미 학습이 완료된 분야는 더 높은 수준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 교육을 받도록 했다. 2003년도에는 총 9개 과목에 대한 배치고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면제를 받고 그 다음 수준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다.

학사지도 교사제를 두어 학사지도 교사 1인당 6명 학생들의 능력 수준, 흥미, 관심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수강과목 선택 및 학습 계획의 수립, 진로 선택, 개인상담 등에 대해 자문 및 지도한다. 또한 학생의 개인별 성적, 특성, 기타 활동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상급학교 진학시 활용한다.

과학 분야에서는 웹 기반의 멀티미디어형 전자교재로 고난도의 모의실험, 동영상 등을 제공하며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갖고 있다. 전자교재에는 첨단과학관에 설치된 첨단 실험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내용도 담고 있어 첨단과학관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상승작용 효과가 있기도 하다.

교사 자격증 없어도 전문성 인정되면 계약직 교사로

고등학교 급의 영재학교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가 영재학교의 성공에 가장 요구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각 교과 영역의 전문가와 교수 학습에서의 전문가가 균형있게 임용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전문적인 교원들도 지속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학교에 교장 및 교감 각 1인을 두며, 교장, 교감,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이 지도하도록 했다. 학생과 교사의 비율은 1대 10을 넘지 않도록 하

고,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각 1인씩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초·중등 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라도 특정 교과 분야의 전문성이나 영재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현재 과학 영재학교에는 교사 60명, KAIST에서 파견한 영재교육 교수 8명, 신진 연구원 8명, 원어민 교사 3명, 상담교사 1명, 사서 교사 1명 총 8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29명으로 36%에 해당된다. 2005년도까지는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을 50%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재학교의 교사들은 자체 연수, 학회 참석, 국내 연수, 해외 단기 연수,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에는 8월에 40시간에 걸친 해외 연수를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태국 등에서 실시했다. 이외에도 전공교과 교사와 비전공 교과 교사들간의 간학문적 연계성과 동질성을 공유하고 지식과 과학영재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전공 교과별 영재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자체 연수도 실시한다.

#### 영재 졸업생은 대학입시 준비 할 필요 없어야

영재들은 일반 학생보다 내용과 사고 과정, 산출물의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제로 평가해야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영재들은 창의성과 과제집착력까지 평가할 수 있는 방안과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이 공정하게 인정받고 평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영재학교 재학 중인 일반 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입시 전형에 맞추어 입시준비를 할 필요가 없게 해주어야 한다.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반영한 입학전형이 가능해야 한다. 2005년도 부터는 전문교과를 25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을 한다는 대학이 증가한다면, 영재학교 졸업생들의 창의성 계발이 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재학교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대학입학 특례는 영재학교 진학을 위한 과외 및 이들이 특정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창구로 영재학교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영재학교는 관련분야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이들의 대학진학 문제가 해결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대학전형의 기

본원적인 대학별 자율에 의한 입학전형 원칙 안에서 각 대학이 특별전형 방법을 도입해 영재학교 졸업생을 유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영재학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과학영재학교는 세계적인 수준의 여러 과학 영재학교의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과학고등학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과학 영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학생의 선발 방법은 이스라엘 과학 예술 영재학교에서 학생 선발시에 적용하는 방법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타당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도 획기적인데, 이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각각의 학생들의 특성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학생의 성취도 평가도 통과/미통과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점수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모할 정도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교육적인 공간을 마련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제도적인 것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운영해가거나, 지도를 받는 교장, 교감,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 및 나아가 학생, 학부모의 인식, 열정, 마음가짐이라고 본다. 물론 시스템이 너무 좋지 않으면, 열정과 의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잘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다.

매스컴에서나 모 기업 회장님이 역설하는 것과 같이 이 학교의 졸업생 1명이 10만,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헌신하는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학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학교의 성과를 조금씩 재촉하기보다는 먼 미래에 힐 큰 성과를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15]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부 게르트 뮐러(Geird Moller)

“독일교육의 문제점이 한국에는 없어서 무척 놀랐습니다.”

김창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소장, chkim@kedi.re.kr



독일은 통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계는 정책수립 및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통계를 기초로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OECD 교육통계는 독일 교육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작년에 발표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00)는 독일 교육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독일 초·중등 교육의 문제점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Q. 한국방문이 이번이 처음이신지요? 우선 한국에 대한 인상과 방문 소감은 어떠신지요?**

**A.**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에서만 접했지요. 그런데 며칠 서울에 머무르면서 느낀 점은 서울이 놀랄 정도로 큰데다가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거리가 무척 깨끗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주변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라는 점은 매우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친근하고 친절함 정도 제게는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Q. 독일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언제부터 OECD교육지표 관련 일을 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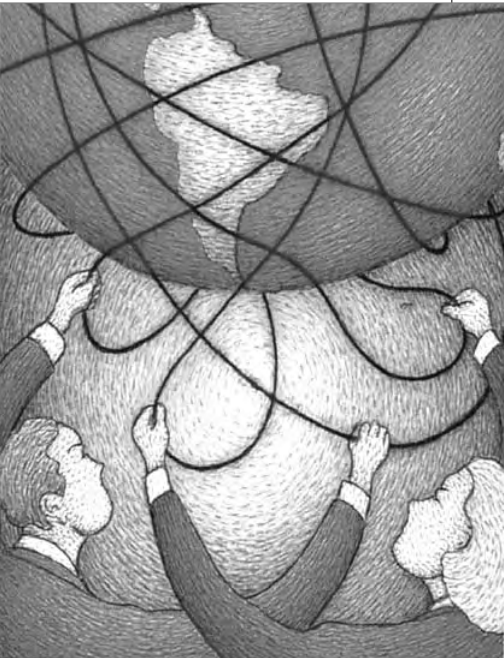
**A.** 저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교육통계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육통계과는 교육통계조사, 분석 및 예측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에 대한 정확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 분석에서는 특별히 다른 나라와 그리고 독일 내의 다른 주와의 비교 분석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계열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교사수, 학생수 등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 16개 주 교육부장관상설회의(KMK)에서 저를 OECD 교육통계 독일 대표로 선임하여, OECD와 관련되는 일을 5년 전부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독일 내 수학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무슨 일로 한국에 오게 되셨는지요?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A.** OECD 회원국들은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OECD 교육지표」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4 OECD 교육지표」 내용을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특별히 OECD 회원국들의 교수학습과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 박스로 알려진 교원들의 교수학습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활용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수업 만족도, 수업활동 시 어려운 점 등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교수학습과정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수업참관이나 참여관찰을 통하여 교수학습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Q. 유럽에서 독일 교육통계가 제일 우수하다고 하는데, 독일이 유럽 교육통계(지표)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독일은 통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계는 정책수립 및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연방 교육부에서도 교육통계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제가 속해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도 교육통계과가 설치되어 있고, 독일 16개 주 교육부의 연합체인 주 교육부상설장관회의(KMK)에서도 통계관련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통계를 기초로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학부모의 사회 계층적 차이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에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Q. 'OECD 교육통계(지표) 사업은 독일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OECD 사업 가운데 독일 국가교육정책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제시하여 주시지요.**

**A.** OECD 교육통계는 독일 교육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작년에 발표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00)는 독일 교육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동안 독일 교육은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은 독일 내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독일 초·중등 교육의 문제점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PISA 발표 이후 독일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중입니다. 교육문제가 독일 연방 정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고, 교육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독일 교육계의 최대 화두는 PISA와 그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 교육통계 및 지표 사업은 중요합니다.

**Q. 독일을 포함하여 OECD 회원국들은 한국교육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A.** OECD 회원국들은 한국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PISA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PISA에서 최고 그룹에 속하는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한국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학부모의 사회 계층적 차이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에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저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PISA와 함께 한국 교육제도 전반에 대하여 OECD 회원국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교육의 장점과 단점, 개선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A.** 저는 한국 교육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PISA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한국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적고, 학교별 차이나 학교 내 학생들간의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동질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PISA 조사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핀란드보다도 좋은 결과입니다. 한국 교육의 단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 식견이 부족하여 만족할 만한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앞으로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Q. OECD 교육사업(통계, 지표사업 포함)이 한국 교육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OECD 교육통계 사업은 모든 참여 국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만 자신의 상황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다른 나라와는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고,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는 정보의 상호교환과 비교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점은 한국 교육에도 해당됩니다. OECD 교육통계 사업은 독일에서와 같이 한국 교육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OECD 다른 회원국들과의 비교 지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관심이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Q. 한국이 OECD 교육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OECD는 한국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A.** 한국은 이미 OECD 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회의에 한국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님이 OECD 교육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OECD 교육통계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참여할수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OECD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Q. 한국과 독일은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교육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의 협력 가능성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독일은 그동안 인적 교류를 통하여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교육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좀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한국이 독일 교육에 대하여 아는 것만큼 한국 교육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면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는 그러한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엔도 아키오(遠藤昭雄)

## “2003년부터 일본고교는 자체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평준화 정책을 없앤 거죠”

윤종혁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장, jonghyeok@kedi.re.kr



기본적으로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의 해결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면,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양성 창조성을 강조하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나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상황으로 교육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고교 공동선발 방식의 학교군제(한국식 평준화 정책)를 철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이상 지속된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교육적인 노력, 즉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Q.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우선, 소장님의 한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상과 실제로 방문한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A.**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과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하는 등 양국간에 좋은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A.**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 사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계기로서 방문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일본의 국립교육정책연구소(NIER : 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olicy Research)는 일본의 문부과학성 소속 연구소로서 각종 교육정책의 기획 입안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충실한 조사 연구에 주력하고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성격 가지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배우고 이를 벤치마킹으로 하여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조직과 관련된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이번 방문의 커다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국립교육정책연구소(NIER)은 일본을 대표하는 교육연구소로서 초등 중등교육을 비롯하여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일본 국내에 있어서 발표된 연구 성과 등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국립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에 관한 실제적 기초적인 연구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1949년에 당시 일본 문부성의 관할 연구소로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소 자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즉 현(縣) 및 시정촌(市町村)의 교육연구소 연구센터, 그리고 민간 연구소를 포함하는 전국교육연구소연맹이라고 부르는 일본 국내의 교육연구기관 네트워크의 사무국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적으로는 학습지도요령(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의 목표에 준거한 평가(이른바, 절대평가)를 철저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교과, 각 학년, 각 관점별로 평가 기준을 책정하고 평가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1961년부터 참가하고 있는 국제교육달성도평가학회(IEA)의 수학 이과에 대한 학력조사 혹은 최근 OECD의 국제학업능력성취도(PISA) 조사 등 국제비교조사연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연구 성과는 국가 교육정책을 제언 자문하는 중앙교육심의회 등의 회의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 등을 통해 교육내용(커리큘럼)의 개선, 학습 지도법이나 교과서 개선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Q. 현재 한국은 사교육 문제, 고교입학제도, 교육계의 갈등 등 다양한 해결 과제가 있습**

원래 일본은 각 개인이 평생에 걸친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이후로는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일반 성인이 배우기 쉽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고도화 전문화하는 학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다. 일본의 교육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기본적으로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의 해결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면,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양성 창조성을 강조하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나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상황으로 교육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력저하론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배우는 것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대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어느 나라나 해당되는 과제입니다만, 교육정보화 혹은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본은 자녀 희소화 현상, 학교 등교 거부, 학생 따돌림, 학교폭력행위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등교육의 경우는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가 2004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경쟁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교육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일본이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Q. 이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일본의 고등학교, 특히 도쿄도 내의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균제 선발방식을 학교별 전형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해서 이와 같은 개혁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2003년부터 일본 도쿄도 내의 공립고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말하자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고교 공동선발 방식의 학교균제(한국식 평준화 정책)을 철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이상 지속된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교육적인 노력, 즉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입시 위주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기보다는 다양한 학생 능력을 평가하여 학생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지 교과 중심의 선발방식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형 방식을 학교마다 다양하게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보해 주는 장점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예측으로는 1960년대 식의 명문고 양성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국립고교 및 사립고교에 뒤처지고 있는 공립고교의 학력 향상 대책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일본의 평생학습과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A.** 평생교육은 1989년 당시 문부성 안에 평생학습정책국을 부처 내 중심 조직으로 설치하여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식으로 본격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각 개인이 평생에 걸친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이후로는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일반 성인이 배우기 쉽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고도화 전문화하는 학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전수학교 혹은 각종학교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일본 교육의 특색입니다. 우리 연구소도 평생학습사회 구축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개혁 흐름을 수용하여 2001년에 사회교육실천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 일본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미 지난 1970년대 산업화 과정 속에서 당시 문부성 이외에 산업통상성, 과학기술청 등 경제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실업교육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실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정부 부처의 공식 조직으로서 인적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사업 성과 및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상황을 돌아보고서 향후 일본 교육개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저의 작은 희망입니다.

**Q. 소장님이 일본의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수행했던 연구, 또는 현재 연구 중에 있는 테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제 약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연구자라기보다는 문부성 및 문부과학성의 행정관으로서 근무했기 때문에 특정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소 소장으로서 문부과학성과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국가 정책에 유용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저의 직책상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



# 명문이었던 일본 히비야 학교장은 고민이 많다

- 일본 도쿄도립 히비야고등학교의 학교개혁

김정래 / 윤종혁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jnkim77@kedi.re.kr / jonghyeok@kedi.re.kr



우리는 더 이상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 요구를 저버릴 수 없다. 우리 학교는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을 동시에 해야 하는 공립고교 이념을 지금도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용할 것이다.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 평준화 전에는 히비야고교도 명문이었다

일본 도쿄도의 중심 지역 요쓰야(四ッ谷) 한복판, 일본의 최대 여당인 자민당 당사 바로 아래 언덕에 옛 메이지 시대 전통 건물과 21세기형 신식 건물이 조화롭게 들어선 터전이 바로 히비야(日比谷)고등학교이다. 사실 히비야고등학교는 1878년에 개교하여 올해로 개교 125주년을 맞이하는 일본 최고의 명문 공립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패전 이전까지는 구제(舊制) 제1고등학교로서 일본 최고의 핵심 엘리트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945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신제(新制) 고등학교 체제로 변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도쿄대학 진학자 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았던 입시 명문고라고 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초반만 해도 히비야고등학교 재학생 중의 절반에 해당하는 195명이 도쿄대학에 진학하는 실력을 자랑했다. 말하자면, 1960년대 중반 일본 정부가 추진한 종합선발제(우리나라의 '고교 평준화 정책'에 해당됨)가 시행되기 전까지 일본에서 도쿄대학 진학자 수가 가장 많았던 학교였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정치·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측면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학교교육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미군정 당국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1948년에 도입한 미국식 고교체제, 즉 이른바, '신제(新制) 고교체제'가 구축되면서 일본의 공립고등학교는 사실상의 평준화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다만, 1951년부터 입학할 희망하는 공립고교의 수용정원보다 응시생이 많은 경우에 한해서 학교별 단독선발제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서 구제(舊制) 고등학교 체제 당시부터 전통을 이어 온 히비야고등학교 이외에도 니시(西)고교, 도야마(戸山)고교, 신주쿠(新宿)고교 등 일부 명문공립고교는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학교군

제도로 인해 히비야고교 등 명문공립고교도 사실상의 평준화 체제 속에서 다른 학교와 동일한 경쟁을 하게 되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립 및 사립고교의 경우, 학교별 단독선발제를 근간으로 하여 학생·학부모의 지지를 받는 신흥 입시명문고교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그대로 30년간 지속되어 1990년대 중반까지 학교군 제도가 기본 틀로 유지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비야고교도 학교군내 공동선발제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1960년대의 명성은 더 이상 실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인 논쟁거리였던 학생의 학교 선택권 문제가 교육개혁의 기본 과제로 제기된 것은 물론이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문부성은 1994년부터 공립학교의 학교별 단독선발제 및 학교별 선발고사 출제권 부여 등 학교별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에 따라서 마침내 2003년 도쿄도내 모든 공립고교는 학교군을 폐지하고, 학교별 단독 선발제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고교입학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히비야고등학교의 교육개혁은 바로 이런 시점에서 새롭게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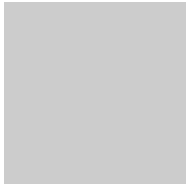
### 공립고교, 명문대 진학을 높여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2003년부터 도쿄도내 공립고교의 입시 제도가 학교별 단독선발제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이다. 이에 대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능력 및 교육 개성화, 특색화, 다양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사실상 교육전문가 및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인력을 대량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일본은 장기 불황 속에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후발국가인 중국, 한국 등의 추월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상·실천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공립고교의 개혁을 통한 인재 양성정책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도쿄도 공립고교의 개혁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히비야고등학교도 1967년 종합선발제가 실시된 이후로는 도쿄도의 다른 공립학교처럼 진학률이 침체된 상태였다. 그러나 2001년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히비야고교를 진학지도 중점학교로 선정하고, 대학 진학자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는 학교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히비야고등학교는 '난관교(難關校:진학이 상당히 어려운 국립명문대학으로서의 도쿄대학, 교토대학, 히토쓰바시대학 등 3개 학교)에 30명 이상 진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02년도에는 이들 난관학교에 13명을 진학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도쿄도립 고교 중에서 히비야고등학교를



포함한 4개 학교가 진학지도 중점교로 지정되어 활발한 학교운영을 하고 있으며, 추후로 3개 고교가 진학지도 중점 준비교로 지정되어 있다.<sup>1)</sup> 이와 관련하여 도쿄도 교육위원회에서 2001년에 도쿄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도, 진학지도 중점학교 양성에 대해 바람직한 현상(52.1%)이며, 전폭적으로 지지(28.0%)한다는 등 80% 이상의 응답자가 진학지도 중점학교를 지지하는 등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도내 공립고교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학지도 중점학교의 취지는 대체로 이른바 '난관교' 등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켜 사



립고교에 빼앗긴 예전의 지위를 되찾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도내 공립고교에 진학하는 학생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지 못한 계층의 자녀가 대다수라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진학지도 중점학교는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진학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의 진로 희망 및 적성에 따른 학습지도를 하는 등 주로 진학지도에 학교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첫째, 대학 진학을 의식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규 교과수업이 끝나는 시간 이후에 새로이 교과 수업 시간을 연장·편성하거나 수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0교시 수업을 실시하고, 방과 후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별도의 보충강습을 하고 있다. 둘째, 통상의 학급 정원보다 적은 수의 소수정예 수업을 별도로 실시하거나, 자신의 실력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성취도별(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 수업 원칙에 따라 일본의 고등학교는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학지도 중점학교는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라 수강할 수 있는 강습활동을 여러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여름방학과 같은 장기 휴업 중에도 학생의 희망에 따라 강습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넷째, 학교 전체적으로 학생 개인의 진로에 알맞은 진학지도를 위한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으로부터 수험 체험을 공유하거나, 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수업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진학지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학지도 중점학교는 진학지도에 중점을 두면서도 학교생활에서 인성교육 등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측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모든 학교가 학교행사 및 방과후 부활동, 학생회 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후배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간 관계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특별활동을 추진하는 등 수업활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진학지도 중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저녁 늦게까지 진학수험공부 및 인성교육 체험활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교육 등 별도의 입시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그렇다고 예전의 입시명문고를 무작정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히비야고등학교가 내세우고 있는 교육목표는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진리와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을 육성하여, 보편적이면서도 개성미가 풍부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학생은 이와 같은 목표 속에서 자율적 인격, 학습과 교양, 책임과 협조, 심신 건강, 문화와 평화 등 5대 지침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진학지도 중점학교로서 의욕과 활력이 넘치고 사명감 있는 교직원이 일치 협력하여 도쿄 도립고등학교를 대표하는 진학학교로 거듭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 속에서 히비야 고등학교는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교원 공모제를 강화하여 젊고 유능한 교사를 스카우트하는 등 진학지도 중점학교에 부합하는 교원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회, 국어, 영어 등의 주요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원을 다수 유치했으며, 이 외에도 현재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지도를 위한 연



수활동도 강화했다. 특히 진학지도 중점교로서의 교육활동을 시작한 이후, 히비야고교 교사들은 학교의 지원을 받아 명문 사설학원에서 교사 연수를 받고 있으며(2003년도는 국, 영, 수, 사회, 이과 등 5명의 교사가 연수 중), 명문 학원 원장 및 강사들의 평가를 통해 연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교사들이 학원에서 교수법 노하우를 배우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도 대폭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둘째, 히비야 고등학교는 도쿄도 교육위원회로부터 ‘학교플랜 연구학교’로 동시에 지정되어 고교 입학자 선발 및 대학 진학실적, 방과후 부활동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히비야 고등학교가 설정한 2002년도 달성 목표 및 실제 달성도를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히비야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수자로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서 진학지도 중점학교로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히비야 고등학교의 나가사와 교장은 “아직 난관(難關) 국립대학의 경우 진학 실적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진학지도 중점학교로 지정되어 그 이전보다는 많은 성과를 낸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한다. 특히, 학부모들의 경우도 와세다대학 및 게이오대학 등 명문 사립대학에 대한 진학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그런 한편으로 방과후 부활동(특별활동)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결코 히비야 고등학교가 예전과 같은 입시 명문고교를 무작정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히비야 고등학교는 현재 4년째 실시하고 있는 학교 단독 선발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학구제 철폐에 따른 입학자 선발 방식에도 새롭게 대응하고 있다. 히비야 고등학교는 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중학교 내신 및 특기적성활동, 인성검사, 학생의 자기PR 제도<sup>3)</sup> 등 다양한 추천제 전형과 지필고사 전형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미 2002년도의 경우, 추천전형 방식으로 입학정원의 40%를 선발했고, 나머지 60%의 입학정원은 지필고사 전형방식으로 선발했다. 히비야고등학교의 지필고사를 통한 학력선발 방식은 앞으로도 많은 홍보와 선발고사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60~70% 정도의 우수한 학생들을 계속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학교의 학력선발 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과 등 5개 과목에 대한 지필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은 학교 자체적으로 출제하고 있으며, 사회 및 이과 과목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도쿄도 교육위원회에서 출제한 공통문제를 차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넷째, 진학지도 중점학교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매일 7교시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이외에 정규 수업 전의 0교시 수업과 8·9교시 수업(특강)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수업은 1교시 45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하여 몇 개 과목은 8·9교시 특강 방식으로 90분 연속 수업(집중 강의)도 하고 있다. 또한 학업목표 도달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과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어, 수학 등의 교과목과 관련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교과 학습 이외에 방과후 부활동·학교행사 등을 효율적으로 양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모든 교직원이 일치 협력하여 조정하는 것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 학교운영연락협의회 등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학교평가를 통해 학력 향상 대

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3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장기 보충수업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해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하도록 하여 각 교과별 담당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적이 있다. 당시 히비야고교 1~3학년 학생 중 약 80% 이상이 방학 중 보충수업에 참가했으며, 특히 유명 학원강사를 초빙한 강좌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대단히 높은 평가와 만족도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제2학기부터는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학교 교사 및 유명학원 강사 등이 연합 체제로 운영하는 특강 및 집중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로 인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히비야 고등학교의 진학지도 중점학교 교육활동은 2004년도에 도쿄도 교육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해 중간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진학지도 중점학교로서의 역할을 계속 부여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 보아서는 히비야 고등학교에 대해 이미 학부모들이 계속적인 성적 향상과 인성교육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학교 운영·유지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 성과로 인해 도쿄도는 물론이고 일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공립고등학교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표 1〉 2002년도 히비야 고등학교의 진학지도 달성 실적

대목표	과세별목표	달성 목표	실제 달성 실적
대학진학실적의 향상	국공립대학 합격자 수	연인원 100명 이상	89명
	난관 국립대학 합격자 수	연인원 30명 이상	13명
	난관 사립대학 합격자 수	연인원 100명 이상	69명
	현역 합격진학률	졸업생의 60% 이상	51.7%
방과후 부활동 실적	방과후 부활동 참가율	재학생 90% 이상	92.5%
	부활동 성적(도쿄도내 대회)	8강 진출, 3개 부 이상	3개부
입학자 선발 (학구제 폐지이후 2003년도 실적)	추천선발 지원율	5.0 대 1	4.83 대 1
	학력선발 지원율	3.0 대 1	3.05 대 1
	학력선발 실질지원율	2.0 대 1	1.80 대 1

주: 난관 사립대학은 와세다대학, 게이오대학, 조지대학 등 3개 사립대학을 말함.

###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히비야 고교가 쫓아야 할 두마리 토끼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공립고등학교 체제는 도쿄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도쿄도가 전격적으로 기존의 학구제 선발방식을 폐지하고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학교별 전형 방식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일본에서 학구제 선발 방식을 유지하는 지역은 전체 46개 도도부현 중에서 7개 지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그 동안 사회적인 개혁 차원에서 문체시 하고 있었던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타개하고 국제화 사회에 동참하기 위한 인재 양성, 즉 국가적인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서 중요한 교육인재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정당성을 얻

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같은 학구제 폐지 방식에 대해 공산당, 일교조, 사회당 등이 반대하고 있으며, 자민당 및 공명당 등의 정치집단과 경제계 등은 이를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쿄도의 경우, 사립고교가 공립고교보다 많은 실정이면서도 교육경쟁력 자체에서도 사립고교가 앞서고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 분석을 통해 공립고등학교의 자체적인 개혁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학부모·학생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논리로 수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학원 강사가 필요에 따라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립고교가 예전의 입시 명문고 위치로 부활하거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히비야 고등학교의 나가사와 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우리는 더 이상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 요구를 저버릴 수 없다.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구상하는 진학지도 중점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쿄도의 경우 학력 향상과 관련하여 볼 때 결코 공립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학교는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을 동시에 해야 하는 공립고교 이념을 지금도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용할 것이다. (상부기관 제출용 교육과정과 실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다른) 이중 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립고교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매력이 되고 있다. 다만, 우리 공립고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강점은 가지고 있다. 지금 토요일마다 학원 강사가 우리 학교에 오는 이유도 교육적인 협력 차원 이외에 고객으로서의 고등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수 없는 현재의 학교교육개혁에 대한 위기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지금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다..” [20]

- 1) 도쿄도내 도립 진학지도 중점학교는 히비야고교, 니시(西)고교, 도야마(戸山)고교, 하치오우지(八王子)고교의 4개 고교이고, 도립 진학지도 중점준비교는 아오야마(青山)고교, 다치카와(立川)고교, 구니타치(國立)고교의 3개 고교이다.
- 2) 일본의 공립고교는 1960년대 이후 종합선발제 등 학군제 선발방식으로 인해 대학 진학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자율 편성 및 학교 운영활동이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가 새로운 입시명문고교로 부각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유계층의 자녀들이 이들 사립학교에 앞다투어 진학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도 가이세이(開成)고등학교, 아자부(麻布)고등학교 등 도쿄도내 명문 사립고교는 등록금이 공립고교의 2~3배 이상이 되어도 학생들이 몰리는 등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 3) 자기PR제도는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의 학습 계획 및 향후 학습 일정, 자신의 중학교 학습활동 및 각종 과외활동 등을 종합 소견 방식으로 진술하는 제도이다. 각 고등학교는 추천제 전형에서 학생의 중학교 내신 및 면접, 자기 PR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도쿄도의 경우, 각 공립고교마다 추천 및 학력선발 비율이 3대 7 또는 7 대 3으로서 학교별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새로운 인재선발방식, ‘고교대학연계전형’을 제안한다

–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과 대입전형 연계체제, ‘고교대학연계전형’을 제안한다

김현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hjkim@kedi.re.kr)

한국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입시위주의 암기 및 문제풀이식 교육이다. 이는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중국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참된 교육을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교육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재관을 변화시켜 기존의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인은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고등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여 활동위주의 살아 있는 지식기반형 참된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과 대입전형 연계 체제, ‘고교대학연계전형’을 제안한다.

## 한국학생들의 학업성취는 ‘가공된 학업성취’

OECD(2001)의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영역의 평균 순위는 6위, 2위 1위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위 5% 학생들만 대상으로 비교하면, 20위, 6위, 5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읽기와 수학에서의 학습흥미도와 자아개념도는 19위와 20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즉,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참된 의미의 학업성취(Authentic Achievement)’라기보다는 ‘가공된 학업성취(Manufactured Achievement)’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으며 어떠한 인재로 길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러한 현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은 아직도 여전히 암기식 공부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학생들의 교과 중심 사교육 참여비율(92.8%)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종합학원(46.0%)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위해서 교과서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반복 암기하고 문제 풀이 요령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양태가 ‘속보과외’로 드러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학교 내신준비를 위한 공부는 중학교 학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신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단순지식암기와 주입식 교육이 아닌 고차원적인 사고능력함양과 범교과, 범단원에 이르는 종합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단계 동안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기보다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비슷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한정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틀리지 않고 빨리 풀 수 있는 요령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여 이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 활동, 자기주도적인 프로젝트 수행, 독서활동, 현장체험, 봉사활동 등을 하기보다는 문제유형을 암기하여 수능 점수 1, 2 점을 높이하고자 무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학생들은 진정한 의미의 참된 교육성취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성, 덕성, 인성을 골고루 갖춘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적성과 흥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등학교 단계를 마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유를 상급학교의 '인재선발방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상급학교 선발방식이 어떤가에 따라 하급학교 방향 결정돼

각 학교급에서의 교육과정운영, 교수·학습 방법, 학습 행태, 학생 평가 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상급학교의 인재선발방식이다.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의 학생선발방식이,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의 학생선발방식이, 대학교의 경우 사회에서의 선발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전 학교급 단계에서의 인재양성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학군내 추천배정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학생과 '단위 학교 선발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에 임하는 양태가 다르다. 다양한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또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모두는 고등학교단계에서의 인재선발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행태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 대학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 또한 그 영향관계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상급학교의 인재선발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바로 이전 단계에서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될 수 있고 정반대로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기도 한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을 중점으로 살펴보자.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그리고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르면 고교등급제 금지, 기부금입학제 금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금지, 그리고 전형시기와 각 시기별 선발인원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대부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제도의 기본 틀은 대학이 어느 정도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각 대학의 설립이념, 학부별 특성에 따른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주요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과 논술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

지만 여전히 교과성적에 의한 획일적인 학생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체능 중심의 몇몇 전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학이 설립이념과 학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선발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학본부에서 컴퓨터로 학생들의 성적을 일괄 합산하여 점수에 의한 서열과 대학의 정원에 의해 기계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각 학부(과)로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교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하기보다는 컴퓨터라는 기계에 의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컴퓨터에 의한 점수합산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다보니 학생들은 자신들의 적성과 특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점수를 높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또한 내신성적 부풀리기로 학교 본래의 평가권을 포기하고 있다. 점수에 의한 무한 경쟁을 하는 왜곡된 입시경쟁구조에 의해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현 대입제도는 과거에 비하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점수에 의한 선발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특별전형 비율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학년도인 경우 36.6%의 학생들이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전형에서도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과 교과성적에 의한 학교장추천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전형에서도 성적, 특히 고등학교 교과내신 성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63.4%를 차지하고 있는 정시모집은 대부분 성적에 의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교내신 중에서도 교과성적만을 반영하는 대학이 22.7%이며 교과성적과 출결상황을 반영하는 대학이 48.9%이다. 이에 반해 교과성적 이외의 기타 다양한 교육활동 자료를 활용하는 대학은 28.2%에 그치고 있다. 기타 다양한 교육활동자료를 반영하는 대학이 적을 뿐 아니라 반영하더라도 그 반영비율이 전체의 10% 이내이며 이 또한 기본점수를 제외한 실질반영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시모집에서 수학능력시험성적의 반영비율이 70% 이상 되는 대학이 20.4%이며 60~69% 반영하는 대학이 42.3%, 50~59% 반영하는 대학이 23.4%에 이르고 있다. 50% 미만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전체의 13.9%에 불과하다. 대

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여러 전형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등학교 교과내신을 평어로 반영하는 대학은 전체의 44%이며 과목 또는 계열의 석차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전체의 53%에 이르고 있다. 평어를 반영할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로 인해 변별력이 없어 고등학교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고등학교 내신의 영향력을 거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평어를 반영할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학생들은 수능성적에 의한 전국 학생과의 무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차를 반영할 경우에는 학교내에서 내신성적 석차를 높이기 위한 동료간 비교육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정시에서의 전형방법을 살펴보면 모든 전형요소의 성적을 일괄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일괄합산모형을 택하는 대학이 전체의 89.7%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다단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7.4%에 불과하다.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일부 대학에서는 2단계 전형에서 수학능력시험성적을 다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형자료별(또는 경로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이처럼 현재의 대학 학생선발방식은 여전히 점수와 성적에 의한 획일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학부(과)별 특성화된 선발방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대학의 학문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활동과 참된 의미의 학업성취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점수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문제풀이 요령만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학의 인재선발방식은 대학의 특성화 유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미 있는 교육활동 선도, 학생 각자의 수월성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합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 새로운 인재선발방식, '고교대학연계전형'을 제안한다

대학의 학생선발방식은 더 이상 점수와 성적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의 설립이념과 지역사회의 요구, 전공영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다양화, 특성화되어야 한다. 대학, 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인재선발방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학은 다음의 세 가지(특별전형, 일반전형, 고교대학연계전형) 학생선발방식을 각 대학 및 전공의 특성에 따라



자유적으로 선택하여 다양화할 것을 제안한다. 자율에 의한 다양한 전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형별 선발인원과 선발시기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이 더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전형은 특수분야에서 우수한 소질과 적성을 갖춘 학생, 그리고 교육소의계층 학생을 위주로 선발하도록 한다. 일반전형은 고등학교의 교과성적, 국가수준의 시험성적, 그리고 학업명세서(Portfolio)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다. 현재 수학능력시험성적은 9등급과 점수제가 병존하고 있어 9등급제의 실효성이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점수제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일반전형에서 수능의 점수제는 폐지하고 1차 전형자료로만 활용하되 우선적으로는 27등급 정도의 세분화된 등급과 고교내신 성적 그리고 학생에 관한 다양한 질적 자료인 학업명세서를 활용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학생에 관한 질적 자료 활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국가수준의 시험 성적을 18등급 정도 세분화하고 고교내신성적과 학업명세서의 반영률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수준의 시험 성적은 9등급 정도로 나누고 고교내신성적과 충실한 학업명세서를 활용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현재의 일반전형은 시험성적에 의한 양적 선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양적 선발과 질적 선발의 병행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질적 선발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고교대학연계전형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참된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이를 이수한 학생들의 학업명세서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주요 선호대학에서 입학정원의 일정 부분(입학정원의 30%~40%정도)을 고교대학연계전형과정을 통해 선발한다면 고등학교 교육에 상당한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만약 문과대학에서 일정 부분의 입학정원을 독서 중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학생을, 특수교육, 사회복지,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봉사활동 중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학생을, 자연과학대학에서는 과학실험 중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학생을, 어학계열에서는 외국어 중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학생을, 사회계열에서는 토론 중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할 경우 고등학교들은 학교별 특성화된 중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이며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이외의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점차 학교별로 나름의 색깔을 띠게 되어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중점 교육프로그램은 각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현재 무늬만 살아있는 7차교육과정이 학교별로 다양한 꽃을 피워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점수향상을 위해 학원에 가기보다 각 학교의 중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교육 의존 경향이 감소할 것이며 참된 의미의 교육성취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군내 추첨 배정 지역에서는 학군을 광역화하고 학교별로 설정된 중점 교육프로그램을 보고 학생들은 학교를 복수지원하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학군내 추첨 배정 방식에 의한 학생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단위학교 선발제도를 택하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에 의한 학교별 서열화가 아닌 중점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학교별 특성화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충실히 신장시킬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교대학연계전형은 대학으로 하여금 학문영역별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등학교로 하여금 학교별 중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고등학교별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학생에게는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고교대학연계전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관한 자율권이 더 많이 부여되어 학교별 중점 교육프로그램을 마음껏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과정과 2년간의 선택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학교를 4년의 무상·의무 교육과정으로 하고 고등학교를 2년의 과정으로 구성하여 2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여 학교별로 다양한 중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별 중점 교육프로그램과 대학의 학문영역별 적격자 선발과정을 공정하고 믿을 만하게 연계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 정립과 교육활동내용을 인증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그리고 고교대학연계전형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별 중점 교육프로그램 속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한 다양한 교육내용들, 독서활동, 에세이 작성, 실험활동, 현장 체험, 봉사활동 등을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영역별 담당 교사들이 전인적인 관점에서 지성, 덕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추천하는 교과교사추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고등학교에서의 최소이수단위를 대학 전공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교사들의 교수방법 또한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재선발 과정에서 성적이외의 많은 부분들을 아직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인재선발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때에, 한국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참된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학생들이 답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70]



## 교육관련 세계의 연구

김은주 | 한국교육개발원 도서자료운영팀장, bonnyk@kedi.re.kr

### (노력과 학업성취)

미국 전역에서 차터스쿨(Chater School)들은 교육적인 대안으로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차터스쿨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워싱턴 D.C.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소개한다.

조사는 2001년 9월 12일과 1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학부모들 가운데 402명의 차터스쿨 학부모와 341명의 비차터스쿨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교사, 교장, 학교시설 및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여 그 결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 부모들의 차터스쿨에 대한 만족정도는 최근의 교육개혁에 대한 논란을 비추어 볼 때 중요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교육개혁센터(Center of Educational Reform)에 의하면 2003년 1월 현재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 2,700개의 차터스쿨에 68만 4,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워싱턴 D.C.내 차터스쿨의 학부모들은 차터스쿨을 전통적인 공립학교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터스쿨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대부분의 영역(학교의 전반적인 등급, 교사 등급, 시설등급, 학교장에 대한 등급)에 대해 다른 학부모들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차터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첫째, 선택의 규칙이 부모들의 만족을 높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택적 요구에 대한 선택(option-demand choice)이 좋은 선택 정책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명: Making the Grade : Comparing DC Charter Schools to Other DC Public Schools  
 연구자 : Mark Schneider, Jack Buckley  
 출처 :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vol.25 no.2 pp.203~215.  
 발표시기 : 2003.

### (학업성취와 전문성 개발)

위스콘신주 학생의 학업성취 보증(Student Achievement Guarantee in Education, 이하 SAGE)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3학년이 되기까지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개선하기 위한 주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이를 위해서 (1) 학급규모를 학생 1인당 교사의 비율을 15:1로 하고 (2) 학교와 지역

사회의 협력을 증대시키고 (3) 엄격한 학습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4) 전문적인 개발과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SAGE 프로그램의 4가지 주요 요소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소규모 학급에서 훈련과 엄격한 학습중심의 교육과정을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성공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리조나 주립대학교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SAGE에 대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의 질문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위스콘신 교사 기준이 2004년 7월 1일 발효하며 2005~2006학년도 말까지 새로운 교사의 자질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행을 시킬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조사했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확장시켜서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위스콘신주의 새로운 교사기준에 포함되는 전문성과 관련된 요소에 대해 공교육법이 SAGE 프로그램 적용학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법률적인 요구에 초점을 맞춘 SAGE 적용학교의 전문적인 개발 프로그램과 연구문헌 가운데 우수실천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 (연구결과)

- SAGE 적용학교는 법률제정에 있어서

전문성 개발과 평가요구의 수행에 복합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SAGE의 전문성 개발이 잘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 60%가 평균 이상으로 높게 응답했다.

- 위스콘신 주의 새로운 교사기준에 있어서 전문성 개발요소와 No Child Left Behind가 SAGE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교사의 자질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행을 시킬 것이며, 전문성 개발과 평가활동 실천에 관한 주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질 높은 교사와 효과적인 전문성 개발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식에서 법률 제정에 SAGE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학교들의 전문성 개발과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학업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

전문성 개발과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의 요구에 대해 SAGE 프로그램 안에 교육행정부와 학교장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그램의 전문성 개발과 평가에 대해 학교의 교사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교사의 참여가 공식화되어야 하고 그들 학교들이 주와 체결한 "학업성취보장"에 관한 계약이 개정되고 전문성 개발이 확장되는 시기에 보장되어야 한다.

초기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 되어야할 내용으로 교사들은 학급규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잘 훈련해야 하며, 전문성 개발 내용에 학업내용을 맞출 것을 보장해야 하며 교사들에게 방과후 혹은 수업 전에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명 :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Needs of Teachers in SAGE Classroom: Survey Results and Analysis  
 연구자 : Alex Molnar, Glen Wilson, Daniel Allen, Sandra Foster  
 연구기관 : Arizona State University, Education Policy Studies Laboratory  
 발표시기 : 2002. 9.

**〈사교육〉**

방과후 교육을 대체해오던 새로운 교육산업으로서의 사교육 시장이 학생은 물론 성인,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평가, 교육과정,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캐나다의 사교육시장 현실을 소개한 연구를 소개한다.

캐나다에서는 사교육시장이 규모 면에서의 성장은 물론이고 그 영역에 있어서도 급속한 확장을 보이고 있으며 학습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는 학습센터(Learning Center)가 전통적인 공교육의 방과후 수업을 대체하고 있다. 학습센터에서는 학교수업의 보충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월 25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의 교육비를 지급하면 개별화된 학습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시간짜리 수업을 8시간 받을 수 있고, 학생과 교사는 3대 1의 비율로 배정되어 수업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사교육산업은 성인을 위한 경영, 문해, 직업훈련, 가상수업, 통신 학습은 물론 어린이를 위한 조기 읽기 교육 등으로 그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 논문은 사교육의 두 가지 성장 형태 즉 과외와 수업과 새로운 사학(new private academie)에 대해 시험했다.

데이터는 사교육 조직에 관한 데이터와 해밀턴과 토론토에 있는 다양한 사이트를 방문하고, 운영자와 면담을 했다. 그 결과 부모들이나 교육자들이 사교육에 호감을 가지게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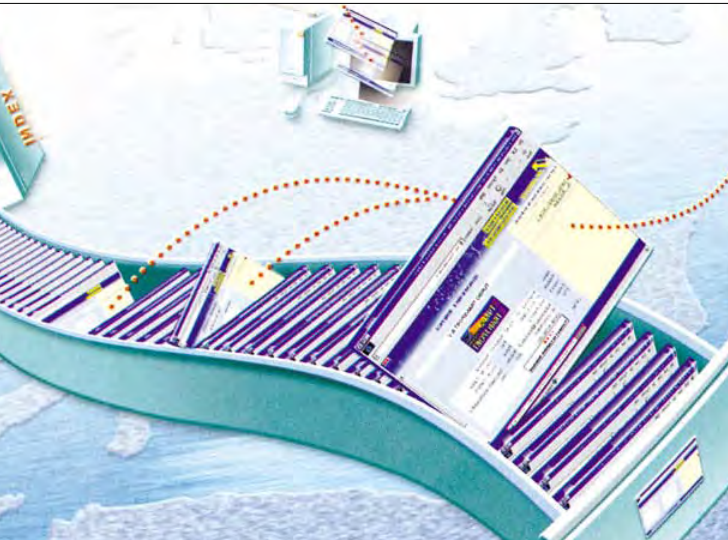
지난 5년 동안 온타리오 지역에서는 과외산업이 60%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성장도 모든 등록자의 6%에 달하는데 온타리오 지역의 경우 사립학교에 등록하는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40%의 성장을 보였고, 사립학교의 수도 대략 500개에서 760개로 증가했으며, 이들 학교들은 다양한 분야의 특기교육을 지원하여 특성화시키고 있다. 또, 부모들이 연간 12,000달러 정도의 학비를 지불하고도 자신의 자녀들이 보다 심화되고 교육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지적인 발달과 재능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규모의 교육에서는 독특한 재능과 개별 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서비스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의 대중화가 증가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로 공립학교들이 정서적인 분배에 휩싸여 있는 것을 들고 있다. 교사들은 사교육 부문을 보다 매력적인 고용처로 생각하게 된 반면 사립학교들은 저임금과 불리한 조건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사립학교들은 보다 소규모의 학급과 보다 개인적인 지도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자료명 : New Markets for Private Education in Canada  
 연구자 : Scott Davies, Linda Quirke, Janice Aurini  
 출처 : Education Canada vol. 42. no.3.  
 발표시기 :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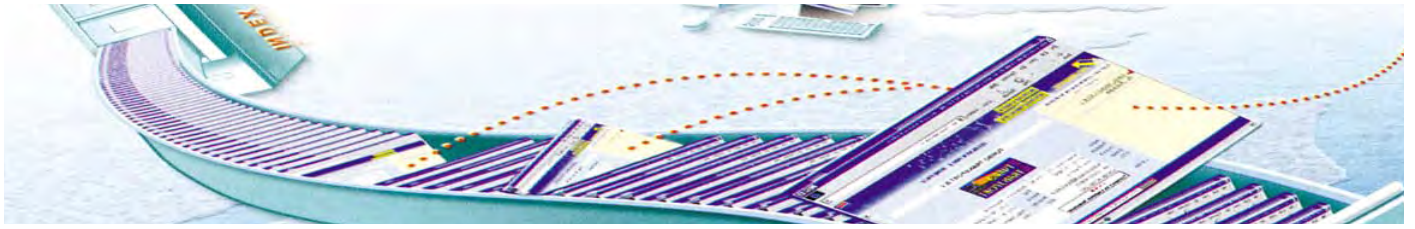




우리 교육은 격물치지(格物致知)로 되돌아가야 한다 | 장희익

# 주간 교육정책 포럼

이곳에 소개하는 칼럼은 최근 3개월간 ER&D Network 주간 교육정책포럼에 실렸던 글입니다. <http://www.eduforum.re.kr>에서 회원 가입(무료 회원제)을 하시면 최근 교육 현안에 관한 깊이있는 칼럼을 매주 이메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우리 교육은 격물치지(格物致知)로 되돌아가야 한다

장희익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zm530@hanmail.net



그 학문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목표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곧 '사물을 투철하게 살핌으로써 바른 앎에 이른다'는 것인데,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현대 과학의 학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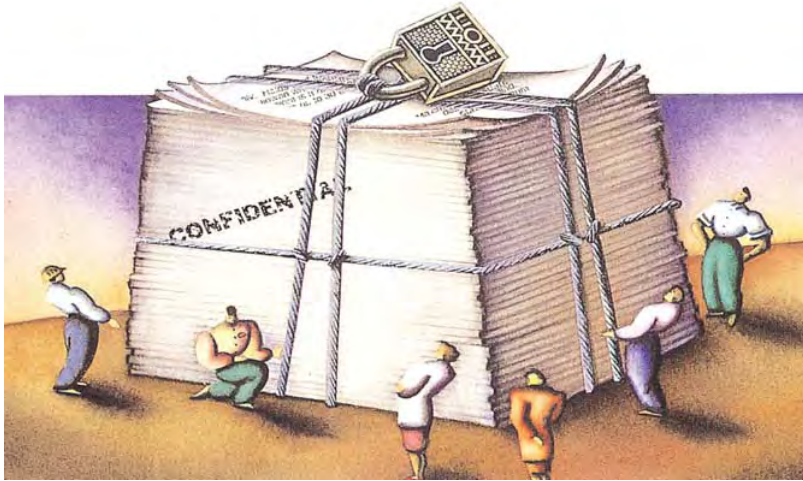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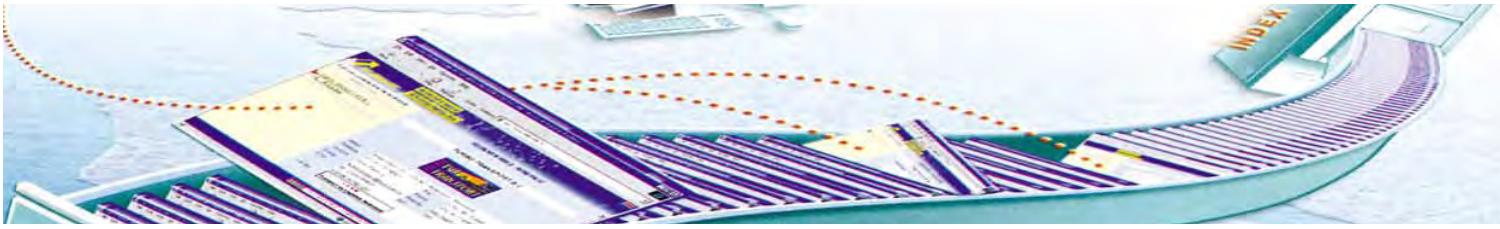
20세기가 낳은 저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약 50년 전인 1950년대 초에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 일이 있다. "백 년 후의 역사가들에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그는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은 아마도 서구 문명이 주변 세계에 부과한 충격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천년 후의 역사가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으로 매우 의외의 사실을 말하고 있다. 즉, 천년 후의 역사가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서구문명의 희생자들이 침략자들에게 부과한 놀랄 만한 충격'을 말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구문명에 대해 이러한 새 충격을 가할 가장 유력한 비서구 문명의 후보자로 인도 문명과 동아시아 문명을 들고 있다.

토인비의 이러한 직관이 어느 정도 적중할는지 우리가 지금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토인비가 이것을 말했던 5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아마 그의 의견에 동조할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20세기를 풍미하던 서구

문명은 점차 그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고, 어떤 형태이던 대안 문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널리 퍼지고 있다. 그리고 그 대안의 하나로 동아시아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어떤 점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가 되는 깊은 학문 전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학문을 숭상했으며, 그 학문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목표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곧 '사물을 투철하게 살핌으로써 바른 앎에 이른다'는 것인데,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현대 과학의 학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문명은 과학을 자생적으로 창출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격물치지를 명시적으로 외치지 않던 서구에서 과학을 이루어내었다. 그렇다고 하여 서구문명이 격물치지에 도달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은 격물(格物)은 했을지 모르나 치지(致知)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치지'라 함은 바른 앎의 길에까지 이르는 앎을 의미하는 것인데, 서구



의 과학은 사실 자체의 이해와 이 지식의 활용에는 능했지만 이 앎을 삶의 바른 길을 찾는 데까지 활용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격물치지를 그토록 외쳐 온 동아시아에서는 어째서 이에 이르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치지'라고 하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바른 '격물'을 해내지 못한 데 있는 듯하다. 바른 격물을 위해서는 '돌이 하나 떨어진다'고 하는 것과 같은 하찮은 현상에 대한 이해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인데, 그들은 이런 것이 치지에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깊이 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는 오로지 치지에 이르기만을 애쓰다보니 결국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치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공허한 논의만 무성하게 내놓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격물의 과정은 서구과학문명이 사실상 모범적으로 해

내었다. 그러나 그들은 치지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이 해낸 격물을 바탕으로 치지에 이르는 작업을 해내는 일이다. 이들은 부분적인 앎의 집합은 만들었지만 이를 전체적인 앎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수많은 전문 지식인은 길러내었지만 이를 한눈으로 내다볼 통찰력 있는 지식인을 길러내는 못했다. 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의 앎을 활용하는 기능인은 양성해 내었지만 자신의 앎을 통해 삶의 바른 길을 이끌어 내는 참된 선비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부분적인 앎의 집합을 전체적인 앎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며, 전문 지식만이 아닌 전체 지식을 한눈으로 내다볼 통찰력을 길러내는 일이며, 오로지 욕구 충족을 위해 앎을 활용하는 기능인이 아니라 자신의 앎을 통해 삶의 바른 길을 이끌어내는 참된 선비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는 서구문명을 단순히 추종하거나 또는 배격함으로써 되는 일

이 아니라 이들이 해낸 격물을 우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계승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치지에 이르는 새로운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 일은 학자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학자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작업에 힘써야 하겠지만 이를 해낼 수 있는 학자들을 양성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올바른 격물의 교육과 함께 치지의 교육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문명의 흐름 속에 뜻 있는 기여를 해오지 못했다. 우리는 격물치지라고 하는 바른 학문의 길, 바른 교육의 길을 일찍이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실천에 옮겨 바른 학문적 기여를 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서구가 해낸 격물에 힘입어 우리가 이를 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인류문명의 흐름이 또한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천 년 후의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제대로 된 격물치지의 교육을 통해서 빛어질 것이다. [20]

#### | 필자약력 |

장희익 교수는 서울대 문리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텍사스대 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녹색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다.